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7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김호석 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7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김호석 · 임혜숙 · 김종호 · 이지예 · Dong Zhanfeng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7**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인쇄일** 2018년 12월 24일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02-2269-991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5095-3 94320
978-89-322-5080-9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2018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18-67-07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호석 | 김종호<br>임혜숙<br>이지예 |
| 협동연구기관 | 중국환경계획원 | Dong Zhanfeng | |

##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차 례


**제1장 서 론 ·····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4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 17
   가. 연구방법 ····· 17
   나. 선행연구 ····· 20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 29**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 30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 37
   가. 지구적 이행체계 ····· 37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 40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 41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 58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 58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 70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 75**

1. 한국의 SDGs 이행 ····· 76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 76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 79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 94

2. 중국의 SDGs 이행 ····· 108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 108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 109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 119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 137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 137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 139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 145**
1. 개요 ····· 147
가. SDG 협력의 필요성 ····· 147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 155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 157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 157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 159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 167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 168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 173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 181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 181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 184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 194

**제5장 결 론 ····· 201**

참고문헌 ····· 206

부 록 ····· 215

# 표 차례


표 1-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4대 목표 및 14개 전략 ····· 15
표 1-2. SDGs 이행 정책방안 ····· 21
표 1-3.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 22
표 1-4. 목표별 지표의 Tier 구성 ····· 22
표 1-5. 차이나 리스크 대응방안 ····· 24
표 1-6. 한·중 공공외교 협력방안 ····· 26
표 1-7.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우리나라 주도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 ····· 27
표 1-8.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한·중 협력과제 ····· 28
표 2-1. 2030 의제 진행과정 ····· 30
표 2-2. 2030 의제의 후속조치 및 검토 기본 원칙 ····· 34
표 2-3. 목표, 세부목표, 지표 수 현황 ····· 36
표 2-4. 2018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국(46개국) ····· 40
표 2-5. EU의 SDG 모니터링: 관련 SDG 모니터링 체계와 비교 ····· 61
표 2-6. 노르딕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의 분야별 지표 ····· 71
표 3-1. 지속가능발전의 대내외 위협요인 ····· 81
표 3-2. SDGs 목표별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안) (2018.9.5. 발표자료) ····· 97
표 3-3. 중국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 ····· 128
표 3-4. 한국과 중국의 SDGs 이행체계 비교 ····· 143
표 4-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주요 내용 ····· 148
표 4-2. UN DESA의 SDGs 협력관계 유형 ····· 157
표 4-3. SDGs 목표별 한·중 협력관계 ····· 164
표 4-4. 유엔 기관의 SDGs 이행 노력 현황 ····· 167
표 4-5. 한국과 중국의 SDGs 달성도 비교 ····· 174

표 4-6. 한국의 비교우위 지표 ····· 177
표 4-7. 중국의 비교우위 지표 ····· 177
표 4-8. 양국 모두 진전이 필요한 지표 ····· 178
표 4-9.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지표 비교 ····· 187
표 4-10. 한·중·일 3국 정부 간 주요 협의체 ····· 197

# 그림 차례

그림 1-1. 2030 의제의 구성요소와 국가단위 이행과제 ····· 20
그림 2-1. 2030 의제의 구성 ····· 31
그림 2-2.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일정 ····· 38
그림 2-3. EU의 SDGs 진행사항 ····· 62
그림 2-4. 노르딕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 71
그림 2-5. 노르딕 SDG 프로그램의 구성과 이행관계자 ····· 72
그림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도 ····· 82
그림 3-2. K-SDGs 작성 3단계 ····· 95
그림 3-3. 다양한 지역적 범위의 SDGs 이행 검토 ····· 138
그림 4-1. 한·중 교역 동향 ····· 149
그림 4-2. 한국과 중국의 상위 수출·수입국 현황(2016년 기준) ····· 153
그림 4-4. 그림 4-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수출국(2016년 기준) ····· 154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5년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이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한 목표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 지구적 협력을 기본 이행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2030 의제” 이행은 ‘SDGs의 국가정책 반영’과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SDGs 달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 모두를 포함한다. 의제 채택에 참여한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에 의제 및 SDGs를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한 기술, 재정, 능력 형성 등과 관련된 자원 지원을 통해 지구적 차원의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매년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UN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SDGs를 반영하는 것과 별도로 17개 SDGs 및 169개 세부목표 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고유의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8년 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SDGs, 이하 K-SDGs) 수립 추진계획'[1]이 마련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현재(2018.10.) 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표 1-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4대 목표 및 14개 전략

| 목표 | 전략 |
|---|---|
| 1. 건강한 국토 환경 |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
| |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
| |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
| 2. 통합된 안심 사회 | 2.1. 사회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
| | 2.2. 지역 간 격차 해소 |
| |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 |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
| 3. 포용적 혁신 경제 |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 |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책 |
| |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 구축 |
| 4. 글로벌 책임 국가 |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
| |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 |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

1) 지속가능발전포털(2018.4.2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 http://ncsd.go.kr/app/board/publicNotice/view.do, 검색일: 2018.7.1.

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2030 의제”는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 계획’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협력’을 의제 이행의 기본 수단으로 제시한다.[2] 의제 이행의 책임과 권한은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에 있지만 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역단위의 ‘2030 의제’ 이행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 SDGs 달성을 위한 기여 측면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중국은 ‘2030 의제’가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촉진과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 주도 이니셔티브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제가 채택된 직후인 2016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의 중장기발전계획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에 ‘2030 의제’ 및 SDGs를 반영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은 SDGs 이행을 위한 중국의 국가 여건을 분석하고 17개 SDGs와 169개 세부목표에 따라 자국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대응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2) “*본 의제는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 …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업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2030 의제」 서언)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양국과 지역 전체 SDGs 이행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제안한다. 양국 SDGs 협력방안은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참고하여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된다.

##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 가. 연구방법

SDGs는 "2030 의제"의 한 부분이고 의제에는 그 이외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2030의제 이행'과 'SDGs 이행'은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 2030 의제 본문 역시 '이행'의 대상은 의제 자체이며, SDGs는 의제 이행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서술된다. 하지만 국내외 많은 문헌이 이 둘을 유사한 의미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고, SDGs의 높은 인지도 때문에 'SDGs 이행'이라는 표현에 익숙한 독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SDGs 이행'을 'SDGs 달성을 위한 2030의제 이행'의 의미로 해석하고, '2030 의제 이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의 개념은 유엔 DESA가 정의한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SDGs 이행 협력은 '2030 의제의 이행에 기여하는 정부, 국제기구,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다중 이해당사자 이니셔티브'로 정의된다.[3] 협력방안은

3) Stibbe et al.(2018).

SDGs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제안된다.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은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SDGs 이행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은 "현행 분야별 한·중 협력관계와 '2030 의제'의 원칙 및 SDGs와의 정합성", "한·중 양국의 SDGs 협력 수요", "동북아시아 소지역의 SDGs 이행을 위한 양국의 주도적 역할", 이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의제 채택 이전에 수립된 분야별 협력관계들은 각각 고유한 취지와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의제나 SDGs 이행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정책에 SDGs를 반영하는 것은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양국 협력관계를 조사하고 의제 및 SDGs와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2030의제 원칙 반영', '국가 SDGs와 국제관계의 수직적 정합성', '지구적 SDGs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유엔 DESA는 SDGs 협력을 '영향/교환', '결합/통합', '변환'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중에서 '영향/교환'과 '결합/통합' 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기회를 찾아 볼 수 있다.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협력 수요에 대해서는 SDGs 목표별 정책과제를 고찰하여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도출하였고, 중국의 협력 수요에 대해서는 협동연구기관인 중국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는 일관된 평가체계로 한·중 양국의 SDGs 달성 수준을 측정한 SDSN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도출하였다. 양국이 모두 성과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관계가 편익을 높여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2030 의제’는 국가단위의 검토와 함께 지역·소지역 차원의 SDGs 이행성과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소지역 차원의 성과 검토는 역내 국가 간 사례 공유, 국가 이행성과 상호 검토, 그리고 지역공동 목표설정 등을 통해 지역 전체의 SDGs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SDGs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방안은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에서의 SDGs 모니터링 체계와 이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할 소지역 이행협력체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30 의제’의 주요 내용과 지구적 이행체계를 살펴보고, 올해 HLPF에서 공유된 지구적 차원의 이행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EU의 사례를 통해 지역단위 SDGs 이행 협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SDGs 이행 현황을 ‘국가 정책에 SDGs 반영’과 ‘SDGs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두 나라의 SDGs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행체계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LPF에 제출되는 ‘자발적 국가검토’(VNR) 구조에 맞춰 두 나라의 이행체계를 비교하였다. 이행체계를 비교하고 협력수요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국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연구소와 워크숍을 실시하고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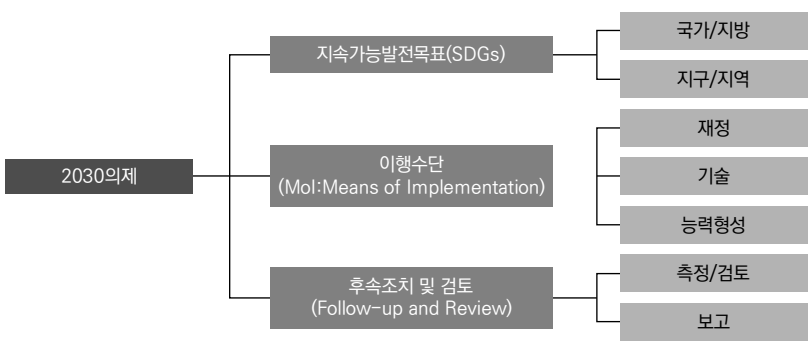
제4장에서는 한·중 SDGs 협력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유엔 DESA가 제시하는 SDGs 협력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노르딕 모델을 통해 소지역 차원의 SDGs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 나. 선행연구

### 1) 한국의 SDG 연구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김호석 외(2016)는 한국의 2030 의제 이행을 위하여 SDGs과 정책 연관성을 분석하고, 국가이행방안과 국제협력분야 이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30 의제는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는데, SDGs와 SDGs 달성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의제의 후속조치 및 검토(follow-up and review)이다. 2030 의제의 이행은 크게 '행정적 이행'과 '실질적 이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적인 이행은 지구적 의제 달성을 위하여 각 국가가 따르기로 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행수단 및 후속조치 검토가 포함된다. 실질적인 이행은 2030 의제에서 제안하고 권고하는 바에 따라 각 국가가 자국의 지속가능발전과 SDGs 수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30 의제의 구성요소와 국가단위 이행과제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2030 의제의 구성요소와 국가단위 이행과제




자료: 김호석 외(2016), p.7.

표 1-2 SDGs 이행 정책방안

| 정책방안 | 주요 내용 |
|---|---|
| 2030 의제 및 SDGs의 국가 이행 계획의 수립 | - SDGs의 정책 반영<br>•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br>• 분야별 정책에 반영<br>• 지방단위 정책에 반영<br>- 제도적 체계 구축: 국가 의제 이행의 총괄·조정 조직의 결정에서 출발<br>-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 SDGs 지표 개발 등<br>- 국제협력체계 구축: 국가단위 후속조치·검토 보완, 국가 간 연계목표 공동이행 등 |
|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체계 개편 | -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편: 현행 정책체계 유지 시, 체계 통합 시 방안<br>- SDGs를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방안: 현행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전략 유지 시,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체계 개편 시<br>-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br>• 국가 SDGs 지표체계 개발<br>•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개편: SDGs 반영 국가지표 개편, 국가 SDGs 지표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
| 2030 의제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 (현재)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도 함께 존재<br>•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위원회<br>- 2030 의제 대응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새로 수립할 경우 상응하는 법·제도 정비 필요 |

자료: 김호석 외(2016), pp.359-39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김석호 외(2016)는 SDGs의 국내이행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석호 외는 UN SDGs의 글로벌 지표의 의미·정의·측정방법·통계이용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SDGs 이행에 대한 구체적 실행범위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UN SDGs 241개 지표를 검토하여 세 층위의 Tier로 분류하였다.

표 1-3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 Tier 1 | | Tier 2 | | Tier 3 | |
|---|---|---|---|---|---|
| 방법론 및 데이터가 존재하여 기존 지표나 기존 통계 이용 작성 가능(글로벌 지표 수용가능) | | 방법론은 있으나 데이터 이용이 어렵거나 미승인통계 이용 가능(공통지표는 없으나 유사한 지표가 있는 경우) | | 국내 통계 체계 하에서는 작성이 불가한 경우(한국적 맥락의 특수지표가 필요한 경우) | |
| ① | 정부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그대로 제공가능한 경우 | ① | 현재 조사체계 내에서 조사대상 확장이나 신규항목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① | 메타데이터 부재나 메타데이터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② |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통계로 SDGs 산식에 따라 산출가능한 경우 | | | | |
| ③ | 유관 국제기구에는 한국의 해당 통계가 존재하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 ② | 새로운 조사체계 개발이 필요한 경우 | ② | 국제기구 소관이나 한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자료: 김석호 외(2016), p.12.

Tier 1은 현재의 국내 통계자료를 통하여 글로벌 지표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110개(46%)의 지표가 분류되었다. Tier 2는 유사 지표는 존재하지만 조사대상 확장·신규 항목 개발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조사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로서, 41개(17%)의 지표가 해당되었다. Tier 3은 UN의 SDGs 이행 점검기구인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제시한 지표 정의가 모호하거나 국내 통계에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하였으며, 90개(37%)의 지표가 Tier 3에 속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1-4 목표별 지표의 Tier 구성

| | Tier 1 | | Tier 2 | | Tier 3 | |
|---|---|---|---|---|---|---|
| | 지표개수 | 구성률(%) | 지표개수 | 구성률(%) | 지표개수 | 구성률(%) |
| SDG1 | 5 | 42 | - | - | 7 | 58 |
| SDG2 | 9 | 64 | 2 | 14 | 3 | 21 |
| SDG3 | 18 | 69.2 | 2 | 7.7 | 6 | 23.1 |
| SDG4 | 5 | 46 | 4 | 36 | 2 | 18 |
| SDG5 | 4 | 28.5 | 4 | 28.5 | 6 | 43 |
| SDG6 | 4 | 36 | 5 | 45 | 2 | 18 |

표 1-4 계속

| | Tier 1 | | Tier 2 | | Tier 3 | |
|---|---|---|---|---|---|---|
| | 지표개수 | 구성률(%) | 지표개수 | 구성률(%) | 지표개수 | 구성률(%) |
| SDG7 | 5 | 83 | - | - | 1 | 17 |
| SDG8 | 10 | 50 | 4 | 24 | 3 | 17 |
| SDG9 | 8 | 67 | - | - | 4 | 33 |
| SDG10 | 4 | 36 | 3 | 27 | 4 | 36 |
| SDG11 | 7 | 46 | 4 | 27 | 4 | 27 |
| SDG12 | 5 | 38 | - | - | 8 | 62 |
| SDG13 | 1 | 14 | - | - | 6 | 86 |
| SDG14 | 4 | 40 | - | - | 6 | 60 |
| SDG15 | 9 | 64 | 2 | 14 | 3 | 21 |
| SDG16 | 5 | 21 | 8 | 35 | 10 | 44 |
| SDG17 | 7 | 28 | 3 | 12 | 15 | 60 |

자료: 김석호 외(2016), pp.76-31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41개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무관리 카드를 작성하였으며, 정부가 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적 환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생산의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2) 분야별 한·중 협력방안 관련 연구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과 관련해서 경제·사회·외교·교통·한반도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문형 외(2017)는 차이나 리스크[4]의 원인과 사드 보복의 전개과정·한국 측의 업종별 피해를 분

석하여 향후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차이나 리스크의 원인과 사드 보복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업종별(관광산업, 유통업, 식품 및 화장품, 자동차, 배터리), 유형별 피해사례를 파악하였다. 또한 차이나 리스크의 대응전략 사례로서 일본의 'China+1'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나 리스크 대응 및 대중국 협력전략을 모색하였다. 위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차이나 리스크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5 차이나 리스크 대응방안

| 구분 | 대응방안 |
|---|---|
| 정부 차원: 차이나 리스크 관리와 중국시장 진출 지원 | - 기존 협력체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법적 보완수단 강구<br>- 재중 기업에 대한 리스크 정보 확산체제 수립과 법적 지원제도 강화<br>- 차이나 리스크 취약 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강화<br>-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해 리스크 감소와 시장진출을 동시에 도모<br>- 관광산업에서 질적 구조개선 시급<br>- 미래 산업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과 협력기제 구축<br>- 한·중 간 유사시 소통가능한 채널 개발과 지한파 차세대 리더 그룹 육성 |
| 기업 차원: 차이나 리스크 대응과 시장진출 확대 | - 기존 진출기업의 대응방안:<br>• 수출 및 투자 다변화 추진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에 주의<br>• 주재원의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적응력 강화<br>• 외자계 또는 중국계 기업과의 전략제휴 강화<br>• 현지 경영 시 중국법의 철저한 준수 및 노사분규 사전 예방<br>• CSR 활동 등을 강화해 중국 현지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를 받도록 노력 |
|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의 대응방안:<br>• 철저한 사전준비와 중국시장의 법·규제 이해 필요<br>• 기업진출 시 해당 업종의 인·허가권을 가진 주체의 파악 및 적절한 파트너 선정<br>• 리스크 축소를 위해 중국 정부 대응력이 강한 파트너 선정<br>•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태 활용<br>• 국영기업보다는 민영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유리<br>• 중국 정부와 시장이 원하는 제품으로 진출 |

자료: 이문형 외(2017), pp.66-83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4)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 외부 또는 내부적 요인(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등에 의해 한·중 간 경제협력이 위협을 받거나 한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을 말함(이문형 외, 2017, p.59).

강준영, 유정원(2016)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변동과 이러한 사회변동이 한·중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강준영, 유정원은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활동은 중국 헌법이 다양한 소유제의 병존을 용인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졌고, 개혁개방정책으로 추진된 경제개혁은 사회적 부를 창출하였으며, 다양한 소득에 기반한 사회계층을 양산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빈부격차·사회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중국 사회구조의 특성과 사회구성원의 인식·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를 통하여 ① 중국의 가정은 경제활동 및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초단위, ② 가구소득의 다원화 심화, ③ 가정의 재산 보유량이 가구소득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임, ④ 최저·최고 소득 가구는 중위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지속적인 중국 가계소득 분포·규모의 추이, ② 중국 사회의 보수화의 가속화, ③ 최고소득 가구에 맞춘 중국시장 진출전략과 한국시장 유인정책, ④ 민간 교류의 중요성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이근, 김홍규(2013)는 한·중·일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중국 및 한국-일본, 그리고 한·중·일의 공공외교 협력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공공외교 협력방안으로는 ① 쌍방향 공공외교 추진, ② 공동 비전 추구, ③ 양국 민간·공공 외교기관 간 교류 활성화 ④ 한국 한상(韓商)과 중국 한상(漢商) 네트워크 간 연결, ⑤ 외교부 차원의 대중외교 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공공외교 협력방안으로는 ① 한·중·일 공공외교 협력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3국 공통 다큐 제작 등), ② "21세기 아시아 시대비전" 공유, ③ 한·중·일 공동 외

교백서 출간, ④ 한·중·일 우수문화 교차선정 및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1-6 한·중 공공외교 협력방안

| 협력방안 | 주요 내용 |
|---|---|
| 쌍방향 공공외교 추진 | - 상호 간의 형상 및 이미지 개선, 소통 및 이해의 증진을 통해 서로 Win-Win하는 태도로 접근<br>• 공공외교가 일방적이기보다는 쌍방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
| 공동 비전 추구 | -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으로 중시하는 가치 혹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인식, 비전을 모색하는 노력 필요 |
| 양국 민간·공공 외교기관 간 교류 활성화 | - 양국 간 격에 걸맞은 다양한 반(半)관방 및 민간·공공 외교기관 간 교류 활성화<br>- 한·중 양국의 최고 공공외교 담당자 간의 정기적인 대화채널 구축과 양국 핵심사안에 대한 소통창구 마련.<br>- 한·중 갈등 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간 역할을 구분하여 범주화 필요(예를 들어, 사회문화 분야의 갈등 시 양국의 공공외교기관을 활용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정부 간 직접적인 충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br>- 각 분야별 현인(賢人) 대화체제의 구축<br>-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양국 매체 간의 대화체제 구축과 활성화 방안 |
| 한상(韓商)과 한상(漢商) 네트워크의 연결 | - 한국·중국 양자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세계 무대에서 상호 win-win 추구 |
| 외교부 차원의 대중(大衆)외교 강화 | - 중국 외교부는 차관급을 지도자로 빈곤 구제 영도소조(扶贫工作领导小组)를 설립하여 그 대중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br>• 외교부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외 정부·조직과 연계하여 낙후된 지방 지원 및 대외적 연계 지원<br>- 한국의 지방 대사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제한적임.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 국제 네트워크(타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등) 구축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외교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자료: 이근, 김흥규(2013), pp.87-8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성우 외(2014)는 한·중·일 삼국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과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5]의 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성우 외는 우리나라의 주도과제로서 ① 3국 간

5) 제1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2006.9,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동북아 물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12개 실천과제를 채택한 바 있음. 이후,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2012.7, 대한민국 부산)에서 12개 실천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부속서를 채택함(12개 실천과제: ①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해외 진출 시 문제점 개선, ② '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③ 삼국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④ 동북아 해상운송 및 물류정보 교환, ⑤ 물류장비 표준화 추진, ⑥ 항만 간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 ⑦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 조화 방안 모색, ⑧ 상호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등 협력채널 논의사항 공유, ⑩ 효율적이고 환경부하 적은 물류체계 구축, ⑪ 3PL사업 촉진 여건 조성, ⑫ ASEAN과 협력가능성 모색)(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7.16).

재활용 팔레트 공동사용 증진방안, ② 한·중·일 물류보안 협력방안, ③ 상호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④ ASEAN과 물류 분야 협력가능성 모색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논의가 필요한 신규 의제로 한·중·일 삼국 교통물류장관회의의 확대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전체의 물류 개선 및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중·일 삼국 교통물류장관회의에 러시아와 몽골을 참여하도록 하여 교통물류장관회의를 확대하고, 북극해항로 상용화와 같은 한·중·일 + 러 혹은 몽골이 참가할 수 있는 공통관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표 1-7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우리나라 주도 실천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

| 실천과제 | 세부 추진방안 |
|---|---|
| 삼국 간 재활용 팔레트 공동사용 증진방안 | - 팔레트 재사용을 위한 삼국 간 시범사업 추진<br>- 재사용 팔레트 표준화 및 인증제 추진<br>- 팔레트에 대한 무관세 적용 국제협약 체결 추진 |
| 한중일 물류보안 협력방안 | - 물류보안 전문인력 교육 협력 프로그램 제안<br>• 삼국 물류보안 교육 전문가 공동 세미나 개최: '물류보안'의 개념·범위 명확화, 삼국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 등<br>• 삼국 물류보안 전문인력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삼국 간 상이한 물류보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교환 및 발전을 위한 최적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상호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 - 삼국 재활용 팔레트 공동연구<br>-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공동연구<br>- 삼국 간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br>- 동북아 물류정보 교환을 위한 공동연구<br>- 물류보안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br>- 삼국의 항만 분야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
| ASEAN과 물류분야 협력 가능성 모색 | - ASEAN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논의<br>• 설문조사에 포함되는 협력사업: ① 재사용 팔레트 ② 물류 분야 투자 가이드북 ③ 물류정보 교환 ④ Eco-Shipping 추진 ⑤ ASEAN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교육 프로그램 |

자료: 이성우 외(20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황재호 외(2014)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재호 외(2014)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이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표 1-8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한·중 협력과제

| 협력과제 | 주요내용 |
|---|---|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중 협력 강화 | - 북핵문제의 존재로 동북아 국제관계 및 관련 국가들의 정책은 복잡해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 |
|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대응·억제에 협력 | - 한중 양국은 일본 우경화 문제에 대해 '동맹국처럼 협력'할 필요가 있음.<br>• 전략소통 및 정책 협조<br>• 일본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 진행 |
|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 -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남북한 사이에서 조화와 설득 역할을 발휘<br>- 한국은 적극적인 역할 담당 |

자료: 황재호 외(2014), pp.81-8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기존 선행연구들을 국가별로 SDGs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각 부문별 양국의 기존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모두 SDGs를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향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국의 협력관계를 SDGs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혹은 SDGs의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의 개발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특히 SDGs를 포함하는 2030 의제는 국가단위의 이행이 지역 및 소지역 협력을 통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및 소지역 단위의 협력은 해당 국가의 SDGs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목표나 주제별 협력이 아닌 양국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2030 의제 및 SDGs 맥락에서 제고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이하 2030 의제)의 추진 과정은 두 개의 축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2010년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및 사무총장이 MDGs를 대체하는 후속작업으로서 'Post-2015 의제' 구상을 촉구하며 시작되었다. 또 다른 축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후 20년이 되는 해인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Rio+20 회의는 유엔기구 강화방안을 담은 합의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고, 유엔 총회에 SDGs의 수립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 총회는 2013년 1월 공개작업반(OWG: Open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별 논의를 통해 17개 SDGs 가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2014년 12월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Secretary-General's Synthesis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로 이어졌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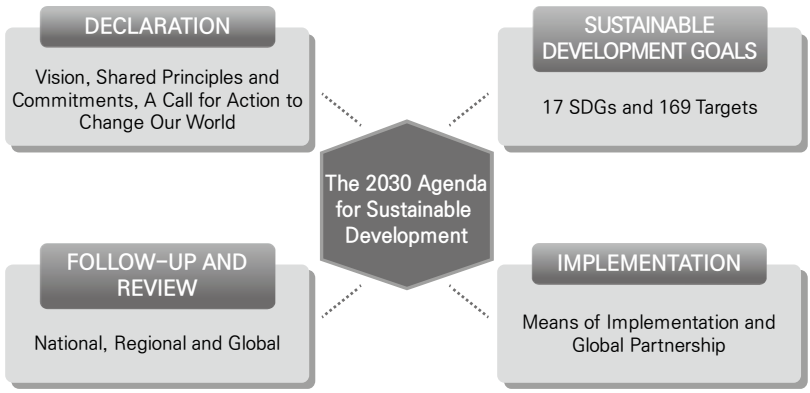
표 2-1 2030 의제 진행과정

| 구분 | 2010 | 2012 | 2013 | 2014 | | | | 2015 | |
|---|---|---|---|---|---|---|---|---|---|
| Post-2015 | Post 2015 개발의제 구상촉구 (65차 유엔 총회, 9월) | UN System Task Team 결성(1월) 새로운 의제 방향 설정 | 유엔사무총장보고서 (9월) Post-2015 구상발표 | | ⇨ | 유엔총회 OWG보고서 채택(9월) |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SDGs 필수 6대 요소 제안, 12월) | 제8차 정부 간 협상 (1~8월) |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 (9월) 2030 의제 결과문서 채택 |
| SDGs | | 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 6월) SDGs 수립합의 | 공개박업반 OWG 구성 (1월) | OWG보고서 17개 목표 169세부 목표 초안 제시(7월) | | | | | |

자료: 오정화, 박영실(2015), p.7.

이후 2015년 9월 개최된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mmi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SDGs가 포함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여기서 'Post-2015 의제'가 '2030 의제'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30 의제는 〈그림 2-1〉과 같이 ① 비전과 원칙을 담고 있는 선언문(Declaration), ②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③ 이행수단(MoIs: Means of Implementation), ④ 후속조치 및 검토(Follow-up and Review)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2030 의제의 구성




자료: UNDG(2015).

2030 의제는 향후 15년간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수행될 개발협력 의제로서, 다섯 가지 원칙인 인간(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기반으로 한다.[6] 2030 의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글로

벌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의제에 대해 세계적 공동의 행동과 노력에 서약함을 명시했다. 더불어 2030 의제 결과문서를 통해 공동의 비전 달성을 위해 목표들은 지구적,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정기적이며 표용적인 후속 조치 및 검토를 통해 평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의제 이행수단**(MoIs: Means of Implementation)

2030 의제는 단순히 새로운 글로벌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제시하여 필요한 재원과 이행 과정을 설명한다. 2030 의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중심의 활성화를 통해 SDGs의 이행을 강조한다. 다만 한 국가의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책임하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2030 의제가 말하는 이행수단이란 개별 국가의 'SDG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의미하며,[7] 의제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조달, 능력 배양, 기술 개발 및 이전 등이 해당된다.

특히 2030 의제는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 Addis Ababa Action Agenda)"을 이행하는 것이 SDGs와 세부목표(targets)의 달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제시된 7개 분야별 행동분야는 '국내 공공자원', '국내외 민간 기업 및 재원', '국제 개발협력',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 '시스템 이슈 대응',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 강화'이다.[8]

6) UN General Assembly(2015), p. 2.
7) 김호석 외(2016), p.134.
8) UN(2015).

더불어 2030 의제에서 개발에 필요한 재원 동원을 위해 국내 공공재원, 국내 민간재원, 국제 공공재원, 국제 민간재원과 같은 4가지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 **후속조치 및 검토(Follow up and Review)**

2030년까지 지구적, 국가적, 지역별, 이슈별 SDGs와 세부목표를 이행·평가하고 검토할 권한과 책임은 의제 채택을 한 참여국이다. 다만 2030 의제에 따르면 지구적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검토 과정은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주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HLPF는 유엔 총회 주관으로는 4년마다 정상회의로, 경제사회이사회 주관으로는 매년 각 국가의 장관을 소집한 회의로 개최된다.

이행성과의 검토와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AEG-SDGs)'이 개발한 지표(Indicators)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2016년 3월 IAEG-SDGs가 발표한 지표체계 합의 이후에도 지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지표개정안, 지표검토계획 등을 수행중이다. 이는 IAEG-SDGs가 개발한 지표 중 데이터 가용성과 측정방법론이 확보되지 않은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30 의제 이행수단으로 재원 조달, 능력 배양, 기술 개발 및 이전, 제도적 이슈를 담고 있는데, 데이터는 제도적 이슈 중 하나이다. 후속조치 및 검토와 관련하여 2030 의제는 지속가능발전 측정치를 개발하는 것이며, 그 과정 속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통계역량(Statistical

capacities)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30 의제 제74항에 제시된 후속조치 및 검토를 위한 9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표 2-2 참조). ① 국가의 책임 하에 자발적(voluntary)이고 국가 주도적(country-led)으로 이루어지되, ② 보편적(universal)이고 통합적(integrated)이며, ③ 장기적인 지향점을 유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측정한다.[9] 이 과정은 ④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open)이고 포괄적(inclusive)이며 참여적(participatory)이고 투명(transparent)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⑤ 인간 중심적이며, 인권과 성평등을 고려하여 특히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다.[10] 그리고 ⑥ 기존의 플랫폼과 과정을 활용하여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고, ⑦ 사용되는 정보와 자료는 엄격하고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⑧ 개도국의 국가 데이터 체계와 평가 프로그램 강화와 같은 역량구축 지원이 필요하고, ⑨ UN 체제와 기타 다자기관으로부터 국제적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고 한다.[11] 이와 같이 2030 의제는 9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SDGs 이행점검을 위한 다층적(multi-tiered)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2-2 2030 의제의 후속조치 및 검토 기본 원칙

| | |
|---|---|
| 1 | 모든 후속조치와 평가는 자발적이고 국가가 주도하며, 국가의 현실·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정책 자율성과 우선순위를 존중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의식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열쇠이므로, 글로벌 차원의 평가는 주로 국가의 공식 원천 데이터에 기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 평가의 결과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
| 2 | 이 과정은 이행수단을 포함한 보편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 연관된 특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저자 포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목표들의 이행 진전을 추적할 것이다. |

9) UN General Assembly(2015), p.36.
10) UN General Assembly(2015), p.36.
11) UN General Assembly(2015), p.36.

표 2-2 계속

| | |
|---|---|
| 3 | 이 과정은 보다 장기적인 지향점을 유지하고, 성과·도전·격차 및 중요한 성공요소를 파악하며, 국가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필요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동원에 기여하고, 해결책과 모범사례 파악을 지원하며, 국제개발체제의 조율과 효과성을 증진할 것이다. |
| 4 |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투명할 것이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보고를 지원할 것이다. |
| 5 | 이 과정은 인간 중심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인권을 존중하고 최빈곤층, 가장 취약한 계층 그리고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
| 6 | 이 과정은 가능한 경우, 기존의 플랫폼과 과정을 기초로 하여, 중복을 피하며, 국가의 상황·역량·수요와 우선과제에 부응할 것이다. 동 과정은 부상하는 문제와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감안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국가 행정부처나 기관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
| 7 | 이 과정은 철저하게 국가주도의 평가와 함께 고품질의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소득·성·연령·인종·민족·이주상태·장애와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된 자료에 입각한 증거에 기초할 것이다. |
| 8 | 이 과정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중소득국에서 국가 데이터 체계와 평가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한 역량구축 지원 개선을 필요로 할 것이다. |
| 9 | 이 과정은 UN 체제와 기타 다자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

자료: UN General Assembly(2015): 번역 내용은 박영실(2016), p.48에서 재인용.

### ○ 글로벌 지표의 수립

기존 MDGs의 이행과정에서 관련 데이터 한계로 인해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위 경험을 토대로 SDGs에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s) 수립 과정은 IAEG-SDGs 주도로 2015년 3월 구성되어 회원국의 포괄적이며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글로벌 지표는 지구적 차원의 의제 및 이행성과 검토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국가/지역 지표체계 기본 틀을 제공한다. 또한 '공식통계의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를 준수하며, 세분화(disaggregation)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2]

IAEG-SDGs는 2017년 3월 개최된 제48차 UN 통계위원회(UNCS: UN Statistical Commission)에 제출함으로서 232개 지표를 확정한 상태이다. 현재 글로벌 지표는 크게 3개의 티어(Tier)로 분류한다. Tier 1은 개념이 명확하며 통계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어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이며, Tier 2는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은 지표이고, Tier 3은 국제적으로 지표에 대한 합의된 방법론이 없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표를 의미한다.[13] 현재도 지속적으로 개별지표에 대한 지표 추가 및 보완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2030 의제 원칙 실현과 SDGs 달성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표 2-3 목표, 세부목표, 지표 수 현황

| 목표 | 세부목표 수 | 지표 수 | |
|---|---|---|---|
| | | 2016. 3 | 2017. 3 |
| 1. 빈곤 퇴치 | 7 | 12 | 14 |
| 2. 기아 종식 | 8 | 14 | 13 |
| 3. 건강과 웰빙 | 13 | 26 | 27 |
| 4. 양질의 교육 | 10 | 11 | 11 |
| 5. 성평등 | 9 | 14 | 14 |
| 6. 깨끗한 물과 위생 | 8 | 11 | 11 |
|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 5 | 6 | 6 |
|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12 | 17 | 17 |
|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 8 | 12 | 12 |
| 10. 불평등 완화 | 10 | 11 | 11 |
| 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 10 | 15 | 15 |
|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 11 | 13 | 13 |
| 13. 기후변화 대응 | 5 | 7 | 8 |

12) UNSD(2015).
13) UNSC(2016).

표 2-3 계속

| 목표 | 세부목표 수 | 지표 수 | |
|---|---|---|---|
| | | 2016. 3 | 2017. 3 |
| 14. 해양생태계 보존 | 10 | 10 | 10 |
| 15. 육상생태계 보호 | 12 | 14 | 14 |
| 16. 정의와 평화 | 12 | 23 | 23 |
| 17. 파트너십 | 19 | 25 | 25 |
| 합계 | 169 | 241 (중복 제외 시 230) | 244 (중복 제외 시 232) |

자료: 박영실 외(2018), p.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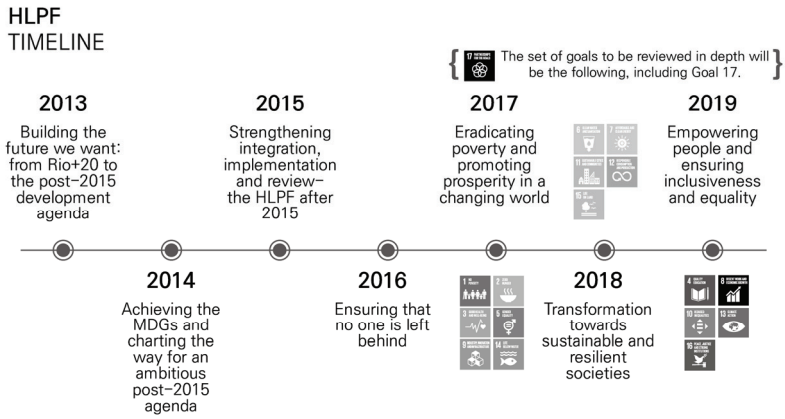
##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 가. 지구적 이행체계

UN은 2030 의제와 SDGs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구적 이행체제를 갖추어 역할을 수행한다. UN은 2030 의제와 SDGs의 후속조치·검토를 위해 HLPF를 그 플랫폼으로 삼고 있다.[14] 2012년 6월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의 결정으로 수립된 HLPF는 정기적으로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며, 향후 과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2018년 기준, 2030 의제가 채택된 이래 3년 동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합의 이행을 위해 SDGs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자발적으로 HLPF에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 속 전 세계 각국은 SDGs 이행을 위한 체제 정비, 정책 및 계획 마련 등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4)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will have a central role in overseeing a network of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at the global level, working coherently with the General Assembl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ther relevant organs and forums, in accordance with existing mandates" (2030 의제, 단락 82)

그림 2-2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일정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Platform(2017.7.19), "HLPF 2017", 검색일: 2018.7.7.

HLPF의 활동일정은 〈그림 2-2〉와 같다. 2013년 처음 개최된 HLPF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건설: Rio+20에서 Post-2015 개발의제까지(Building the future we want: from Rio+20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라는 주제하에 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 1월에 발표된 UN 사무총장 보고서(Secretary-General Report)에는 HLPF가 매년 다루어야 할 주제로 ① SDGs 진행 보고서, 국가 검토 및 지역 검토를 포함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 점검, ② 주제별 검토와 SDGs 하위 그룹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야별 진행 상황 검토, ③ SDG 이행수단에 해당하는 SDG17에 대한 검토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이행 과정, ④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장기적 관점 등을 제시했다.[15]

SDGs 도입 이후 처음 개최된 2016년 HLPF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15) KOICA(2017),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 과정 검토 II", p.2

않은 발전(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이라는 주제하에 향후 있을 HLPF에 대한 후속조치와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2016 HLPF에서 SDGs 채택 이후 최초로 자발적 국별 검토(VNR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DGs 이행 두 번째 해를 맞이한 2017년 HLPF는 SDGs 이행 과정 검토와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자리로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빈곤 퇴치와 번영의 증진(Eradicating poverty and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이라는 주제하에 SDGs 1, 2, 3, 5, 9, 14, 17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16] 2017 HLPF의 전반적인 의견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SDGs 이행에 뚜렷한 변화를 찾기는 어려우나 일부 국가에서 SDGs를 자국 전략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했으며 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더 나아가 자국 SDGs 이행을 위한 체제와 연계하여 지역 및 국제적 이행체계와 통합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17]

2018 HLPF는 SDGs 시행 3년차에 도입했으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이라는 주제하에 SDGs 6, 7, 11, 12, 13, 17에 대한 이행 현황을 검토했다.

2018 HLPF 기간 후반에는 VNRs 세션이 진행되어 총 46개국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이 공개되었다(표 2-4 참조). 이 중 7개 국가는 두 번째 VNRs를 공개하는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 토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VNR을 제출한 유일한 국가이다.

16) Sustainable Development Platform(2017.7.19), "HLPF 2017", 검색일: 2018.7.7.
17) 윤유리(2017).

UN 회원국은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적어도 2회 이상 VNR에 참여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VNRs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4 2018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국(46개국)

| |
|---|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바하마, 바레인, 베냉, 부탄, 카보베르데, 캐나다, 캄보디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기니, 헝가리,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키리바시,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리, 몰타, 멕시코, 나미비아, 니제르, 파라과이,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수단, 스위스, 토고,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베트남 (총 46개국) |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Platform(2017.7.19), "HLPF 2017", 검색일:2018.7.7.

2019년 HLPF는 '시민의 자력화와 포용성 및 평등 확보(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라는 주제하에 SDGs 4, 8, 10, 13, 16, 17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VNR은 4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18]

##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전술한 바와 같이, 지구 전체의 2030 의제 후속조치·검토는 UN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주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LP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19] 그리고 국가 혹은 (소)지역 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목

18) SDG Knowledge Hub(2018.8.2), "42 Countries to Present VNRs to HLPF 2019", 검색일: 2018.9.20.

19)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ill have the central role in overseeing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 (2030 의제, 제47항)

표 및 세부목표 이행과 평가는 회원국의 책임과 권한하에 이루어진다.

지구적 이행성과의 검토와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는 의제 채택과 함께 공식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 작업은 'SDG 지표에 관한 UN 기관 전문가그룹'(IAEG-SDGs: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이 맡았다. 첫 번째 '지구 SDG 지표체계'(global SDG indicator framework)는 2017년 3월, 제47차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에서 최종 합의되었고, 이후 2017년 6월 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20]

이와 함께 UN 산하 자문기구인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와 같은 지식 네트워크 조직은 SDGs 지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표 수립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UN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작성된 SDGs 이행경과와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우선 2016년 처음 발행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SD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는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GSDR는 4년마다 발행되며 현재 2019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 성별, 배경을 지닌 15명의 과학자 그룹을 조직하여 2016년 말부터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다.[21]

---

20) 지구 SDG 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UN 통계국의 IAES-SDGs 웹사이트 참고한다(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더불어 2016년 처음 발행된 'SDGs 진행보고서(Progress towards the SDGs)'는 기존의 'MDGs 보고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s)'와 같이 매년 발간되며, SDGs 17개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22] 다만 'SDGs 진행보고서'는 주로 정량적으로 평가가능한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를 제시한다.

2018년은 UN 총회에서 SDGs를 채택한 지 3년이 경과한 해로, 세계 각국은 국제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며, 주요 이행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HLPF 의장요약발표문(President's Summary)에 따르면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SDGs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나아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SDGs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빈국(LDCs), 내륙개발도상국(LLDCs) 및 군소도서개발국(SIDS)은 모든 목표에서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IDS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이행 속도로 볼 때 LDCs, LLDCs, SIDS 국가들은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3] 게다가 중간소득 국가(MICs: middle-income countries)는 국제사회가 SDGs를 통해 지향하는 바와 전혀 맞지 않게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불평등 확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ies)는 특히 SDG 12와 SDG 14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

21) SDG Knowledge Hub(2017.7.20), "Scientists Provide Update on GSDR 2019", 검색일: 2018.9.1.
22) UN ECOSOC(2018b), "Progress towards the SDGs".
23) UN ECOSOC(2018a), "President's Summary of the 2018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관련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기준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466억 달러로 전년(1,450억 달러) 대비 1.1% 증가했으나, 회원국의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평균은 0.31%로 전년 대비 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DA 규모가 크게 감소한 주요 국가들은 전년 대비 공여국 내 난민비용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 Goal 1: 빈곤 퇴치

기존의 MDGs는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퇴치에 초점을 두었다. 실제로 전 세계 절대빈곤 인구가 1990년 47%에서 2015년 14%로 감소했으나, 절대빈곤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모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24] 특히 SDG 1은 기존의 절대빈곤의 범주를 넘어서 상대적·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확대된 빈곤 목표와 문제를 고려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지구적 차원에서 SDG 1의 주요 이행동향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SDG 1 이행성과가 있었던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행이 더딘 현상이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으며, 대다수의 극빈곤층이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2016년 기준 세계 인구의 45%만이 사회보장

24) UN ECOSOC(2018b), p.3.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는 국가별·지역별로 다르다.[25] 전 세계 실업자의 22%만이 실업수당을 받고, 출산하는 여성의 41%가 출산 후 현금혜택을 받으며, 중증 장애인의 28%가 장애부금을 받고, 어린이의 35%가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장받는다.[26] 또한 재난·재해 위험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커지고, 재해피해 면적은 감소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난·재해 위험은 저소득국가, 군소도서 개발국에 집중되어 있다.

○ Goal 2: 기아 종식

SDG 2는 기아 문제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2017년 상태로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7] FAO의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 있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9.3%로 조사되었다.[28] 특히 기아 종식,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농업은 다른 SDG 목표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식량, 환경, 물과 위생, 기후변화, 사회 정의 등과 연결되어 있다. 식량 안보 보장의 경우 기후변화, 분쟁, 공정한 토지 이용의 부재 등이 장애물로 언급되었다. 더불어 현재 왜소 성장률(stunting rate)은 2000년 33%에서 2016년 23%로 감소했으나, 이 중 4분의 3은 남아시아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29]

25) UN ECOSOC(2018b), p.4.
26) UN ECOSOC(2018b), p.4.
27) UN ECOSOC(2018b), p.4.
28) UN ECOSOC(2018b), p.4.

더불어 식량 문제를 시스템 문제로 접근하여 식량 생산과 소비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0]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영양 부족 현실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는다. 이에 따라 식량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포용적 정책과 인권 기반 접근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Goal 3: 건강과 웰빙

SDG 3은 전 연령층의 건강 보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권 기반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건강 영역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조기사망과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삶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MDGs의 경우 목표 4(아동사망 감소), 목표 5(산모건강 증진)를 달성하지 못했고, 여전히 개도국의 여성과 아동이 고통받고 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은 10만 명당 216명으로, 사망자 중 3분의 2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주하였다.[31]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산모사망률을 매년 7.5% 감소시켜야 SDG 3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32]

영아사망률의 경우 2015년 기준 1,000명당 43명으로, 2000년 대비 44% 감소했으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1,000명당 84명으로 사망률이 높다.[33] 신생아사망률은 2000년 출생 1,000명당 31

29) UN ECOSOC(2018b), p.4
30) UN ECOSOC(2018b), p.5
31) UN ECOSOC(2018b), p.5
32) UN ECOSOC(2018b), p.5
33) UN ECOSOC(2018b), p.5

명에서 2016년 1,000명당 19명으로, 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4] 다만 2016년 기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의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28명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 Goal 4: 양질의 교육

SDG 4는 기회 보장의 범위를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 수평적 영역 측면에서의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포함함으로써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교육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성과를 강조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SDG 4 이행 진전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별, 도시·농촌 지역, 기타 등의 차원에서 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아 및 초등 교육의 진학률은 2010년 63%에서 2016년 70%로 증가하였으나 국가 및 지역 간에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35]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유아 및 초등 교육 진학률은 41%이고, 북아메리카와 서아시아도 52%로 낮다.[36]

중등교육과 관련된 세부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약 58%가 문해 및 산술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37] 이는 청소년의 3분의 2가 학교에 출석하

34) UN ECOSOC(2018b), p.5
35) UN ECOSOC(2018b), p.8.
36) UN ECOSOC(2018b), p.8.
37) UN ECOSOC(2018b), p.8.

지 못하거나 기초교육이 부족하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38]

더불어 최빈국은 교육기회 박탈, 열악한 교육여건과 동시에 교육 인프라 구축에 큰 어려움이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최빈국에 분포하는 초등학교 중 34%만이 전력시설을 보유중이며, 기본 손씻기 인프라에 접근가능한 초등학교도 40% 미만으로 나타났다.[39]

○ Goal 5: 성평등

기존 MDGs의 성평등 관련 목표는 모성보건, 성평등을 반영했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무보수 노동, 여성인권 등과 관련된 이슈와 구조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SDG 5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전환을 위한 여러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다루고 있는 SDG 5의 이행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일부 차별이 법적·정책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폭력, 조혼, 가사 부담, 의사결정 과정 배제 등과 같이 여러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56개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15~19세 청소년 남녀 5명 중 1명은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40] 반면 전 세계적으로 아동 결혼과 조혼 및 강제 결혼 관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남아시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의 아동 결혼 및 조혼이 2000년 이후 40% 감소했다.[41] 여성 할

38) UN ECOSOC(2018b), p.8.
39) UN ECOSOC(2018b), p.8.
40) UN ECOSOC(2018b), p.9

례 경우 일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일부 30개 국가에서 행해진다. 이 지역에서 2000년에는 두 명 중 한 명에게 여성 할례가 행해졌다면 2017년은 세 명 중 한 명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SDG 5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북경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와 같은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전 세계 수많은 인구는 여전히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기준 안전한 식수공급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52억 명이며, 8억 4,400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인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42] 최빈국의 경우 인구의 27%만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43] 이에 SDG 6은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련된 목표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수와 개선된 위생시설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하여 수질개선, 통합수자원관리(IWRM), 수생태계 보호 등과 같은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물과 위생에 관한 'UN 물과 위생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 on Water and Sanitation)'는 현재의 이행속도로는 세계가 SDG 6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44] 이에 UN은 각 정부가 가별 현실, 역량,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SDG 6 이행을 위한 목표를 재선정해야 한

41) UN ECOSOC(2018b), p.9
42) UN ECOSOC(2018a), p.2
43) UN ECOSOC(2018a), p.2
44) UN(2018b), p.12.

다고 권장했다.[45] 더불어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물과 관련된 '식수 공급과 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프로그램, 농업농수, 홍수 예방 등에 쓰이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120억 달러에서 2017년 9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46] 또한 2017년 기준 80%가 넘는 국가에서 WASH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재원이 불충분하다고 전망했다.[47]

○ Goal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HLPF Presidents summary(2018)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의 SDG 7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률은 더딘 상황이나 2030년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SDG 7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전력 소비량은 78%에서 87%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약 10억 명의 인구는 전력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48]

가스, 전기와 같은 깨끗한 연료와 기술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는 2016년에는 59%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0년 이래로 약 10%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다.[49] 다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

45) UN(2018b), p.12.
46) UN(2018b), p.12.
47) UN ECOSOC(2018b), p.13.
48) UN ECOSOC(2018a), p.3.
49) UN ECOSOC(2018b), p.13.

의 40%에 해당하는 약 30억 명이 여전히 고체연료(나무, 석탄 등)와 열악한 요리 환경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Household Air Pollution)으로 연간 400만 명이 사망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이 SDG 7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6%의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가 개선되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3~6배에 달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50]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규제지표(RISE: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표면적인 수준에서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 효율 분야 정책 추진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51] 대부분의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9%에 불과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세부목표 7.3인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두 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2.7%씩 향상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52] 특히 2018 HLPF 참석국은 유엔 체제에서 에너지와 SDG를 위한 정부 간 포럼을 설립하여 다자간기구와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0) 기경석(2017), p.8.
51) The World Bank(2017.1.1), "RISE –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검색일: 2018.7.5.
52) The World Bank(2017.1.1), "RISE –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검색일: 2018.7.5.

○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8은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매개고리로 하여 소득에만 집착하지 않고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세계적 차원의 SDG 8의 이행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Labour productivity)은 증가하고 실업률을 감소했다. 2016년 기준 세계 1인당 GDP는 1.3% 증가했는데, 2010-2016년 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인 1.7%에도 미치지 못했다.[53] 한편 최빈국의 경우 1인당 GDP는 2005-2009년 5.7%에서 2010-2016년 2.3%로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54] 더불어 2016년 기준 전 세계 근로자의 61%가 비공식 고용에 해당하며,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도 51%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 중이다.[55]

○ Goal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SDG 9는 인프라 및 산업화, 혁신 관련 8개 세부목표와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 9는 포용적인 인프라 접근성 강화, 산업화 측면에서는 제조업 향상, 소규모 기업 발전, 친환경적 산업화를 강조한다.

더불어 제조업이 경제 성장, 고용, 사회 안정의 주요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상품이 산업경제를 주도하며, 선진국 경우 제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10%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56] 이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

53) UN ECOSOC(2018b), p.11.
54) UN ECOSOC(2018b), p.11
55) UN ECOSOC(2018b), p.11
56) UN ECOSOC(2018b), p.13

의 지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연구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혁신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Goal 10: 불평등 완화

SDG 10은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관련 10개 세부목표와 11개 지표를 선정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세계 전체 재산의 절반은 상위 1% 인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 소득의 절반은 상위 8% 인구가 벌어들인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57]

지구적 SDG 10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내의 소득격차가 줄어들면 소득분배의 최하위계층에 속하는 소득은 최상층 소득계층보다 가속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과 2016년 사이 통계에 따르면 94개국 중 60개국에서 소득 하위 40%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보다 빠르게 증가했다.[58] 소득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UN ECOSOC(2018)는 국내 불평등 감소를 위해 소득 불평등 완화, 모든 취약계층의 포용성, 차별 철폐를 위한 법, 제도, 정책 정비와 이행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 간 불평등 감소를 위해 개도국의 국제사회 입지 존중 및 지원 확대, 이주 및 송금 혜택 등을 제시했다.

57) UN ECOSOC(2018b), p.14
58) UN ECOSOC(2018b), p.14

○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SDG 11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 가격 수준의 주택에서의 거주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적정 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 자연재해나 재난을 대비하며,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폐기물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사회는 급속한 도시화로 많은 도시가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주택, 사회기반 시설 확보 등과 같이 도시 확장과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환경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엔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과 관련된 관심사 중 하나는 비공식 거주 개선이다. 1990년부터 2014년 도시지역의 비공식 거주지역은 46%에서 23%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9] 그러나 도시 인구집중에 따라 비공식 거주지역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비공식 거주지역 인구는 6억 8,900만에서 8억 8,100만 명으로 증가했다.[60]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생산(SCP: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와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까지 총 108개국이 환경파괴를 막고

59) UN ECOSOC(2018b), p.15
60) UN ECOSOC(2018b), p.15

경제성장을 위해 SCP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켰다.[61] SCP 전환을 위해 주로 유럽이 주도하며, 그 다음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브리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순이다. 2018년에는 71개국과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거시 정책, 규제, 자발적, 경제적 수단에 대해 언급했다. SDG 12 달성을 위해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당사국은 협정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2018 HLPF SDG 12 세션에서 UN 환경(UN Environment)은 '2018-2022 하나의 지구 5개년 전략을 위한 하나의 계획(Strategy 2018-2022: One Plan for One Planet)'을 소개했다. 이는 UN 환경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가능소비생산을 위한 10년 프로그램(10YFP)의 일환으로, 4가지 공동 이행목표, 전략적 원칙과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계획의 주요 이행목표는 ① SDG 12 이행체계 구축, ②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 전환을 돕는 도구와 솔루션 제공, ③ SCP의 화합적인 이행의 주도, ④ SCP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공과 환경적·사회적 문제 제고 역할 등이다.[62]

○ Goal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는 건강, 환경, 산업 등에 대한 범분야 목표로 단일목표의 성격보다는 다른 의제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서, 위험재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61) UN ECOSOC(2018b), p.16.
62) UN Environment(2018), p.2.

특히 2017년은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해로, 지구 평균온도가 약 1.1℃ 상승했다. 기록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대한 국가별 가속화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3] 파리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별 접근방식과 행동을 제시하며 국가감축목표(NDC)를 준비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기준, 개도국 10개국은 첫 번째 국가적응계획(NAPs: National Adaptation Plans)을 제출했다.[64] 선진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Goal 14: 해양생태계 보존

SDG 14는 7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세부목표는 해양의 식량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수산자원의 관리방안,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존방안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수산자원은 1974년 대비 2013년 90%에서 69%로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65] 연안·해양 보호구역은 해양보전(생태계, 생물, 경관)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세계는 연안·해양의 약 16%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66]

SDG 14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강화하고 국제법을 통해 해양 식량자원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63) UN ECOSOC(2018b), p.17.
64) UN ECOSOC(2018b), p.18.
65) UN ECOSOC(2018b), p.17.
66) UN ECOSOC(2018b), p.17.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0년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Ocean Conference 또는 UNFCCC COP 26)를 통해 해양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국가별 관리가 아닌 국제적 관리를 위해 "UN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 Goal 15: 육상생태계 보호

SDG 15는 산림 조성 및 산림생태계 보존 및 복원,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방지 조치 등 육상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육지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은 40억 헥타르(국토면적의 약 31%)로 조사되었다.[67] 최근 산림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숲의 손실률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25% 감소했다. 손실의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은 주로 농업활동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Goal 16: 정의와 평화

SDG 16은 평화, 투명한 제도, 글로벌 거버넌스, 사회 안전과 정의, 인권 개선 등과 같은 12개 세부목표로 개별적인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세계 곳곳의 지역은 사회와 국내 차원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이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본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7) UN ECOSOC(2018b), p.18.

다만 국가 수준에서 대중의 정보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와 관련한 규정 강화가 진행 중이다.[68]

○ Goal 17: 파트너십

SDG 17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이행수단 강화를 제시한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16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현해야 할 분야와 방법을 포함한다. 특히 SDG 17은 SDGs의 포괄적인 재원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이후 지난 3년간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7가지 분야가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69]

2017년 기준 공적개발원조(ODA)는 1,466억 달러로 2016년 수준 0.6% 감소했다.[70]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영국이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를 달성하였다. 국가별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주류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합된 국가자금 조달체계를 개발하는 노력이 보인다. 한편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채널의 발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SDG 17에서 제시하는 재원은 단순히 금융적 의미만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제도와 거버넌스의 의미도 포함한다.

68) UN ECOSOC(2018b), p.20.
69) UN ECOSOC(2018b), p.20.
70) UN ECOSOC(2018b), p.20.

##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강력한 경제적·제도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EU는 2030 의제와 SDGs 이행에 있어서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의 2030 의제 이행은 공동체 내에서의 SDGs 달성과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제고,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 의제가 채택되고 1년 후인 2016년, EU는 의제 및 SDGs에 대한 대응방안[71]과 SDG 달성을 위한 전략인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를 발표하였다.[72]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의 도전을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야 간 정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은 '거버넌스'의 문제이며, EU 차원에서 이는 국가 간, 분야 간 정책 정합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 1) SDG 주류화와 전략 수립

2030 의제에 대한 EU의 대응은 크게 다음 두 갈래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73] 첫째는 SDGs를 기존 정책체계와 공동체의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SDGs를 EU 정책과 이니셔티브에 주류화하고 그 결과를 UN HLPF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참여 플랫폼' 설립계

71) 2030 의제 제78항은 모든 회원국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의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We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develop as soon as practicable ambitious national responses to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is Agenda.").

72) EC(2016b).

73) EC(2018).

획도 함께 제시되었다.

EU 정책에 SDGs를 주류화하는 작업은 기존 정책들을 17개 SDGs에 맵핑하는 작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존 EU 정책들이 17개 목표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제 이행을 강화하고 보다 집중된 목표별 대응을 위해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번째는 2030 의제와 SDGs를 반영하여 EU 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과 재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C는 정책과 규제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고려하도록 촉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EC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SDGs의 시너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된 주요 시너지는 다음과 같다(EC, 2016b).

- 일자리, 성장, 그리고 투자 촉진은 SDGs 달성과 EU의 지속가능발전 도전 해소에 도움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저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 에너지연합과 기후변화정책은 관련 SDG 7, 13 달성에 도움
-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촉진 노력은 관련 SDG 8, 9, 13, 14, 15 달성에 도움
- EU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유럽 지주(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행동은 SDG 8은 물론 SDG 1, 3, 10 달성에 도움

### 2) 2030 의제 및 SDGs 이행성과 모니터링

EU의 SDGs 이행 측정을 위해 'EU SDG 지표(EU SDG indicator set)'

가 개발되어 2017년 5월에 채택되었다. 이 지표는 17개 목표에 따라 구분된, EU의 실정을 반영한 10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 14와 17에는 5개 지표가, 그리고 나머지 목표마다 6개 지표가 설정되었다. 100개 중 41개 지표는 하나 이상의 목표 측정에 사용된다.[74]

EU SDG 지표는 회원국, NGO, 학계,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개발되었다. 첫 번째 지표체계는 2017년 4월에 합의되었고, 최종 검토를 거쳐 5월에 채택된 이후 같은 해 11월에 첫 번째 'EU SDG 모니터링 보고서(*EU SDG monitoring report*') 작성에 사용되었다. EU SDG 지표체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75]

- 지표체계의 구조는 17개 SDGs를 따르고 있으며, 각 목표마다 6개 이내의 지표 포함. 하나 이상의 목표 측정에 사용되는 '다목적 지표'(MPIs: multi-purpose indicators)를 포함
-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 내에 포함된 기존 지표를 제거해야만 가능
- 지표의 교체는 EU 맥락에서 SDGs 성과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고려됨 (지표가 이용가능하고 정책 연관성과 통계적 품질이 더 우수한 경우)
- 새로운 지표는 EU SDG 지표 선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74) Eurostat(2017a).
75) Eurostat(2018).

표 2-5 EU의 SDG 모니터링: 관련 SDG 모니터링 체계와 비교

| | 측정 대상 | 측정 주체 | 지표체계 |
|---|---|---|---|
| 지구(UN) | 2030 의제의 목표와 타깃 | UNSC, IAEG-SDGs, ECOSOC, UN GA | 241개 지구적 SDG 지표 |
| EU | EU 맥락에서의 SDGs (EU 정책에 중심) | Eurostat | EU SDG 지표 및 기존 지표 |
| 국가 |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2030 의제 이행 | 국가 통계청 및 관련 기관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

자료: Eurostat(2017b).

### 3) SDGs 주요 이슈 및 목표별 이행 현황

EU의 지속가능발전은 유럽 조약(Article 1 of the EC Treaty)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정착되어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 부문별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주류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 UN에서 채택된 2030 의제와 SDGs의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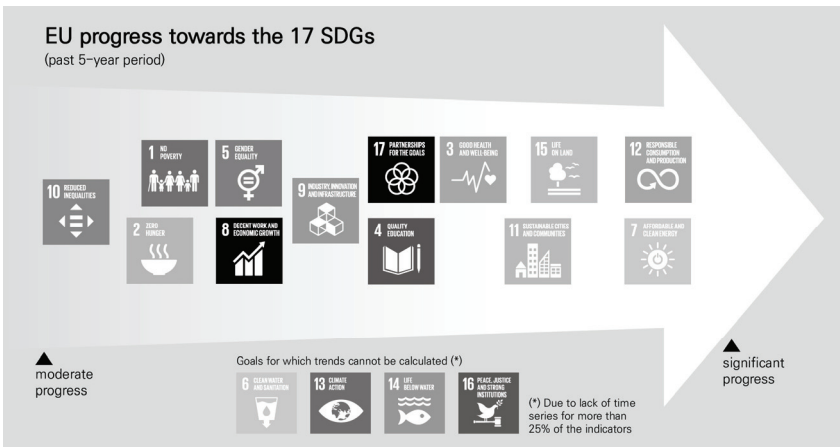
이와 같이 EU 회원국인 28개국은 역사적인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약 달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SDGs 이행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유럽경제통계국(Eurostat)은 EU 맥락에서 SDGs의 이행 상황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SDGs 달성을 지원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Eurostat은 지속가능개발지표(SDI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기반으로 EU 지속가능개발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했다. Eurostat(2017b)의 EU의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보고서에 따라 EU의 주요 SDGs 이행 과정과 논의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유럽경제통계국이 제안한 EU의 지난 5년간 17개 분야에 대한

SDGs 이행성과 요약은 〈그림 2-3〉과 같다.

EU는 지난 5년간 SDG 7, SDG 12, SDG 15, SDG 11, SDG 3 분야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8개(SDG 4, SDG 17, SDG 9, SDG 5, SDG 8, SDG 1, SDG 2, SDG 10) 분야에서 완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 SDG 6, SDG 13, SDG 14, SDG 16과 같은 4가지 분야에서는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76]

그림 2-3 EU의 SDGs 진행사항




자료: Eurostat(2017b), p.11.

○ Goal 1: 빈곤 퇴치

EU의 맥락에서 SDG 1 이행을 위해 기존의 목표인 빈곤 퇴치보다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접근한다. 2010년 EU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스마트, 지속가능 및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76) Eurostat(2017b), p.11

위해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출범했다. EU는 이미 SDGs 채택 이전에 ‘2010년 대비 2020년 빈곤 위험인구의 25%를 줄여 2,000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함(lifting at least 20 million people out of the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77]

EU의 빈곤 수준은 최근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빈곤 위험 인구나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78]

○ Goal 2: 기아 종식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달성이 SDG 2의 중심적인 측면이다. EU 맥락의 식량안보는 SDG 2와 관련하여 유기농법에 의한 토지 면적과 농경지 질소 균형의 꾸준한 향상이 보인다.[79] 그러나 축산 및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량 증가와 조류 개체 수의 감소 등과 같은 농업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단기간에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80]

○ Goal 3: 건강과 웰빙

EU는 SDG 3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EU는 기대 수명 향상,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같은 여러 건강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81]

77) Eurostat(2017b), p.12.
78) Eurostat(2017b), p.12.
79) Eurostat(2017b), p.12.
80) Eurostat(2017b), p.12.
81) Eurostat(2018), p.10.

○ Goal 4: 양질의 교육

EU는 유아 교육, 초·중등 보편교육 강화, 고등교육 접근 향상과 같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해, 수리 및 과학 분야의 성과가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2020년까지 목표로 선정한 EU의 최근 졸업생들의 취업률 및 성인의 학습 참여율 등의 분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82]

○ Goal 5: 성평등

EU는 이미 1957 로마조약(Römische Verträge)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철폐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EU 회원국은 취업, 노동, 임금 등의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맥락에서 SDG 5는 여성의 고용,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성과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83] 전반적으로 유럽은 교육을 통한 조기퇴직자의 성별격차 및 고용이 줄어들었으며, 유럽 내 최대의 상장기업과 국회에서 고위관리직 여성의 비율 증가 등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84] 반면 노동시장의 여성, 남성 참여비율 차이는 여전히 나타난다.

82) Eurostat(2018), p.119.
83) Eurostat(2018), p.10.
84) Eurostat(2018), p.12.

○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EU 맥락에서 SDG 6 이행성과 측정을 위한 EU SDG 지표는 제한적이다. SDG 6과 관련한 EU SDG 지표는 위생(sanitation), 수질(water quality), 물 이용효율(water use efficiency)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유럽 내 평균 수질오염도(BOD)는 2000년 2.81㎎/ℓ에서 2014년 1.94㎎/ℓ로 2.6% 감소했다.[85]

○ Goal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2017년 기준 EU는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모두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향상시켰다. EU는 합리적이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 확보보다는 에너지의 총 최종 소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이후로 EU는 총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 왔으며,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20% 향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86]

○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8과 관련된 유럽 SDG 지표 추세는 EU의 1인당 실질 GDP를 증가시키면서 자원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유럽의 노동시장은 장기실업 및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 수가 감소하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EU의 고용률은 2013년 이후 크게 높아졌으며, 이 속도로 이어진다면 2020년까지 고용률 75% 달성 목표에 도달 할 것

85) Eurostat(2018), p.119.
86) Eurostat(2017b), p.10.

으로 예상된다.[87]

○ Goal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SDG와 관련하여 EU의 연구 개발인력의 비중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EU는 2020년까지 R&D에 대한 GDP를 3%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특허 신청건수가 지연되고 있다.[88] 더불어 지난 5년간 EU의 서비스 부문 및 수송 부문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 Goal 10: 불평등 완화

유럽 내 소득격차는 감소하나 세계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EU의 조치인 개도국에 대한 재원조달과 수입은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89]

○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Eurostat(2017b) 보고서에 따르면 SDG 11은 EU가 가장 큰 진전을 이룬 목표 중 하나이다. EU는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도시의 소음 문제는 갈수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90] 반면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개선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소를 통해 세부목표 11.2에 일부 진전이 관찰되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2017년 기준 EU는 도시 폐기물 관리와 도시 인구의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87) Eurostat(2017b), p.10.
88) Eurostat(2017b), p.14.
89) Eurostat(2017b), p.10.
90) Eurostat(2017b), p.10.

큰 진전을 보였다. 특히 EU는 자원효율성 향상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럽 제로폐기물 프로그램(A Zero Waste Programme for Europe)'이라는 폐기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다양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통해 EU 전역의 대기질을 꾸준히 개선시켜 왔으나 PM2.5의 경우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이 발생했다.[91]

○ Goal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EU는 자원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92] 지난 15년간 EU의 자원생산성은 2002년 대비 2017년 32.9% 증가했으며, 에너지 효율성은 2001년 대비 2006년 29.2% 향상된 특징이 나타난다.[93] 전반적으로 EU의 자원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한 반면 유해 및 화학물질 배출량은 감소했다고 보고되었다.[94] 자원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자원 사용량을 감소시켜 창출 GDP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95]

○ Goal 13: 기후변화 대응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 EU 차원의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09년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EU의 '2030 기후·에너지 패

91) Eurostat(2017b), p.10.
92) Eurostat(2018), p.12.
93) Eurostat(2018), p.219.
94) Eurostat(2018), p.219.
95) Eurostat(2018), p.219.

키지(Climate and Energy Package)' 이후의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를 발표했다. 2030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27%까지 확대, 에너지 효율 27% 개선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2030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2020 패키지'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절감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16년 EU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2.4% 감소하여 '유럽 2020 전략'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96] 현행 '2020 패키지'의 이행속도로 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이 약 25%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97] 더불어 2017년 기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이미 21%에 도달했으며, 2030년에는 최소 45%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98] 유럽환경청(EEA)은 향후 EU가 2020 패키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0년 이후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정책 수준으로는 불충분함을 시사했다.[99]

○ Goal 14: 해양생태계 보존

EU 맥락의 SDG 14 이행성과 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 범위는 제한

96) Eurostat(2018), p.239.
97)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p.2.
98)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p.3.
99) Eurostat(2018), p.239.

적이다. EU는 지난 10년간 남획을 감소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지중해와 흑해의 과도한 어업, 해양 생물다양성의 감소, 해양 산성화와 오염과 같은 문제가 남았다.

○ Goal 15: 육상생태계 보호

EU 서식지 지침(European Habitats Directive)에 따라 EU는 산림면적 관리, 수질 관리, 지정된 육지 서식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EU가 자체적인 영역에서 SDG 15를 달성함에 있어 진전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EU 맥락에서 SDG 15 달성을 위해 EU의 소비패턴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Goal 16: 정의와 평화

SDG 16과 관련한 지표들을 통해 EU는 지난 몇 년간 살인이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수, 폭력 및 파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다만 SDG 16과 관련하여 사법시스템의 독립성과 부정부패 추세와 관련한 EU SDG 지표의 부재로 측정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Goal 17: 파트너십

EU 맥락에서 SDG 17 이행성과는 주로 글로벌 파트너십 영역의 내용을 반영한다. 더불어 EU는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여 EU 지역 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이미 EU 및 회원국은 ODA 핵심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2030년까지 EU 국민 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최빈국에는 GNI 대비 ODA 비중 0.15~0.20% 지원을 목표로 한다.

###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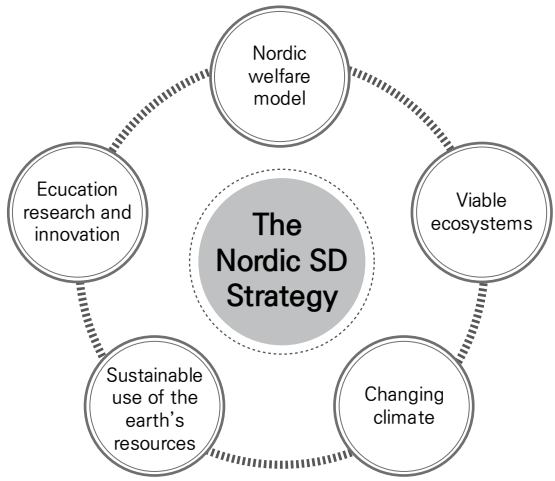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르딕 협력은 첫 번째 총리선언이 채택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파로에 제도, 그린란드, 올란드 제도인데, 2001년에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전략(join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한 이후, 현재는 지난 2013년 채택된 제4차 공동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00]

노르딕 국가들이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이처럼 소지역 공동의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이 각 국가와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노르딕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은 참여국가들 공동의 이해와 도전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발전 협력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전략에서 '노르딕 복지모델(the Nordic welfare model)', 생태계, 기후변화, 자연자원, 교육·연구·혁신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였다. 이 전략은 2025년까지 '노르딕 장관급 협의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활동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며, 추진성과는 각 분야별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100) Nordic Council of Ministers(2013).

그림 2-4 노르딕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자료: Nordic Council of Ministers(2013)을 기초로 저자 작성.

표 2-6 노르딕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의 분야별 지표

| 분야 | 지표 |
|---|---|
| 노르딕 복지모델 | • Demographic trend (인구통계학적 추세)<br>• 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내총생산)<br>• Public debt (공채)<br>• Urbanisation (도시화)<br>•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고용률, 실업률)<br>• Life expectancy at birth (기대여명)<br>• Gini-coefficient (지니 계수)<br>• Risk of poverty amongst families with children<br>• Gender pay gap (성별임금격차) |
| 생태계 | • Sustainability of fish stocks<br>• Discharge of nitrogen and phosphorus to the Baltic Sea<br>• Changes in the Common Bird Index<br>• Developments in annual fellings and increment in forests<br>• Urban population exposure to air pollution by ozone and particulants |
| 기후변화 | •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gross energy supply<br>• Development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sector<br>• Emissions and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 분야 | 지표 |
|---|---|
| 자연자원 | • Decoupling of environmental pressures, gross energy consumption, resource use and generation of non-mineral waste from economic growth<br>• Nordic Ecolabel ('the Swan') and the EU Ecolabel<br>• Proportion of environmental taxes in total tax revenues<br>• Development in municipal waste generation and in municipal waste management by treatment method |
| 교육·연구·혁신 | • Upper secondary, post-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in total population<b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by sectors of performance |

자료: Nordic Council of Ministers(2013).

○ 2030 의제 이행 협력 프로그램

이 소지역 공동전략은 '노르딕 장관급 협의회'의 분야별 프로그램에 통합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구체화된다. 장관급 협의회는 공동으로 전략 이행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이행 평가·보고를 지원한다.

그림 2-5 노르딕 SDG 프로그램의 구성과 이행관계자

자료: Halonen et al.(2017).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4개 국가 수상은 2016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68차 노르딕 협의회에서 SDGs 달성을 위한 별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101] 그리고 2017년 9월, 노르딕 국가의 2030 의제 이행 협력 프로그램인 '세대2030(Generation 2030)'을 채택하였다. 세대 2030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 노르딕 장관급 협의회의 활동은 관련 사업을 통해 2030 의제 이행에 기여
- 노르딕 지역 내 2030 의제에 대한 지식의 공유
- 노르딕 장관급 협의회의 2030 이행 노력의 지역 내 및 국제적 공유

101) Halonen et al.(2017).

#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2. 중국의 SDGs 이행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 1. 한국의 SDGs 이행

###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7년 발간된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10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지만, 본 보고서에서 소개된 개념이 1992년 '리우선언'과 의제21의 기반이 되면서 정책입안자들과 일반 대중에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03]는 지속가능발전을 국제협력과 국가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 채택하였으며, 27개 원칙과 '의제 21(Agenda 21)'이 포함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104]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직후인 1992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이행하여야 할 중장기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105]을 작성하여 1996년 10

102) 1983년 12월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이 특별위원회는 노르웨이의 브룬틀랑(Gro Harlem Brundtland)이 의장을 맡았다. 그런 연유로 이 위원회를 '브룬틀랑 위원회', 그리고 WCED 보고서를 '브룬틀랑 보고서'라 부르기도 한다.

103) 지속가능발전은 이 회의를 통해 국제적 정책 논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환경'과 '개발'을 연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시 개발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04)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의 20주년이 되는 해인 2012년에 Rio+20 회의가 개최됨.

105) 「의제 21」 제37장에 따른 국가 실천계획 작성

월 UN에 제출하였다. 국내 정책으로는 1996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포함하는 "환경복지 구상"을 발표하였고, 이어 환경부는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7대 정책과제, 22개 세부과제 및 83개 단위사업이 포함된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안)』을 발표(1996.4)하였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언의 범정부 추진을 위한 '실무계획작성방향'을 확정(1996.5)하고, 관계부처 계획이 종합 조정된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이 최종 발표(1996.6)[106]되는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었다.(김호석 외, 2018)

리우회의 이후 UN의 권고에 따라 많은 나라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적으로 동강댐 백지화가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국가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협의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2000년 환경의 날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을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혹은 PCSD)'를 설치하였다. 지속위 규정[107]을 통하여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경제와 사회·환경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속위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06) 환경부(1996).
107) 대통령령 제16946호(2000.8.5).

-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 수립
-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해 9월 20일에 제1기 지속위가 출범하였다. 제1기 지속위는 리우회의의 과제인 의제 21 실천계획 이행을 추진하고, 정부가 수립한 주요 중장기계획을 지속가능발전 원칙과 관점에 따라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0개 정책 부문의 부처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2002년 10월 사회·경제 부문의 환경성 제고기능을 강화한 제2기 지속위가 구성되었는데, 참여정부가 출범(2003.2)하게 되면서 2기 지속위는 활동을 멈추게 되었으며, 이후 확대·개편되었다. 제3기 지속위는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직접 관장하는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로 위상이 바뀌었으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은 물론 사회적 갈등의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제4기 지속위(2006.5)는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되었다. 참여정부는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심의기능 없이 자문에 머물렀던 지속위를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상시켰다.[108]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간인 2006년에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행 상황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함께 제시한 것이 중요한

108) 이후 2008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속위의 주요 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속위를 환경부장관 아래로 두어 그 위상을 조정하였음.

특징이다. 제4기 지속위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토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77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데, 지속위는 2년마다 해당 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는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2016년에는 전체 지표수가 84개로 조정되었다.[109]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법 지위를 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고, 주요 내용들은 삭제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조정되었다.

##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 1)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SDGs 반영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110]이다.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에서 고려한 대외여건으로는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 국가 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111]를 들 수 있다. 대내여건으로는

109) 가장 최근의 지표체계는 2016년에 작성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참고.
110) 환경부 보도자료(2016.1.12), "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11) 제70차 UN총회(2015.9)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되었다.

기후변화·자원 사용·환경보건 등 주요 환경문제의 악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 진입 등이 주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의 성과 평가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2016년 시행)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시사점으로는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② 추세 변화 및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한 입체적 평가 ③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반영이 도출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이행과제의 대부분이 환경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SDGs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의 외연적인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반대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과제의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반영되어야 할 키워드도 환경, 사회, 경제 분야 각각 선정되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이러한 지난 제2차 계획의 성과·한계를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대내외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의 비전과 4대 목표, 전략은 〈그림 3-1〉과 같다. 이러한 비전·목표·전략의 실천을 위해 총 50개의 이행과제가 제시되었다.

표 3-1 지속가능발전의 대내외 위협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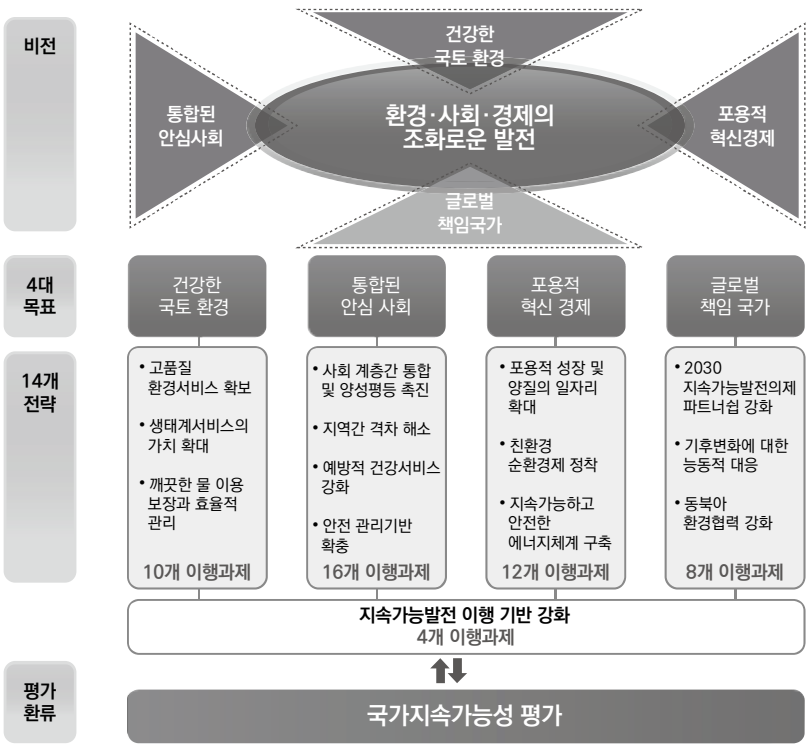
| | 주요 위협요인 | 주요 내용 |
|---|---|---|
| 대외 여건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글로벌 의제 부각 | - 제70차 UN 총회(2015.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채택<br>•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의 SDGs 포함<br>• MDGs와 달리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발전 목표 |
| | 기후변화 심화 | -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br>• 온실가스 배출 증가: 지구 온도 및 해수면 상승 전망<br>• 생태계 피해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심화 등 |
| | 국가 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 | - 국가 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br>• 소득격차 심화: 전 세계 부의 63%가 유럽과 북미에 집중,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주민 절반이 하루 1.25 달러 이하 소득 |
| 대내 여건 | 기후변화, 자원 사용, 환경보건 등 주요 환경문제 악화 | - $CO_2$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증가의 지속적 증가<br>-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심화: 기온상승, 극한기상, 해수면 상승 등 → 사회적 비용 증가 전망<br>- 생물 서식지 파괴·생태계 교란: 도시화 등에 따른 지속적 개발, 외래종 유입·확산<br>- 기후변화, 유해 화학물질,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피해 위험 증가 |
|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 - 상대적 빈곤가구 증가 및 비정규직·여성 차별 존재<br>- 지역불균형 지속<br>-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 급증<br>- 삶의 질에 대한 낮은 만족도 |
| |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 진입 | -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2030년대 1%대 성장률 예측<br>- 경제활력의 침체 및 생산성 향상의 제약: 설비투자 감소 등<br>- 생산가능 인구 감소 → 노동55령 부족 문제 전망<br>- 고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수요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부정적 영향<br>- 청년실업률 문제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pp.7-1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환경(건강한 국토환경), 경제(포용적 혁신 경제), 사회(통합된 안심 사회), 국제협력(글로벌 책임 국가) 분야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분야의 주요 이행과제는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으로 오염배출 관리체계 선진화, 생태축 연결성 강화 등 생태계 보전, 물 순환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분야의 주요 이행과제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지원, 고용·복지 정보 지원체계, 여성 경제활동 지원활동, 어린이 및 국민 건강 정책 강화,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창업지원 및 고

용안정성 강화방안과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 분야에서는 공적개발 원조의 비중 확대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등의 이행과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p.30.

### 2) 한국의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2016년 UN 고위급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한국

은 “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Model of Development Success to a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향후 전망, 과제, 기회를 다루고 있다. 검토를 위하여 6가지의 주요 단계가 수행되었는데, 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황 검토, ②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rs) 사이의 시너지와 상충관계(trade-off) 분석, ③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다루기 위한 정부·비정부 기관의 맵핑과 스크리닝, ④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국가지표의 선정, ⑤ 정부·비정부 조직으로부터의 관련 자료 수집, ⑥ 지속가능성의 세 기둥(경제·사회·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조직 및 행동 주체의 파악이다.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그간의 집중된 노력들[112]-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수립, 『경제혁신을 위한 3개년 계획』[113]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류화를 위한 역할은 대한민

112) 지속가능국가발전위원회 설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수립,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 절에서 다룸에 따라 본 절에서는 생략한다.

113) 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사회 및 경제발전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목표로 한다.

국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맡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시행을 위하여 국회는 정치적 추진력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 18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해, 43명의 국회의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을 창설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사회조직이 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왔으며, 2000년 지방 지속가능발전 동맹체(local counci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서 지방 지속가능발전동맹(Local Sustainable Alliance)을 설립하고 관리조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인 "지방의제 21"(2004)을 마련하였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관된 이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다수의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s) 조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정부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하여 '중기 개발도상국 정책'[114]을 수립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실행을 위한 통합개발 원조를 위하여 새로운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제2차 ODA 정책을 통해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ODA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회계연도 중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평가를 두 번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14) mid-term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2016-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단으로서 한국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Plan)을 지원하며, ODA를 2020년까지 총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대비 0.2%까지 증가할 계획이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개발행위자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한국은 Addis Tax Initiative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3) 한국의 SDGs별 국내 추진과제

국가 단위 2030 의제 이행은 국가 정책이나 계획에 SDGs를 반영하는 것과 의제 채택과 함께 합의된 '이행수단'과 '후속조치·검토' 등 제반 이행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2030 의제에 포함된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합의된 목표들로, 지구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달성이 추진될 것이다.

개별 회원국의 경우에는 자국 여건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SDGs 이행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의제의 주요 원칙 및 SDGs 이행 관련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위 '주류화(mainstreaming)' 과정이 국가단위 이행의 첫 단계이다. 이는 개발계획이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같은 각 국가의 주요 정책·계획에 의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함께 채택된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국가단위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구적 SDGs를 참고하여 국가여건에 맞게 설정되는데, 이때 국가정책에 SDGs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자국의 여건, 능력, 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115] SDGs 측면에서 국내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

해 KEI(2017)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한국에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정책적 함의의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포럼[116]을 운영하여 정책적 함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세부목표에 대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Goal 1: 빈곤 퇴치

- 근로능력의 유무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별 소득지원정책 강화
- 소득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 개선
- 도시계획 단계부터 재해예방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

○ Goal 2: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 조직화를 통한 농업 노동생산성 증대 및 법인 경영체 등의 육성
- 농지보전 목표치 설정 및 농지이용 고도화
- 유전자원의 식의약품 신소재용 활용 등 농업 유전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전통 민간요법 등의 지식자원화

○ Goal 3: 건강 및 웰빙

- 새로운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 결핵에 대한 정보체

115) "Each government will also decide how these aspirational and global targets should be incorporated in national planning processes, policies and strategie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link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ther relevant ongoing processes i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2030 Agenda).

116) 포럼 위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계 강화 및 감염자 관리사업 확대
-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지원 대책 강화

○ **세부목표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 사전예방적인 교육홍보와 규제정책,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약물 남용 및 알코올 사용장애 지원 강화
- 도로이용자, 도로환경, 차량, 안전관리체계 등 도로교통시스템 구성요소별 정책 추진
-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의 내실화,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 최소화
- 금연 지원, 담배소비 모니터링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 **Goal 4: 양질의 교육**
- 취약계층 유아의 웰빙 진단 및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누리과정 지원예산 확보
- 교육·훈련의 다양화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청년 및 성인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
- 참여율 증가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접근성의 강화
-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
- 공교육 의무교육의 기본 역량으로 육성방안 마련

○ Goal 5: 성평등

-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계
-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의 시간가용성 증대
-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양질의 여성 일자리 보장, 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 강화
- 분만취약지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확대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 물 사용 효율성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담수 방안
-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통합 수자원관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 정책 추진, 수질개선 중심의 물환경 관리 목표 설정

○ Goal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 수송·열에너지로 시장 확대
- 대규모 선도투자 등을 통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창출
-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 인증, 규제 개선 등의 분야별 신재생에너

지 및 에너지 효율 산업의 인프라 강화
- 발전 부문에서 장기적인 계통안정성 확보방안
-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및 강력한 보조금 정책

○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총요소생산성 향상 주도, 시장기능과 경쟁요소 도입을 우선, 기업 생애주기의 원활한 작동 도모 등을 위한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
- 주력 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관점에서 산업구조 조정
-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의 창업 지원
-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의 고부가가치 극대화 실현
- 고용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처우의 공정성 확보
-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권 보장의 확대
- 공정관광정책을 통한 지역 향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촉진
- 수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래 신규일자리 확장 도모

○ Goal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 생산시스템 고효율화 등 청정기술 및 청정공정 분야의 확대와 원재료의 채취에서 최종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환경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노력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정착을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 조성정

책의 유기적인 연계 및 사회경제시스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

○ Goal 10: 불평등 해소

-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 혹은 사회부조정책을 대폭 확대
- 사회적 차별 관련 법률과 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 일-가정 양립제도의 대폭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보장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의 수혜 정도를 대폭 확대
-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수와 지표의 개발과 측정, 이민자를 위한 재정적 기반 구축방안, 국적제도 개선방안의 마련, 영주권 제도화 방안을 마련, 귀화제도의 전면적 개편

○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

-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
- 지역격차 해소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대중교통 확대정책
- 도시의 압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추진
- 문화유산 및 자연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대편성
- 국가 및 도시 기반시설 설치 시 재해 취약성 분석 도입
- 경유차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확보정책 추진
- 인구추계치와 자원의 수요를 통합하는『도시 및 지역발전 계획(도

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동 실천 강화
- 공동체 중심의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Goal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
-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정책 도입 필요
- 음식물 공급 단계의 혁신을 통한 감량 추진
-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화학물질 및 제품으로부터의 위해저감을 위한 법체계 및 관리기반 강화
- 통합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관리체계 마련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이 경영방식 및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신규 녹색제품/서비스 범위 확대 등 기존 공공녹색구매제도의 개선 필요
- 범주류 성격의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환경유해보조금의 개편: 연탄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 Goal 13: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재해 관련 법제 및 정보의 통합관리, 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시스템과 영향 모니터링 강화, 산업별 적응 인프라

확대

-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사회·경제적 리스크 관리도구 보급
-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고취 및 저탄소 생활의 확산

○ Goal 14: **해양생태계 보존**

- 환경관리해역(9개소)별 연안·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해양 보호구역 확대
-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물 보호 및 생물학적·화학적 위협요인 최소화,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리계획 수립
- 국내 원양어업과 국내 연근해 어업의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행위를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관련 법 마련
- 국제 수준의 연안·해양 보호구역 확대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규모 어업의 명확한 기준 마련

○ Goal 15: **육상생태계 보존**

- 국가 차원에서 보호지역시스템 강화 및 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우량 경제림 자원 육성으로 집중적 산림경영체계를 내실화하고 고품질 산림자원을 육성
- 산불예방·대응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대형 산불 발생의 원천 차단
- 체계적인 산지관리 기반 마련을 통한 합리적 산지 보전 및 이용방안
- SDGs 관련 국제적 지표를 참고하여 국내지표 선정 및 개발
- 텍 발급 및 반납을 통한 유해 야생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세부규정, 생태계 유출위험생물의 규정 필요
- 농업·산림·수산·해양 관련 계획에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목표 및 내용을 반영
- 자연자본회계 편성, 유해 인센티브 감소 조치, 민간 분야 재원 동원,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불제 확대 등에 정책적 노력

○ Goal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 예방적 차원의 범죄예방정책 추진
- 홍보·교육과 지역사회 단위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
- 피해자 친화적 형사 사법정책과 구속률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
-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퇴직 공직자의 통제 강화
-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승진,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지·시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및 관련 인식의 증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기반 구축

○ Goal 17: **지구촌 협력**

- 이행수단(MoI)과 관련된 17번 목표 중 특히 14, 15번 목표는 국제개발 협력정책과 국내 정책의 정책 일관성과 관련된 목표이므로

원조 총괄기관 및 대외원조 관련 정부부처들의 노력 필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개념 정립 및 인식 확산 필요
- 민관협력사업 추진 패러다임 변화 대응체계 마련, 관련 법제의 정비
- 데이터 세분화와 GDP를 보완하는 측정치의 개발

###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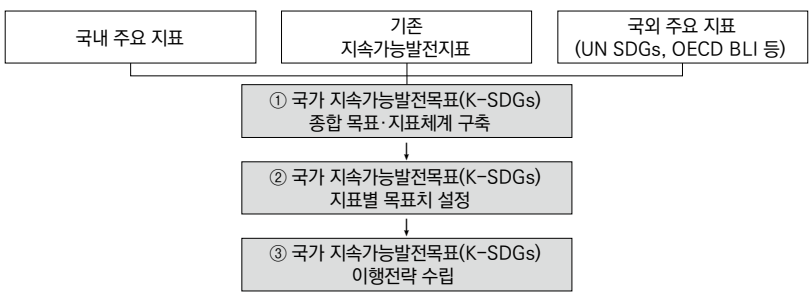
2017년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채택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확정(2018년)'[117]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8년 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SDGs, 이하 K-SDGs) 수립 추진계획』[118]이 마련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현재(2018.10월) 계획 수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K-SDGs는 UN 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국가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정책목표를 행정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 체감의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18년 3월, 관련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K-SDGs 수립을 위한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K-SDGs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K-SDGs 협의체와 실무 K-SDGs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작업반 구성은 국민 참

117) 청와대 홈페이지(2017.8), "국정과제 61-1",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3, 검색일: 2018.8.29.

118) 지속가능발전포털(2018.4.2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 http://ncsd.go.kr/app/board/publicNotice/view.do, 검색일: 2018.7.1.

여 거버넌스 형태로서, SDGs 목표별 민·관·학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추진되었다. K-SDGs의 목표와 지표체계 마련을 위하여 기존의 국내외 관련 주요 지표들과 UN SDGs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K-SDGs 목표(Goals, Target)의 작성기준은 ① UN에서 제시한 17개 목표(goals)를 망라하되, 169개 세부목표(targets)는 목표 내 대표성, 시급성, 국내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UN에서 제시되지 않은 목표라 할지라도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이슈 포함, ② 경제-사회-환경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등 거시적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 ③ (가급적) 세부목표는 그 자체에 목표치를 담아 정량적 평가 가능성 제고(합의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목표), ④ 유사 세부목표가 여러 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조정하되, 관련된 목표 간 연계검토 추진(정책 간 정합성 확보 도모), ⑤기존 주요 중·장기 계획, 국정과제, 국제협약 등 정책과 조화 고려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2 K-SDGs 작성 3단계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2018.4.20), ttp://ncsd.go.kr/app/board/publicNotice/view.do, 검색일: 2018.7.1. p.2.

K-SDGs 수립원칙의 기본방향[119]은 다음과 같다.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방향성과 구조를 준용하되, 한국적 상황에 맞는 특색을 살려,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정
2. 국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로서, 2030년 달성을 목표로 설정
3.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장기적 영향 고려
4. 경제·사회·환경 등 정책 간 상호연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 상충이나 불일치 해소
5. 수립 과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no one will be left behind)는 원칙하에 취약계층 및 이해관계자 등 국민 참여에 기반

K-SDGs 지표(indicators)를 작성하는 기준도 제시하였는데, UN SDGs 지표 및 국내외 지표 풀(pool)을 검토하여,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A), 변형(B), 개발(C)[12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는 향후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므로 목표와 세부목표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SDGs의 특징인 목표 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121]하기 위하여 K-SDGs 수립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별 논의구조가 추가되었다. K-MGoS는 목표별로 도출된 K-SDGs(안)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그룹 중심으로 목표 간 수평적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을

119) 지속가능발전포털(2018.4.2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 http://ncsd.go.kr/app/board/publicNotice/view.do, 검색일: 2018.7.1.

120) C지표와 같은 신규지표의 경우, 추후 통계청 주관으로 지표 개발을 추진할 예정(지속가능발전포털(2018.4.20))

121) UN은 SDG 이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으로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를 구성·운영한 바 있음(지속가능발전포털(2018.4.20))

가지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인 참여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별로 관련된 K-SDGs(안)에 대한 입장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하여 K-SDGs의 방향 제시·그룹별 목표 간 수평적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018년 6월 총 12개 이해관계자 그룹[122]의 입장보고서가 발표되었다.

K-SDGs 수립을 위하여 작업반에서 작성한 K-SDGs(안)를 바탕으로 총 2회 국가 SDGs 포럼을 개최하여 각 목표별로 작업반, 주요 그룹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목표에 관하여 논의하고 수직적·수평적 정합성 등 다차원적인 통합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국민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 소통의 일환으로서,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8년 6월 21일 K-SDGs 수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같은 해 9월 5일 작업반 워크숍을 개최하고 SDGs 목표별로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안)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표 3-2 SDGs 목표별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안)(2018.9.5. 발표자료)

| G1 빈곤 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번호 | 세부목표 4 | 지표 9(신규 5) | 소관부처 |
| 1-1 | 남녀노소,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국가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 여부별)<br>- (신규) 근로빈곤층 대상 주요 재정사업의 지출규모(EITC 등) | - 복지부<br>- 고용부<br>- 기재부 |
| 1-2 |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 (신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br>- (신규)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br>- 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성별, 연령별) | - 복지부 |

122) NGOs, 과학기술계, 교육 및 학술단체, 노동자와 노동조합, 농민, 동물계, 산업계, 여성, 장애인, 지역공동체, 청년, 청소년(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index.do, 검색일: 2018.7.1).

표 3-2 계속

| | | | |
|---|---|---|---|
| 1-3 |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일반인과 동등한 경제적 자원과 기초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필요 시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 - (신규)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지출항목별)<br>-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복지부<br>- 고용부<br>- 여가부<br>- 국토부 |
| 1-4 |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등 경제·사회,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 - 자연재해별 사망 및 상해자 | - 복지부<br>- 환경부<br>- 행안부 |
| G2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6(신규 1) | - 지표 8(신규 6) | - 소관부처 |
| 2-1 |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 (신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 | - 농림부<br>- 복지부 |
| 2-2 | 영유아·아동(유소년)의 적정한 영양 섭취 수준을 달성한다. | - (신규) 영유아·아동 영양상태 | - 농림부<br>- 복지부 |
| 2-3 | (신규)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 (신규) 전체 농가 농외소득 지표<br>- (신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 농림부 |
| 2-4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 면적 비율<br>- (신규) 농경지 토양 유기물함량(%) 및 밭토양 산도(pH) | - 농림부 |
| 2-5 |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 농업 식물 유전자원 및 동물 유전자원의 점수 | - 농림부 |
| 2-6 |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 (신규)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 | - 농림부 |
| G3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8(신규 2) | - 지표 17(신규 3) | - 소 관 부 처 |
| 3-1 | (신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관리와 건강 보장을 확대한다. | - (신규)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 인구)<br>- 성인 남성 흡연율(WHO 담배 규제기본협약의 이행) | - 복지부 |
| 3-2 |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악물 오남용을 예방 한다. | - 인구10만 명당 자살률<br>-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 - 복지부 |
| 3-3 |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 손상을 예방한다. | - 교통사고 사망자수(1,000명당) | - 국토부<br>- 행안부 |
| 3-4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 결핵발생률(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br>-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신환자 수(연령, 성별, 고위험군)<br>-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률<br>- (신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건수 | - 복지부 |
| 3-5 |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 출생아 1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MMR)<br>-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 - 복지부 |
| 3-6 |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 신생아사망률 | - 복지부 |

표 3-2 계속

| | | | |
|---|---|---|---|
| 3-7 |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 (신규) 대기기준 미달성 지역 거주인구율<br>-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사망률<br>-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 - 환경부<br>- 행안부 |
| 3-8 | (신규)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 장애인 건강권 보호와 건강 증진<br>- 인구고령화 대비 케어 관련 지표(임종관리)<br>-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활용 케어서비스 개발<br>- 출산장려정책 | - 복지부 |
| G4 교육 증진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8 | - 지표 14(신규 6) | - 소관부처 |
| 4-1 |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의 성비<br>-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학습평가 실시(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br>-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 | - 교육부 |
| 4-2 |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 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br>- (신규)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br>-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 교육부 |
| 4-3 | 모든 학습자에게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 (신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교육과정 참여율<br>-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br>-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 | - 교육부 |
| 4-4 |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x% 증대한다. | - 평생학습 참여율<br>-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성별, 연령별)<br>-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 - 교육부<br>- 고용부 |
| 4-5 |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 특정한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취약계층별 가용 데이터의 세분화) | - 교육부<br>- 고용부<br>- 여가부 |
| 4-6 |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 활용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br>- 청소년/성인 문해율<br>-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성별, 연령별) | - 교육부 |
| 4-7 |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고 확산한다. | - 세계시민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 교육부 |

표 3-2 계속

| G5 성평등 보장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번호 | 세부목표 9 | - 지표 18(신규 4) | - 소관부처 |
| 5-1 |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 여가부<br>- 법무부 |
| 5-2 |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 지난 1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br>- 지난 1년간 성폭력 신고건수, | - 여가부<br>- 법무부<br>- 경찰청 |
| 5-3 |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한다. | - 성차별적인 유해한 관습과 법·제도 개선 여부 | - 여가부<br>- 법무부 |
| 5-4 |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성별, 연령별, 지역별) | - 여가부<br>- 고용부 |
| 5-5 |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br>-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비율<br>-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br>- 장관급 여성 비율 | - 여가부<br>- 고용부<br>- 교육부 |
| 5-6 | 모두가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신규) 성 및 재생산 건강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 마련 여부<br>- (신규) 성교육 수행학교 비율<br>- (신규) 자녀계획 혹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 실천율(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 - 복지부<br>- 교육부 |
| 5-7 |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토지 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자산 소유와 통계·금융서비스·유산(遺産)·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 농지 소유자 중 여성 비율<br>-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중 여성 비율<br>- 농가 경영주 중 여성 비율 | - 법무부<br>- 농림부<br>- 국토부 |
| 5-8 | 여성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 (신규) ICT 산업 여성종사율 | - 과기부 |
| 5-9 |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과 법, 재원 할당시스템 마련 여부 | - 여가부<br>- 법무부 |
| G6 물·위생 관리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7(신규 2) | - 지표 17(신규 14) | - 소관부처 |
| 6-1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 (신규) 수돗물의 직간접 음용률<br>- (신규) 농어촌지역 노후관거 저감 비율<br>- (신규) 도농 간 수돗물 요금 비율<br>-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지자체 수 | - 환경부 |
| 6-2 | (신규)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 - (신규)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률<br>- (신규)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비율<br>- (신규) 하수 악취저감률 | - 환경부 |

표 3-2 계속

| | | | |
|---|---|---|---|
| 6-3 | (신규) 물순환 개선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 (신규) 하수처리수 재이용율<br>- (신규) 상수원 수질 좋음(I) 등급(BOD, 총인 기준) 달성 비율<br>- (신규)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B) 등급 비율<br>- (신규) 신규오염물질 관리항목 확대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달성률 | - 환경부 |
| 6-4 |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 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 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 (신규) 누수율<br>- (신규) 전체 지자체 중 물공급이 안정적인 지자체 비율(물공급 안전율) | - 환경부 |
| 6-5 |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이행한다. | -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 정도<br>-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 관리협정 체결 유무 | - 환경부<br>- 외교부<br>- 통일부 |
| 6-6 | 물과 관련된 생태계(산, 숲, 습지, 강, 대 수증, 호수 등 포함)를 보호하고 복원한 다. | -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br>- (신규) 하천생태계 연결성 정도 | - 환경부 |
| 6-7 | 물 위생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공동체 참 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 주민과 물 이용자,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 건강한 물순환 유지, 위생관리 개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각급 행정기구의 비율<br>- (신규) 물과 위생 관리 관련 협의체 구성과 민간 참여비율 | - 환경부 |
| G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4(신규 1) | - 지표 7(신규 5) | - 소관부처 |
| 7-1 | 에너지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 - (신규) 전체 가구에서 에너지 빈곤증이 차지하는 비율(장애 여부 구분 등) | - 산업부 |
| 7-2 | 국가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이상으로 증대한다. |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br>-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br>- (신규) 1차 에너지 대비 석탄 비중 | - 산업부<br>- 환경부 |
| 7-3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 (신규)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br>- (신규)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에너지효율지표(Toe/m2·년) | - 산업부 |
| 7-4 | (신규)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를 확대한다. | -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 | - 환경부<br>- 산업부 |
| G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9 | - 지표 9 | - 소관부처 |
| 8-1 |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 | - 기재부<br>- 고용부 |
| 8-2 | 기술 향상과 혁신을 통해 경제생산성을 제고한다. | - 연간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 | - 산업부 |
| 8-3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 고용성장지수 | - 고용부<br>- 여가부 |

표 3-2 계속

| | | | |
|---|---|---|---|
| 8-4 |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 물질 발자국<br>- 국내 물질 소비량 | - 환경부<br>- 산업부 |
| 8-5 |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 고용부<br>- 여가부 |
| 8-6 |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 청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 고용부<br>- 기재부 |
| 8-7 |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 - 정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 고용부 |
| 8-8 |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 전체 GDP 대비 관광 분야 GDP 비율<br>- 외국인 방문객 수 | - 고용부<br>- 문화부 |
| 8-9 |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 금융위 |
| G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5(신규 1) | - 지표 7(신규 3) | - 소관부처 |
| 9-1 |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 - 도로 보급률<br>- (신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br>- (신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 국토부<br>- 과기부 |
| 9-2 |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의 기반 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비율 | - 산업부<br>- 중기부<br>- 금융위 |
| 9-3 | (신규) 기술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 - (신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 산업부<br>- 중기부<br>- 과기부 |
| 9-4 |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 과기부 |
| 9-5 | 환경 친화적인 산업활동과 기술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산업부<br>- 환경부 |
| G10 불평등 해소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5 | - 지표 8(신규 4) | - 소관부처 |
| 10-1 |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신규)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격차비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 - 복지부<br>- 고용부<br>- 기재부 |
| 10-2 |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 (신규) 소득 5분위 배율<br>-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 유무 등) 빈곤율 | - 복지부<br>- 고용부<br>- 기재부 |
| 10-3 | 나이, 성별,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 복지부<br>- 고용부 |
| 10-4 |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 GDP 대비 노동소득 | - 고용부 |

표 3-2 계속

| | | | |
|---|---|---|---|
| 10-5 |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 (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이탈률 | - 여가부<br>- 교육부 |
| G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보장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9(신규 1) | - 지표 17(신규 7) | - 소관부처 |
| 11-1 |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 슬럼, 비공식 주거, 적절하지 못한 주거에 사는 인구비율 | - 국토부 |
| 11-2 | 모두에게 적정한 요금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br>- (신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률(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률 등)<br>- (신규)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 분담률, 도로대비 자전거 도로연장, 공공자전거 이용률 등) | - 국토부<br>- 행안부 |
| 11-3 | (신규) 토지이용의 압축성과 복합성을 도시계획 시 고려하고, 시민참여 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외곽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체계를 정립한다. | - 시가화지역 비율(%)<br>- (신규)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예산 반영률(%) | - 국토부<br>- 행안부 |
| 11-4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건수 및 국제적인 등위 | - 문화재청 |
| 11-5 |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 -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br>- (신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 | - 행안부<br>- 국토부 |
| 11-6 |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 광역도시별 대기오염도<br>- (신규) 친환경차 등록대수<br>-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 - 환경부<br>- 산업부<br>- 행안부 |
| 11-7 |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 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 면적<br>-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 - 국토부<br>- 행안부 |
| 11-8 | 적절한 계획을 통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강화한다. | - (신규) 도시·군 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 - 환경부<br>- 국토부<br>- 산림청 |
| 11-9 | 포용(inclusion), 자원효율화, 기후변화 완화·적응, 재난대비 등을 위한 통합정책 및 계획을 시행하는 도시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에 따른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를 구축한다. | - (신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 국토부<br>- 행안부 |
| G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증진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11(신규 3) | - 지표 14(신규 7) | - 소관부처 |
| 12-1 | (신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 기재부<br>- 환경부<br>- 과기부<br>- 산업부<br>- 중기부 |

표 3-2 계속

| | | | |
|---|---|---|---|
| 12-2 |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 1인당 물질 발자국(MF)<br>- 국내 자원소비량(DMC), 1인당 자원소비량<br>- (신규)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 - 환경부<br>- 산업부 |
| 12-3 | 소매 및 소비자 단계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시켜 식품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 - 식품손실지표(Food Waste Index)<br>- (신규) 식품폐기물지표(Food Loss Index | - 환경부<br>- 식약처 |
| 12-4 |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수와 유해폐기물 발생량<br>-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 - 환경부 |
| 12-5 | 폐기물 발생의 예방과 감축,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한다. |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 환경부 |
| 12-6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투명하게 발간되도록 관리한다.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확대 | - 산업부<br>- 중기부 |
| 12-7 | 녹색 공공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br>- (신규)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 - 환경부<br>- 행안부<br>- 기재부 |
| 12-8 | (신규)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 (신규)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br>- (신규) 대국민 환경교육 만족도 및 환경의식 수준 | - 환경부 |
| 12-9 | (신규)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대체 플라스틱 개발을 통해 환경으로의 유출을 방지한다. | - (신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br>- (신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 - 과기부<br>- 환경부 |
| 12-10 |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 수 | - 문화부<br>- 환경부 |
| 12-11 |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 GDP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 산업부 |
| G13 기후변화 대응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3 | - 지표 4(신규 2) | - 소관부처 |
| 13-1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 지역 기반의 상대적 연평균 인명피해, 재해피해액, 피해복구액 | - 행안부 |
| 13-2 |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 (신규)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예산비율<br>- (신규) 민간기업 기후변화 적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비율 | - 환경부<br>- 산업부<br>- 국토부 |
| 13-3 |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교육 활성화 | - 행안부<br>- 환경부<br>- 교육부<br>- 산업부 |

표 3-2 계속

| G14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번호 | 세부목표 6(신규 3) | - 지표 8(신규 5) | - 소관부처 |
| 14-1 |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육상으로부터 영양염류 유입량을 상당 수준 감소시킨다. |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 해수부 |
| 14-2 | (신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육상 및 해상의 오염물질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 (신규) 육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비율<br>- (신규) 해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투기 감소비율 | - 해수부 |
| 14-3 |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한다. | - 전국 연안 연평균 pH 농도 | - 해수부 |
| 14-4 |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 해양보호구역 면적 | - 해수부 |
| 14-5 | (신규) 수산자원의 생태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 - (신규) 바다숲 조성 면적<br>- (신규)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중 | - 해수부 |
| 14-6 | 과학적 자원조사·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계획을 이행한다. | - (신규) 목표자원량 대비 현재 수산자원량의 비율 | - 해수부 |
| G15 육상생태계 보전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9(신규 1) | - 지표 12(신규 2) | - 소관부처 |
| 15-1 | 육상과 내륙담수 생태계에 대한 보전,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br>-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 농림부<br>- 환경부<br>- 산림청<br>- 국토부 |
| 15-2 |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 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진전(국제협력 국가보고지표 개선비율과 국가보고지표 개선)<br>- (신규) 산림생태계의 유형, 천이단계, 영급 등에 따른 산림면적 | - 산림청 |
| 15-3 | 가뭄·홍수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비율 | - 농림부<br>- 국토부<br>- 환경부 |
| 15-4 |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 노력을 강화한다. | -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br>- 산 녹색보호지수 | - 농림부<br>- 국토부<br>- 환경부 |
| 15-5 |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한다. | -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ist Index) | - 환경부 |
| 15-6 |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수단의 진행건수 | - 환경부<br>- 농림부<br>- 과기부<br>- 산업부 |
| 15-7 |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비율 | - 환경부<br>- 외교부<br>- 기재부 |

표 3-2 계속

| | | | |
|---|---|---|---|
| 15-8 |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수단 집행건수 | - 환경부<br>- 농림부<br>- 외교부 |
| 15-9 (신규) | (신규)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 (신규) 단절·훼손된 생태축에 대한 생태연결성 복원비율 | - 환경부 |
| G16 인권·평화증진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13(신규 2) | - 지표 25(신규 25) | - 소관부처 |
| 16-1 |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킨다. | -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연령, 성별, 장애인, 국적 등)<br>- 일상생활 폭력사건 수와 문제 해결 비율(층간 소음, 데이트 폭력) | - 법무부<br>- 행안부<br>- 경찰청<br>- 여가부 |
| 16-2 |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한다. | - 아동폭력 사례 수<br>- 전체 복지 관련 예산에서 아동보호 예산의 비율과 보호기관 종사자 수 | - 법무부<br>- 경찰청<br>- 여가부 |
| 16-3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사법)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 국가기관의 헌법 등 실정법 준수 여부와 수준<br>- 수사기관(경찰, 검찰, 사법부)의 공정성과 피의자 인권존중 정도 | - 법무부<br>- 법제처<br>- 경찰청<br>- 권익위 |
| 16-4 |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 강화와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의 수와 해결 비율<br>-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 비율 | - 법무부<br>- 경찰청 |
| 16-5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 - 국민 권익위의 일반 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br>-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br>- 배임·횡령 등 민간 부문 부패 범죄 통계 | - 법무부<br>- 권익위<br>- 국조실 |
| 16-6 |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 결과<br>-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감시 여부 및 평가 결과 | - 전부처 |
| 16-7 |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 - 국가기관의 정책협의 위원회 중 사회적 약자의 참여비율 | - 전부처 |
| 16-8 | 국내 프로그램에 개도국 글로벌 거버넌 스 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 - 개도국의 국제기구 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조) 프로그램 여부, 수와 지원액수<br>- 개도국 시민사회단체(CSO)의 국제 네트워킹 및 옹호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조) 프로그램 여부 지원액수 | - 외교부 |
| 16-9 |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 적 지위를 부여한다. |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유무<br>- 출생등록증은 없으나 법적 신원을 취득한 인구비율 | - 법무부<br>- 행안부 |
| 16-10 |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 국민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수와 응답률<br>-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 - 법무부 |

표 3-2 계속

| | | | |
|---|---|---|---|
| 16-11 | (신규) 개인 정보인권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건수와 증감률<br>- 계층별 디지털 격차(불평등)와 증감률 | - 행안부 |
| 16-12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 | - 전부처 |
| 16-13 |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정도<br>- 차별 사건을 다루는 제도와 진정절차 구축 여부와 효과성<br>- 차별 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평가 | - 법무부 |
| G17 지구촌 협력 강화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번호 | 세부목표 14 | - 지표 24 | - 소관부처 |
| 17-1 | 개도국의 재원동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세수총액의 비율<br>-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동원(DRM) 관련 지원 규모 | - 외교부<br>- 기재부 |
| 17-2 |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한다. | - GNI 대비 ODA 비율<br>- GNI 대비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비율<br>- 정부최종소비지출 대비 ODA 비율 | - 외교부<br>- 기재부<br>- 국조실 |
| 17-3 |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동원한다. | - 해외직접투자(FDI Outflow)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br>- 해외송금 수수료율 | - 외교부<br>- 기재부 |
| 17-4 |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한다. | - 상품 및 서비스 수출규모 대비 채무상환비율 (기존 국제지표) | - 외교부<br>- 기재부 |
| 17-5 |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 - 해외직접투자 중 최빈개도국 투자 비율 | - 외교부<br>- 기재부 |
| 17-6 |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 인터넷 이용자 비율<br>- 국가 간 과학기술·ICT 협력협정과 프로그램 수<br>- 친환경 기술 이전과 확산을 위한 개도국 지원 규모<br>- 최빈국 과학기술·ICT 분야 기술협력 지원 규모 | - 외교부<br>- 기재부<br>- 과기부 |
| 17-7 |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 -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배양 사업 지원규모 | - 외교부<br>- 기재부<br>- 환경부 |
| 17-8 | 다자무역제도를 촉진하고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수출 증대와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한다. |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교역비중 | - 외교부<br>- 기재부<br>- 산업부 |
| 17-9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 수<br>-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우선정책 영역별 가이드라인 운용 실적 | - 외교부<br>- 기재부<br>- 환경부<br>- 국조실<br>- 행안부 |
| 17-10 |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 -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 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기존 국제지표) | - 외교부<br>- 기재부<br>- 환경부 |

표 3-2 계속

| | | | |
|---|---|---|---|
| 17-11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 지속가능개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 이해당사자 개발 효율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기존 국제지표) | - 외교부<br>- 환경부<br>- 기재부 |
| 17-12 |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금액(KOIKA, EDCF, KSP 등 민관협력(PPP) 재원 측정)<br>-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에 따라 구축된 민·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및 민간단체 수 | - 외교부<br>- 기재부<br>- 행안부<br>- 환경부<br>- 국조실 |
| 17-13 | 개도국이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으로 세분화되고 취약계층별 국가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장애인, 이주 민 등 취약계층별 세분화된 국가 승인통계의 비율 | - 기재부<br>- 행안부<br>- 통계청 |
| 17-14 |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 등 지속가능발전 이행 상황에 대한 측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와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생산·가공된 지표 숫자 및 이중 세분화된 지표의 비율<br>- 통계역량 강화 목적의 공적개발원조 금액 및 비율(OECD DAC) | - 기재부<br>- 외교부<br>- 통계청 |

자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 2. 중국의 SDGs 이행

###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 시기를 맞는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UN이 2000년에 채택한 MDGs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발전과 빈곤 감소 측면에서, 중국의 GDP는 2000년 1조 2,113억 달러에서 2015년 11조 647억 달러로 증가[123]하였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중국의 국가 빈곤선 기준 빈곤층 인원은 2010년 17.2%에서 2015년 5.7%로 감소[124]하였다. 중국 빈곤 인

123) 구글 공공데이터(2018.7.6). "중국 국내총생산", 검색일: 2018.10.10.
124) 구글 공공데이터(2018.7.6), "중국 국가빈곤선 기준 빈곤층 인원수", 검색일: 2018.10.10.

구수의 감소는 세계 빈곤인구 감소에도 기여하였다. 사회적 발전과 관련하여 '9년 무료의무교육'이 보편화되고, 정부 주도로 사회보장 및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2015년 도시·농촌 인구 500백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중국의 5세 미만 사망률은 1991년 53.3명에서 2015년 10.7명으로 감소[125]하였으며, 산모사망율도 감소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중국의 온실가스 GDP 집약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석유·석탄·수자원 등 주요 자원의 GDP 집약도도 감소하였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다른 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생태문명 건설은 지속가능발전의 중국식 표현이자, 중국의 솔루션이다. 2015년 4월 당 중앙, 국무원에서 발표한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은 세계적 관점에서 생태문명 구축을 통해 전 세계 생태를 보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26] 또한 생태문명의 '5위1체'[127] 전략 구도는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개의 핵심 이론을 확장시킨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한 단계 진화시킨 중국식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풀이된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5위1체' 구도하에 '4개 전면'[128] 전략과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라는 5대 발전 이념을 제시

125) 구글 공공데이터(2018.7.6), "중국 5세 미만 사망률"(신생아 1,000명당 5세 이전 사망 명수), 검색일: 2018.10.10.

126) 人民网(2013.11.12),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검색일: 2018.9.28.

127) '오위일체(五位一體)'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칭한다(이현태 외, 2018, p.4).

128) '4개 전면(全面)'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건설, 개혁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의미를 확장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제18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삼고, 지속가능발전 혁신 시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과학기술 혁신대회 정신 및 '국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개요'에 기반하여 과학기술 혁신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129]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에 포함시켰다.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이 담긴 『13차 5개년 규획』은 생태문명, 친환경 발전이념을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여, 상기 계획 이행 중 모니터링, 평가 및 심사의 근간으로 삼았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하고, 전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포용적·연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자'[130]라고 말해 각국 대표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 당시 시진핑 주석은 최근 5년간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열린 전국 생태환경보호 컨퍼런스에서는 환경오염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중국 국내 생태문명 건설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의미한다(이현태 외, 2018, p.4).

129) 中国共产党新闻网(2012.11.12)"十八大报告", http://cpc.people.com.cn/18/, 검색일: 2018.9.22.

130) 新华网(2016.3.17),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검색일: 2018.9.22.

생태문명 건설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의 솔루션을 모색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131]

중국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하고, '개발도상국 간 협력구도'를 통해 세계 각국에 더 많은 '중국이 가져다주는 기회'[132]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서 최초로 중앙 문건 및 5개년 계획에 대외원조에 대한 약속을 밝혔는데, 대외원조 규모 확대, 대외원조 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게 인력자원, 발전계획, 경제정책 등에 대한 무상 컨설팅 및 교육 기회를 늘리고, 과학기술 교육, 의료보건, 재해방지, 환경관리, 야생동식물 보호, 빈곤 감소 등의 분야에서 대외 협력 및 원조를 확대하며, 인도주의적 원조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133] 두 번째로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유엔 평화발전기금 조성, '남남협력 원조기금' 설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무이자 채무 면제, 글로벌 발전지식센터 건립 등을 약속하였다. 그중 20억 달러에 달하는 1차 '남남협력 원조기금'은 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지원에 사용되었다.[134] 세 번째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추진·이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2018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131) 新华网(2018.5.20), "开创美丽中国建设新局面——习近平总书记在全国生态环境保护大会上的重要讲话引起热烈反响", 2018.9.22.

132) 崔文星(2016), pp.34-55, p.154.

133) 人民网(2015.11.3), "中共中央关于制定十三五年规划的建议", 검색일: 2018.9.22.

134) 外交部网站(2015.9.26), "习近平：谋共同永续发展 做合作共赢伙伴——在联合国发展峰会上的讲话", 검색일: 2018.9.22.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더욱 긴밀한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구축에 관한 베이징 선언'[135]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행동계획(2019-2021년)'[136]을 발표하였다.

### 1) 최근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사업

2016년 9월 19일 리커창 총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의제: 함께 노력하여 세상을 바꾸자'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별 방안'(이하 국가별 방안)[137]을 발표하고, 이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국가별 방안은 ① 중국의 발전 성과와 경험, ② 중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 요인, ③ 지도사상 및 기본 원칙, ④ 전체적인 방향성, ⑤ 17가지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방안의 다섯 부분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기반이 될 행동지침으로,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은 국가별 방안을 기반으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과 결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발전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국무원은 2016년 12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혁신 시범구 건설방안'(이하 건설방안)[138]을 발표하여 시범구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

135) 2018年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关于构建更加紧密的中非命运共同体的北京宣言", 검색일: 2018.10.4.
136) 2018年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中非合作论坛—北京行动计划(2019-2021年)", 검색일: 2018.10.4.
137) 外交部网站(2016.10.12), "中方发布《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 검색일: 2018.9.22.
138) 国务院(2016.12.15),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方案", 검색일: 2018.9.22.

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아래 '혁신 이념, 문제점 기반, 다자 참여, 개방 공유'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발전을 상호 연계,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시대 사회주의의 주요 모순점을 타파하고, 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2017년 8월 21일 '중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현황 보고서'[139]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보고서로, 국가 차원의 이행방법, 경험, 조기성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경험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처 간 조율이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43개 부문/위원회 간 협의체를 신설하여 국가별 방안과 현황 보고서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은 물론 상호 모니터링 및 경쟁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둘째, 국가의 전체 발전계획과 궤도를 같이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중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상호 연결하였다. 셋째,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전체적으로 이행하되 일부 중점사업, 우선사업을 선정·추진하였다.

### 2) 시범구 건설사업 개요

*"건설방안"의 추진방향과 목표* [140]

"건설방안"에서는 '중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혁신 시범구'의 추진방향과 목표로 ① 2030 의제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 ② 혁신 드

139) 外交部网站(2017.8.24),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进展报告", 검색일: 2018.9.22.
140) 国务院(2016.12.15),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方案", 검색일: 2018.9.22.

라이브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발전의 융합을 목표로 함, ③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해결에 주력, ④ 혁신 자원 통합, ⑤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메커니즘 정비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하게 하여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유도, ⑥ 복제 및 확장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마련하여 대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 창출,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에게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중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의제 혁신 시범구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실험구를 기반으로 구축한다. 1차 시범구는 우선 산시성 태원(山西太原), 광서성 계림(广西桂林), 광동성 심천(广东深圳) 이며, 『제13차 5개년 규획』 동안 중국은 약 10개의 시범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건설방안", 시범구가 갖는 네 가지 주요 건설임무 제시*[141]

"건설방안"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혁신 시범구는 기존에 있던 국가급 지속가능발전 실험구를 바탕으로 구축되며, 다음 네 가지 임무를 갖는다.

첫째, 2030 의제를 참고하고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기술 방향을 명확히 하여 성숙하고 효과적이며 시스템화된 솔루션을 마련한다.

셋째, 혁신 자원을 통합하고,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

141) 国务院(2016.12.15),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方案", 검색일: 2018.9.22.

며,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을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넷째, 과학기술로 창출된 새로운 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다른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에 중국의 경험을 제공한다.

*"건설방안", 중국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세 가지 의의*

중국 국무원은 "건설방안"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의제 혁신 시범구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 이는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중국 국무원의 중요한 업무 구상으로, 다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려는 중국의 실질적인 행동이다. 시범구의 건설은 중국의 2030 의제 이행 및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둘째, 중국의 발전 구상과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지속가능발전 의제 혁신 시범구는 '5위1체'라는 전체 구도, '4개 전면'이라는 전략구도, '5대 발전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이념들을 어떻게 현실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각 부처가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5위1체' 구도 중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기본이념과 일치하며, 5대 발전이념과 2030 의제의 핵심인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는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시범구 건설은 중국의 '5위1체'를 실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 혁신 시범구 사업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은 제18차 당대회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올해 전국 과학기술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국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요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상기 컨퍼런스 석상에서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은 물론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발전 간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지난 30년간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중국 과학기술부 역시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사회발전과의 결합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다. 이에 혁신 드라이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결합은 물론,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범구 건설은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을 융합하는 매우 중요한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범구 건설은 세계 발전, 국내 발전, 과학기술 자체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

지속가능발전 혁신 시범구는 전면적 소강사회,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거 실험구 관리 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실험구 관리방법', '지속가능발전 선진 시범구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실험구 관리방법'에는 실험구 신고, 실사, 인허가, 조직, 관리, 검수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 놓았다. '지속가능발전 선진 시범구 관리방법'에는 시범구의

기본 조건, 목표, 임무 및 중점사항, 신고절차, 조직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다.[142]

*개별 문제점에 기반,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방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개별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다는 점이다. 먼저, 시범구 건설을 위해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병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은 '경지 보호와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제고'이다. 즉, 생산성이 저하된 일부 경지를 대상으로 윤작, 휴경 등을 통해 경지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藏粮于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藏粮于技)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중국 서부의 수많은 지역이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일부 지역은 풍토병, 토양오염 등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범구 건설에 앞서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과학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년 발생하는 볏짚 8억여 톤은 제2의 곡식창고가 될 수도 있고, 폐기물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볏짚을 태울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볏짚 태우기는 환경문제이자 경제 문제로, 볏짚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혁신 시범구 건설은 전 세계의 과학기술 역량 결집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시범구 지역에서 문제점를 해결한 후, 이를 다

142)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07.4.9), "关于印发国家可持续发展实验区管理办法和国家可持续发展先示范区管理办法的通知", 검색일: 2018.9.22.

른 지역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몇몇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 의제 혁신 시범구의 건설목표*

첫째, 과학기술 혁신이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고 이끌게 하기 위함이다. 시범구 건설의 중요한 목표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혁신으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수준을 견인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생태문명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즉, 상호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5위1체' 역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셋째,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총 10개 전후의 시범구 건설을 목표로 한다. 대내적으로 이들 시범구는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2030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143]

*시범구 건설의 취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사회가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화가 초래한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한

143) 搜狐(2017.6.20), 专访|探索我国可持续发展的新动力与模式——访科技部社会发展科技司司长吴远彬, 검색일: 2018.10.4.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범구 건설의 취지는 경제, 사회, 환경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144]

### 1) 기본방향과 일반원칙

중국은 2016년 9월 19일, 제71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외 정세를 통합적으로 감안하고, 소강사회[145] 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146] 종엄치당[147] 전략과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건설, 당 건설을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통해 소강사회를 목표한 기한 내에 건설하고, '두 개의 백 년(两个一百年)'[148] 목표를 실현하며, 글로벌 발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혁신 발전을 견지한다.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이론적 혁신, 제도적 혁신, 과학기술 혁신, 문화 혁신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발전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는 데 힘쓴다.

144)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2016)과 China's Progress Report(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를 기초로 작성

145) 소강사회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회로 중국의 고전인 '예기(禮記)'에서 유래된 말로, '예기'에서는 사회발전 단계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온포(溫飽)사회, 한 단계 넘어서 여유로운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소강사회,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이상사회인 대동(大同)사회로 분류한다[인민망 한국어판(2013.7.2), "중국통의 고찰〈24〉-이문기 세종대학교 교수", 검색일: 2018.8.28].

146) 依法治国: 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다스림

147) 从严治党: 당 기강 확립

148) 두 개의 백년의 개념에 대해 덩샤오핑은 소강 사회의 완성을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로 잡았으며,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 다퉁사회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한다. 지역 간 조화, 도농 일체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을 추진한다. 신형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함께 발전시켜 균형 잡힌 발전구조를 마련하여 발전의 통합성을 높인다.
- 친환경 발전을 견지한다.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삼고, 생산성 증대, 풍요로운 삶, 양호한 생태문명 발전을 이룬다. 친환경 저탄소 발전방식 및 생활방식을 지향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개방적인 발전방식, 호혜공영의 개방전략을 견지한다.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며,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추구한다. 전략적 상호 신뢰, 경제무역 협력,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윈윈(win-win)을 실현한다.[149]
- 공유의 발전방식을 견지한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며,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발전 원칙에 따라 기회의 공평성과 최소한의 민생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5대 발전이념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2030 의제에서 강조한 인류,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대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는 일반적인 경제사회 발전규칙을 확장·심화한 개념으로 향후 중국의 2030 의제 이행을 이끌어 줄 것이다.

149) 外交部网站(2016.10.12), "中方发布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 검색일: 2018.9.22.

### 2) 국가이행계획의 원칙과 구성

국가이행계획은 ① 중국의 MDGs 이행 성과 및 경험, ② 2030 의제 이행에 있어서 기회와 도전, ③ 2030 의제 이행의 이행 방향과 원칙, ④ 2030 의제 이행의 전반적 접근, ⑤ 17개 SDGs 이행계획의 5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평화로운 발전 원칙: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받들어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 호혜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공동 구축하며, 전 세계의 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지역 및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 호혜협력 원칙: 이익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고 전방위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각국 정부, 민간 부문, 사회 및 국제조직이 광범위하게 전 세계 발전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각국이 평등하게 전 세계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발전 원칙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성과를 공유한다.
- 조화로운 발전 원칙: 국민을 위한 발전을 도모한다. 즉, 빈곤 해소, 민생안정, 사회 공평 정의 수호를 우선 해결한다.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포용, 개방 원칙: 포용적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를 추구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발전의 성과를 향유하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 구축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대하여 국제경제 질서가 평등, 공평, 호혜공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 자주적·자발적 원칙: 각국은 2030 의제 이행에 있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 각국은 자국의 특징과 국정 상황을 감안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30 의제 이행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상호 간 발전 노선을 중시하며, 발전 경험을 참고한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각국은 2030 의제 이행을 공동 목표로 하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의 국정상황 및 능력을 고려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위해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중국의 2030 의제 이행전략

○ **중점 업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으로 2030 의제 이행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제13차 5개년 규획』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념과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30 의제를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중국은 현재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에 힘을 쏟고 있으며, 중점영역 및 핵심 분야의 시장개혁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또한 행정간소화 및 권한 하부 이양, 규제정책의 완급 조절, 서비스 개혁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얻

게 될 개혁의 '보너스'는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국가발전 장기계획을 연계하고 이행사업을 위한 협력기제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성장속도 완화, 구조조정, 신구(新旧) 세대교체 등의 도전요인 외에도, 중국 경제가 지속적·안정적·건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 탈피, 도농 간/지역 간 발전 불균형 문제 해결, 생태환경 취약점 보완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빈곤 해소, 민생 개선, 사회갈등 해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건설,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지배능력 제고, 지역 간·계층 간·분야 간 조화로운 발전 등의 문제는 중국이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당면한 최대 도전이자 현재 국정의 중점사항이기도 하다.[150]

○ **제도적 보장**

제도적 보장은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체제 및 정책 방면의 지원을 의미한다. 중점사항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련 개혁을 추진하여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체제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개선 및 발전, 국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기본 목표로 자원 분배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제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과학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제도적인 동력을 불어 넣었다.

150) 外交部网站(2016.10.12), "中方发布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 검색일: 2018.9.22.

둘째, 법 제도를 정비하여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사회주의 선진문화 구축, 사회 거버넌스 혁신, 국민권리 보장, 민생 개선, 국가안보 수호, 생태환경 보호영역의 입법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운영효율이 높은 법제에 기반한 행정제도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셋째,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다.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의 상세목표에 따라 빈곤 기아 해소, 경제성장 유지, 산업화 추진,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비, 공평 정의 수호, 환경보호 강화, 기후변화 적극 대응,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가 거버넌스 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 10개 분야에 있어 국가 기본정책이 이끌고 특별 정책과 지방정책이 뒷받침하는 정책 보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각 급 정부가 능동적인 책임을 지도록 그 역할을 분명히 한다. 또한 분야, 부처를 막론한 수평적 협업과 정책의 수직적 확산을 강화한다. '중앙-지방-하부조직'으로 이어지는 효율적 이행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국 정부는 2030 의제 요구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지방정부 역시 관련 업무 팀을 꾸려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51]

○ **재정 및 금융 보장**

재정 및 금융 보장은 국내외 두 개 시장, 두 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

151) 外交部网站(2016.10.12), "中方发布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 검색일: 2018.9.22.

고 체제 및 시장 등의 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재정 및 금융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점사항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 세수시스템 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다. 발전 의제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보장한다. 상업성 금융, 개발성 금융, 정책성 금융, 협력성 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고, 분업이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성이 높은 금융기관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업 서비스가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혜택이 다시 금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둘째, 협력 모델 혁신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자본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관련 법규 개정, 정책적 우대혜택 제공, 정부서비스 고도화, 정책가이드 홍보 및 강화 등을 통해 사회자본이 지속가능발전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술 보장**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부흥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주요 과학기술 기반시설은 이미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중국 전체 R&D 연간 투자액은 2000년 896억 위안에서 2010년 7,062억 6,0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재정지출 역시 연평균 20% 이상 늘었다. 과학기술 관련 시설은 2010년 기준, 국가(중점) 실험실 333곳, 국가 공정센터 391곳, 국가 공정 실험실 91곳, 국가 인증 기업기술센터 729곳, 국가 실외과학관측연구소 105곳에 달한다. 이 외에도 자원 통합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실물 플랫폼, 야외 관측

연구시범시스템이 점차 완비되고 있으며, 다양한 과학 데이터, 자연과학 자원 보존량이 이미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하였다. 농작물 생식질(germ-plasm) 보존량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02년 중국은 '인재 강국'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국가 중장기 인재 발전 계획 요강(2010년-2020년)'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인재 배양 및 유치 강화를 선포하였다. 특히 혁신형 인재 육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2010년 기준, 중국 전체 R&D 인력의 FTE(Full-Time Equivalent)는 255만 4,000 man-year에 달하며, 박사 후 과정 이수가 가능한 프로젝트팀은 2,146개, 박사 후 과정 이수가 가능한 연구기관은 1,743곳에 달한다. 주요 학과와 기술 분야의 경우 이미 고학력 인재들로 이뤄진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슈퍼 잡교벼, 수질오염 방지 및 관리 등 26개 중대 사업을 연이어 가동하였다. 또한 '973프로젝트', '863프로젝트', 과학기술 지원 등 과학기술 계획과 중요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원천기술 혁신 역량을 크게 제고하였다.

2006년 중국은 '자주혁신 능력 강화, 혁신형 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진보법」,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 중장기 과학 기술 발전 계획 요강'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체계를 마련하였다.

최근 중국은 의약 보건, 재해 방지, 자원의 종합 이용, 생태환경 보호 등 민생 관련 기술 R&D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환경 개선, 친환경 소형 웰빙 주택 보급,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국민건강 촉진, 신농촌 건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중대형 과학기술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의 민생 활용이 증가하여, 과거

문천(汶川), 옥수(玉树) 지진, 조곡(舟曲) 산사태 등 대형 자연재해 발생 후 재건사업, 삼협 프로젝트(三峡东城), 청장철도(青藏铁路) 등 대형 건설 사업에서 과학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152]

### 3) 중국의 SDGs 모니터링 체계

중국 SDGs 지표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 단계의 전 세계 SDG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① 모니터링 방법과 광범위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② 모니터링 방법은 설정하였으나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③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모니터링 방법은 아니나 기존의 방법이 있고 측정가능한 지표 선정). 그런 다음 중국의 SDGs 이행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에 적합한 측정가능한 지표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2030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업무를 결합하여 중국의 SDGs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 중국 중장기계획을 전반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선정하여 중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체계를 수립한다.

**○ 지표 선정 및 평가방법**

전 세계 SDGs 지표체계를 토대로 중국 실정을 결합하여 일차적으로 163개 지표를 선정하여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체계를 완성되었다.

평가지표의 목표 값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분석법을 이용하여 163개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163개 지표 중 40개 지표

152) 外交部网站(2016.10.12), "中方发布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 검색일: 2018.9.22.

는 연속적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까닭에 데이터 확보 여부에 따라 연속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23개 지표를 선별하여 〈표 3-3〉과 같이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지표의 평과 결과는 세 가지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다. 빨간색은 상황이 좋지 않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녹색은 조기 달성 혹은 달성이 수월한 경우, 노란색은 이행이 순조로운 상태로 노력을 통해 달성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3-3 중국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

| | | | |
|---|---|---|---|
| SDG1 | 1 |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 % |
| | 2 | 빈곤발생률 | % |
| | 3 | 도시인구 대비 도시 최저생활 보장비 대상자 비율 | % |
| | 4 | 농촌인구 대비 농촌 최저생활 보장비 대상자 비율 | % |
| | 5 | 전체 인구 대비 도농 장애인 최저생활 보장비 대상자 비율 | % |
| | 6 | 전체 인구 대비 자연재해 피해자 비율 | % |
| SDG2 | 7 | 영양부족 발생률 | % |
| | 8 | 농촌인구 일인당 평균가처분소득 | 위안 |
| | 9 | 일인당 평균작물생산량 | kg |
| | 10 | 일인당 평균경작면적 | 묘(亩)/명 |
| | 11 | 총재정지출 대비 농업/임업/어업 지출비율 | % |
| | 12 | 정부지출의 농업지도지수 | - |
| | 13 | 농업 부문 공적자금<br>(공적개발원조 및 기타 공적자금) 총액 | 10억달러 |
| | 14 | 총재정지출 대비 곡물/식용류 비축지출비율 | % |
| | 15 | 식품류 CPI | - |
| SDG3 | 16 | 정상분만 산모 100,000명당 사망자수 | % |
| | 17 | 5세 미만 아동사망률 | ‰ |
| | 18 | 신생아사망률 | ‰ |
| | 19 | 숙련된 의료진의 도움하에 분만하는 비율 | % |
| | 20 | 인구 1,000명당 결핵 발병률 | 10만명당 |
| | 21 |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치료받아야 하는 소외된 열대질병 환자 수 | 만명당 |
| | 22 | 자살률 | 10만명당 |
| | 23 | 교통사고사망률 | 10만명당 |

표 3-3 계속

| | | | |
|---|---|---|---|
| | 24 | 무의식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 | 10만명당 |
| | 25 | 의학연구/기초보건 분야에 지급되는 공적개발원조 총액 | 10억달러 |
| | 26 | 에이즈발병률 | % |
| | 27 | 이질발병률 | % |
| | 28 | 폐결핵발병률 | % |
| | 29 | 인구 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건 |
| | 30 | 인구 만 명당 위생기술 인력수 | 명 |
| | 31 | 인구 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 개 |
| SDG4 | 32 | 인구 만 명당 고등학교 재학생수 | 명 |
| | 33 |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농업종사자 비율 | % |
| | 34 | 초등학교 입학 3년 전 유치원 입학률 | % |
| | 35 | 인구 만 명당 대학교 재학생수 | 명 |
| | 36 | 고등교육기관 학생 교사비율 | - |
| | 37 | 초중등 학생 교사비율 | - |
| | 38 | 부처, 학습 유형별 장학금 공정개발기금 총액 | 10억달러 |
| | 39 | 15세 이상 문맹률 | % |
| | 40 | 인구 만 명당 고등학교 교사수 | 명 |
| | 41 | 인구 만 명당 대학 교수수 | 명 |
| | 42 | GDP 대비 교육예산 비중 | % |
| SDG5 | 43 | 남녀 교육기회 평등 수준(남녀 문맹률 비율) | % |
| | 44 | 여성 국회의원 비율 | % |
| SDG6 | 45 | 식용수 안전관리서비스를 받는 인구비율 | % |
| | 46 | 안전하게 관리되는 환경위생서비스<br>(비누와 물 제공 등 손세정시설) 사용 인구비율 | % |
| | 47 | 수자원 및 환경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 10억 달러 |
| | 48 | 농촌 중앙집중식 급수 인구비율 | % |
| | 49 | 도시용수 보급률 | % |
| | 50 | 총 재정지출 중 의료보건/산아제한 지출비율 | % |
| | 51 | 농촌화장실보급률 | % |
| | 52 | 지표수 품질 Ⅲ급 이상 비율 | % |
| | 53 | 지표수 품질 Ⅴ급 미만 비율 | % |
| | 54 | 도시 오수처리율 | % |
| | 55 | GDP 만 위안당 용수량 | $m^3$ |
| | 56 | 산업 부가가치 만 위안당 용수량 | $m^3$ |
| | 57 | 농촌관개수 효율적 활용계수 | - |
| | 58 | 일인당 평균 수자원 | $m^3$/인당 |

표 3-3 계속

| | | | |
|---|---|---|---|
| SDG7 | 59 | 전력사용가능 인구비율 | % |
| | 60 | 전체 에너지소비량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 % |
| | 61 | 1차 에너지와 GDP로 계산한 에너지 밀집도 | |
| | 62 |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감소율 | % |
| SDG8 | 63 | 실제 일인당 GDP 연성장율 | % |
| | 64 | 취업인구 실제 일인당 GDP 연성장율 | % |
| | 65 | GDP 연성장율 | % |
| | 66 | 전체 인구 노동생산율 | 만 위안/인 |
| | 67 | 도시표본실업율도시등록실업률) | % |
| | 68 | 총재정지출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분야 지출비율 | % |
| | 69 | 〈무역 추진 원조 이니셔티브〉 원조금 | 억 위안 |
| | 70 | 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및 ATM기 수량 | |
| SDG9 | 71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와 일인당 평균 부가가치 | %<br>위안 |
| | 72 | 여객 운송량 | 만 명 |
| | 73 | 화물 운송량 | 만 톤 |
| | 74 | 핸드폰 보급률 | 개/백 명 |
| | 75 | 인구 만 명당 특허보유량 | 건 |
| | 76 | 과학기술 공헌율 | % |
| | 77 | 전체 자산투자 대비 교통운수사업 및 우정사업 투자비율 | % |
| | 78 | 단위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1,000g $CO_2$당량 달러당 2005년 GDP로 환산 |
| | 79 | GDP 대비 R&D 비율 | % |
| | 80 | 인구 백만 명당 R&D 연구원 수(정규직과 동일한 경력) | 명/백만명 |
| | 81 | 총부가가치 대비 미드/하이엔드 과학기술<br>산업부가가치비율 | % |
| | 82 | 기초인프라 국제 공적원조 총액(공적개발원조 및 기타 공적기금) | 억 위안 |
| SDG10 | 83 | 지니계수 | |
| | 84 | 수혜국과 원조국 간 자금 이동 유형(예: 공적개발원조, 외국직접투자, 기타이동)에 따라 분류한 개발 촉진 자금이동 총액 | 십억 달러 |
| SDG11 | 85 | 총 재정지출 대비 주택보장지출 비율 | % |
| | 86 | 일인당 평균 철도길이 | km/만명 |
| | 87 | 일인당 평균 도로길이 | km/만명 |
| | 88 | 총 재정지출 대비 도농지역사회에 대한 지출비율 | % |
| | 89 |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 |
| | 90 | 인구 백만 명당 재해로 인한 연평균 사망률 | % |

표 3-3 계속

| | | | |
|---|---|---|---|
| | 91 |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공기질 양호일수 비율 | % |
| | 92 | 도시 PM2.5 연평균 수치 | $\mu g/m^3$ |
| | 93 | 전국 산업폐기물(고체) 종합 이용률 | % |
| | 94 | 도시 부지 증가율과 인구성장률 비율 | |
| | 95 | 일인당 평균 공원녹지면적 | $m^2$ |
| | 96 | 산업 고위험 폐기물 처분 이용률 | % |
| | 97 | 생활쓰레기 무해화(無害化) 처리율 | % |
| SDG12 | 98 |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 발행 기업수 | 개 |
| | 99 | GDP에 대한 관광업 기여도 | % |
| SDG13 | 100 | 자연재해 피해자 사망자수 | 명 |
| | 101 |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 억 위안 |
| SDG14 | 102 | 여름철 부영양화 면적 | $km^2$ |
| | 103 | 연안해역 우수 수질(1급, 2급) 비율 | % |
| SDG15 | 104 | 초원 종합 식생 커버리지 | |
| | 105 | 자연보호구역이 전체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 | 106 | 보호구 내 육지 및 담수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 |
| | 107 | 삼림면적이 전체 육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삼림 커버리지) | % |
| | 108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이행 현황 | 백만톤삼림내 생물량 |
| | 109 | 보호구로 지정되고,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총면적 | % |
| | 110 | 레드리스트 지수 | |
| | 111 | 생물다양성/생태시스템 분야 정부발전지원금 및 재정지출 | 십억 달러 |
| | 112 | 생물다양성/생태시스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정부발전지원금 및 재정지출 | 십억 달러 |
| SDG16 | 113 |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사건 피해자수 | 명/십만 명 |
| SDG17 | 114 | 일반 공공예산 지출 중 타지역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 |
| | 115 | GDP 대비 송금액 (달러) 비중 | % |
| | 116 |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원조의 달러가치 (남북협력, 남남협력, 삼각협력 포함) | 달러 |
| | 117 | GDP 대비 국가재정수입 비중 | % |
| | 118 | GDP 대비 국가세수수입 비중 | % |
| | 119 | 총 재정지출 대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비율 | % |
| | 120 | 상품/서비스 수출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중 | % |
| | 121 | 인터넷 사용자비율 | % |
| | 122 | 인구 100명당 유선 고속인터넷 사용자수(속도별 분류) | |
| | 123 | 개발도상국의 통계능력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각종 자원의 달러 가치 | 만 달러 |

자료: PRC(2016).

○ **최근 평가 결과**

123개 평가지표 중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총 30개 항목으로, 전체 지표의 24%를 차지한다. 상황이 양호한 편이고 노력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표는 총 84개로, 전체 지표의 68%를 차지한다. 상황이 열악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표는 총 9개로, 전체 지표의 8%를 차지한다.

SDG 13과 SDG 16 두 항목은 이행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에 가담하였다.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각종 범죄를 처벌하고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였다.

SDG 목표 10과 SDG 12 두 항목은 목표 달성 난이도가 높다. 국가 내부적·국가 간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공공서비스 균등화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니계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과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녹색 생산, 녹색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방형 성장방식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만 위안당 GDP 에너지 소비, 수자원 소비, 오염물질 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절댓값은 높은 실정이다. 이 밖에 일반 국민과 기업의 녹색 소비, 녹색 생활의식 역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13개 항목 목표의 경우 현재 이행 상황이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SDG 목표 1 빈곤 해소지표: 중국은 지속가능발전 의제 중 빈곤 감소와 국가 차원의 빈곤 탈피사업을 결합하여 추진하였다.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빈민 구제와 빈곤 탈피 기본 방침을 시행하였으며 관련 업무기제 및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 SDG 목표 2 기아 해소, 식량 안보: 중국은 여러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집단 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식량생산성 제고, 영양불량 문제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SDG 목표 3 건강과 웰빙: 일부 지속가능발전목표(임산부 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신생아사망률 등)의 지표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노령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위생, 건강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에이즈, 결핵 등 전염병 방제 등 보건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본적인 공공보건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SDG 목표 4 교육: 중국은 단계별·유형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중국의 교육 보급률은 중등 이상 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였다. 앞으로는 도시-농촌 의무교육 통합 개혁을 추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창업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특수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SDG 목표 5 양성평등: 중국 정부는 양성평등을 기본 국책으로 삼고 양성평등,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여성과 여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중국 내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 남존여비의 전통관념이 여성, 여아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여성, 여아의 발전 수준 격차가 크다. 이에 관련 법률정책시스템을 개선하여 여성의 의사결정 및 경영 참여비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존중하고 여아를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SDG 목표 6 물과 환경 위생: 중국은 수자원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오염 방지 액션플랜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식용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수분과 토사 유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수질 개선 사업, 수자원 보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용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SDG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중국은 에너지 구조조정과 에너지 청정화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 사용 가능 인구비율이 향상되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연간 이용량도 증가하였다. 향후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청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은 차세대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SDG 목표 8 경제성장과 취업: 중국 경제는 현재 중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체질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취업, 창업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뉴 노멀'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일자리 총량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

이 시급한 상태이다.

- SDG 목표 9 기초인프라 및 산업화: 기초 인프라(교통 인프라의 총 거리는 증가되었으며 통신을 위한 4G망)가 보완되고, 산업자원의 종합 이용 수준이 개선되었다. 또한 혁신에 힘입어 공급 측 개혁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발전은 빈곤지역의 기초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기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SDG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중국은 현재 신형 도시화 사업, 도농 녹화사업,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힘입어 중저소득자 거주환경이 개선되었고, 일인당 부정적 환경영향은 줄어들었으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재해 방어능력이 개선되었다. 향후에는 주택보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도농 저소득자의 주택수요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소재, 조립식 건축 등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표준 및 인재풀 구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SDG 목표 14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 해양 환경보호 및 해양자원의 이용개발능력이 개선되고 있다. 각종 해양오염 예방 및 관리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름철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부영양화 관리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SDG 목표 15 생태시스템 보호: 각종 자연생태시스템이 안정화되었고, 생태서비스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공급과 사회수요는 간극이 커 삼림복개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SDG 목표 17 전 세계 동반자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일대일로'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 중이며, 개발도상국 특히 후진국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 **향후 과제**

*중국 현지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체계 연구 및 구축 시급*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 현지 실정에 맞는 SDGs 지표체계 구축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표방법학, 지표 설정, 지표 목표치 설정 등 핵심 문제점의 경우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이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하루 빨리 국가 SDGs 이행 현황 관련 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유관부서가 이를 작성하고 혹은 제3자에게 평가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SDGs 이행을 향한 노력과 업무성과를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지역 간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니터링 및 통계 능력 강화, 데이터 리소스 통합, 데이터 교환 및 공유 기제 마련, 모니터링 및 심사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믿을 만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SDGs를 포함한 의제의 이행성과에 대한 측정은 의제 자체를 구성하는 '후속조치 및 검토' 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030 의제 및 SDGs 이행 상황 검토를 위한 UN 플랫폼은 기존 UN CSD(Commission on SD)를 대체하여 2013년 설립된 고위급정치포럼(HLPF)이다. HLPF는 지구적 이행성과와 선진국과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평가한다. 지구적 이행성과는 다음 세 종류의 보고서를 통해서 그 결과가 공유된다.[153]

- 연차 SDG 성과보고서(an annual SDG progress report)
- 지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대한 기관 간 TF 연차보고서(an annual Inter-agency Task Force Report on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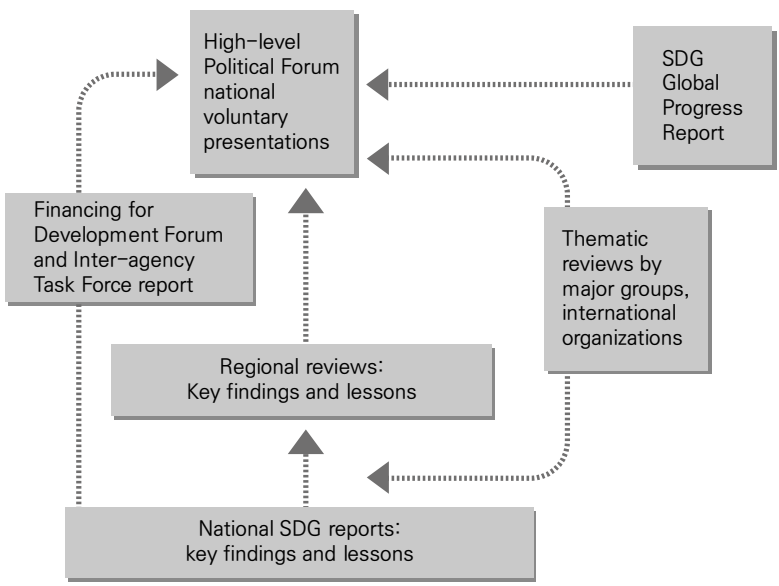
HLPF는 매년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지구적 이행성과 검토와 상응하는 방식으로 측정된 개별 회원국의 이행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HLPF를 주제하고 있는 유엔 DESA는 이러한 회원국의 의제 이행성과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국가 검토 준비를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preparation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국가단위 검토의 핵

153) UNDG(2017).

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UN DESA, 2018).

- SDGs 이행 및 검토 주체
- 국가발전계획, 지속가능발전 전략, 분야별 정책·전략·계획 등에 SDGs 반영
- 지속가능발전 세 측면의 통합 노력
- SDGs 이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고려
-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 제도적 장애요인 등과 같은 구조적 이슈
- 모든 SDGs의 이행 성과 및 현황
- 이행수단(MoI) 동원 현황, 문제점, 추가적 자원 필요

그림 3-3 다양한 지역적 범위의 SDGs 이행 검토




자료: UNDG(2017).

##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한국과 중국의 이행체계를 국가단위 검토의 핵심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국가의 시스템은 국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양 국가의 이행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예를 들어, 각 국가의 부처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국의 현재 이행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SDGs 이행 및 검토 주체

우리나라의 SDGs 이행은 그 역할에 따라 몇 개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HLPF를 비롯한 국제적 SDGs 이행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단, UN 통계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지구 SDGs 지표의 선정 검토와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 등의 업무는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버전의 SDGs라 할 수 있는 K-SDGs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 중심으로 'SDGs를 위한 부처 간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의 수립, 이행성과 모니터링, 정책 조정과 소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에는 43개 부처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은 관련된 SDGs와 세부목표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154]

154) UN DESA(2017).

### 2) SDGs의 국가 정책·전략·계획 통합 및 주류화

우리나라의 SDGs 통합 및 주류화 작업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통해 처음 추진되었다. 201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포럼,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에 확정되었는데, 과거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수립 과정 중 채택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계획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4대 목표, 14개 부문별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14개 부문별 전략을 17개 SDGs와 상응하도록 구성하였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 과정에 SDGs 주류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국제협력 관련 SDGs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기본 원칙과 재원계획을 정하는데, 2015년 11월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 의제 및 SDGs를 계획 수립의 배경에 반영하는 한편,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이 마련되었다.

중국은 2016년 9월 19일, 71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직 개도국 지위에 있는 중국은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서 '개발'이 여전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비교적 빠른 시점에 충실한 이행 의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 이행계획에는 17개 SDGs와 169개 세부목표를 국가발전 마스터플랜에 통합하고, 이를 특별 계획에서 수정 및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3

차 5개년 규획』은 2030 의제의 이행을 공약하고, 2030 의제와 중국 중장기 발전전략 간 시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DGs를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구체적 과제로 전환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 주도적 발전전략을 위한 국가개요', 『국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계획(2015-2030)』, '정보기술 발전전략을 위한 국가개요', 사회 분야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빈곤 퇴치를 위한 승리의 여지를 확보하기로 한 결정', '건강한 중국 2030 개관', 그리고 환경 영역에서는 『중국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및 실행계획(2011-2030)』, 『기후변화 국가계획(2014-2020)』이 발표되었다.[155]

### 3)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우리나라의 경우 SDGs 이행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메커니즘 계획은 없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중국은 국가이행계획을 통해 2030 의제 이행을 지원할 제도, 메커니즘, 그리고 정책 마련을 위한 4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관련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법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2030 의제 이행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가 주요 책임을 맡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55)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2016)과 China's Progress Report(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를 참고한다.

### 4) 이행수단(MoI) 동원 현황, 문제점, 추가적 자원 필요

중국은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다음 세 전략을 포함한다. 첫째, 재정 및 세제 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의제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을 합리화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이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포괄적 금융을 촉진한다. 둘째, 혁신적 협력 모델의 개발이다. 정부와 사회자본 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본이 지속가능발전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 개념, 기술적 전문성, 기타 가치 자원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5) SDGs의 이행성과 측정 및 검토

중국은 지구 SDGs 지표를 토대로 중국 실정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163개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를 마련하였다. 평가지표의 목표 값은 가늠이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분석법을 이용하여 163개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163개 지표 중 40개 지표는 연속적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 이에 데이터 확보 여부에 따라 연속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23개 지표를 선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지표의 평과 결과는 세 가지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다. 빨간색은 상황이 좋지 않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녹색은 조기 달성 혹은 달성이 수월한 경우, 노란색은 이행이 순조로운 상태로 노력을 통해 달성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3-4 한국과 중국의 SDGs 이행체계 비교

| | 한국 | 중국6 |
|---|---|---|
| 국가전략 주류화 |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SDGs 반영 | • 13차 경제사회 5개년 개발계획에 SDGs 반영 |
| 제도적 체계 | •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가 이행 사항에 따라 역할 분담 | • 외교부 중심으로 설립된 '부처 간 SDGs 메커니즘'이 이행 관련 사항을 담당 |
| 국가 이행계획 |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일명 'K-SDGs' 개발 중 | •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2016년) |
| 의회 | • SDGs 이행 지원을 위해 '국회 UN SDGs 포럼' 설립 | • 2015년부터 중국 인민의회는 SDGs 이행이 반영된 개정 법률을 채택 |
| 모니터링과 검토 | • 통계청이 국가단위에서 SDGs 지표를 산정하여 모니터링 | • 163개 국가지표를 선정 |

자료: UN DESA(2018)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 1. 개요

## 가. SDG 협력의 필요성

### 1) 최근 한·중 관계 동향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156] 특히 2013년, 2014년 공동성명과 2015년 FTA 발효 이후 양국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전체 협력관계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2013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및 이행계획',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그리고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포괄적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157]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부속서는 양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치협력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 '인문 유대 강화', '인적교류 지원', '영사 분야 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되었다. 이 공동성명이 합의된 다음 해인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한·중 공동성명'이 채택된다. 이 성명에서는 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 ②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의 전략적 경

156) 외교부(2017b).
157) 공동성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2013)를 참고한다.

제통상 및 산업 협력을 확대, 그리고 ③ 국민 체감의 인적·문화적 쌍방향 교류를 통해 양 국민 간 정서유대감 심화, 3가지를 미래 관계 발전방향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158]

- 정치·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정례화 및 양국 외교장관 간 교환방문 연례화
-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체제 설치
-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설립

표 4-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목표 |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화 |
| 원칙 | ① 상호 이해와 신뢰 제고<br>②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br>③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br>④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 |
| 3대 중점 추진방안 | ① 정치·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br>② 경제·사회 협력 강화<br>③ 양국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 증진, 특히 인문유대 강화 |
| 5대 세부 이행계획 | ① 지도자 간 상시 소통, 외교장관 상호방문 정례화 및 핫라인 구축 등<br>②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사업 개발, 사회 분야 다양한 협의채널 확충<br>③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 설치, 교육·관광·문화·예술 등 교류 강화<br>④ 영사협력 강화<br>⑤ 지역·국제무대 협력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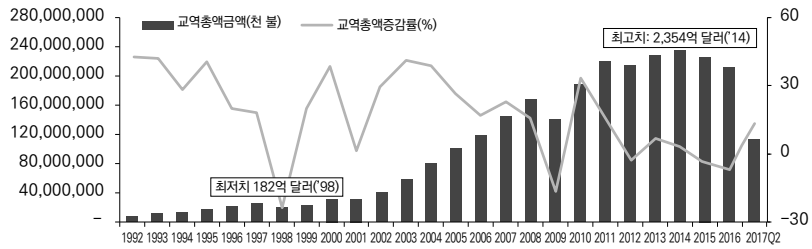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2013)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은 앞서 두 해 동안 구축된 양국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이행된 해였다. 9월에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158) 외교부(2015).

이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어 10월에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방한하여 양자회담과 함께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4년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양국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체제'가 7월에 출범하였고,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이 11월에 개최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가 개최되었고, 50개의 인문유대 세부사업이 이행되는 등 문화적 교류도 확대되어 나갔다.[159]

그림 4-1 한·중 교역 동향




자료: 김윤희(2017).

2016년 이후 양국 관계와 지역 전체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교역액은 2,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였다.[160] 이는 양국 협력관계가 웬만한 국제정세에 쉽게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59) 외교부(2016a).
160) 외교부(2017a).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존의 한·중 공동 노력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환경 관련 목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 분야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과 중국의 첫 환경협력협정은 1993년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이다.[161] 이후,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 및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한·중 간의 보다 긴밀한 환경협력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대기질 정보의 준실시간 공유, 대기오염 예경보 모델 공동연구 등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7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부 장관이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하며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4개 우선협력 분야(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에서의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베이징에 환경협력계획의 이행기구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환경협력의 우선 협력 분야와 협력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협력 분야: 대기, 물, 토양 및 폐기물, 자연보전
- 협력방식: 정책교류, 산업·기술 협력, 공동연구, 기타 양국이 합의한 협력 형태

또한, 한·중·일 기존의 3국 협력관계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공동선언문 등을 통하여 확

161) 추장민 외(2017), p.63.

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3국 공동선언문 중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성명(2009)'[162],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협력문서(2011)'[163],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2012)'[164],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015)'[165]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된 이슈들을 파악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에서는 3국은 상호 이익과 윈-윈 결과를 추구한다는 기조하에서, 녹색 경제성장 및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제시하는 주요 협력 분야는 환경 부문의 10개 환경 우선 협력 분야, 3R을 포함한 자원순환, 과학기술 등을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 하천 및 수자원 통합관리, 산림 및 야생동물 보호,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농업, 기후변화 부문 등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협력문서'에서 3국은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의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 도입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였다. 저탄소 기술 및 생산물의 확산을 통한 협력의 효과성·효율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서 연구/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162) 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다.
163) 2011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64)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65) 201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하여 3국은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이 MDGs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가 생태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에 있어 영원한 주제임을 명시하였으며,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하여 3국 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3국 간의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본 성명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는 주로 환경 분야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SDGs 17개 목표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협력관계와 정합성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협력기준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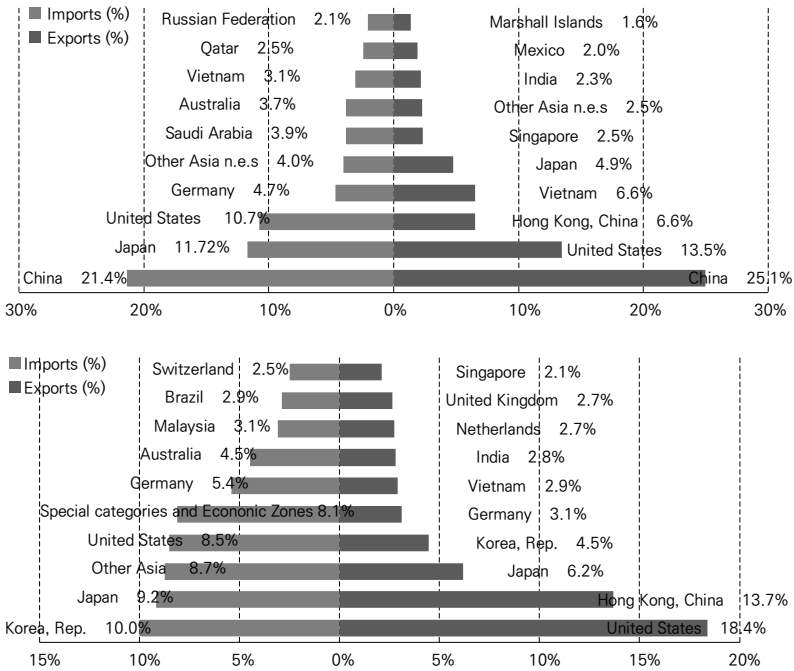
### 3) SDGs 이행 협력 필요성

**○ 양국 협력관계 중요성과 SDGs 이행 연관성**

한·중 협력관계는 FTA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협력은 물론 환경, 사회, 안보,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그림 4-2 한국과 중국의 상위 수출·수입국 현황(2016년 기준)




자료: UN ESCAP(2017.10.30),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Briefs", 검색일: 2018.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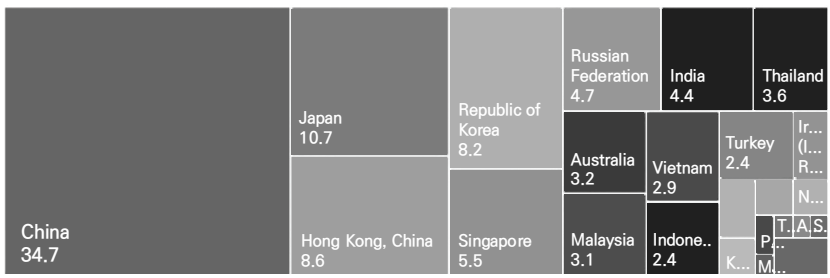
양국의 SDGs 대응은 기존 분야별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의 SDGs 이행 계획을 관련된 분야별 협력관계에 반영함으로써 SDGs 이행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 **한·중 양국 및 동북아지역 협력을 통한 SDGs 이행 시너지**

양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예: 인프라, 무역, 산업,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국제협력 등). 이들 목표는 기존 협력관계의 강화와 새로운 협력 수립을 통해 효과적 이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수출국(2016년 기준)




자료: UN ESCAP(2017a), p.6.

○ **소지역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구적 수준에서의 SDGs 이행은 HLPF가 IAEG의 SDG 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때 개별 회원국은 '자발적 국가검토(VNRs)'를 통해 국가단위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의 지역 위원회들은 지역단위의 이행성과를 HLPF에 제공하고 있다. 2030 의제는 이와 더불어 '소지역(sub-regional)'단위의 SDGs 이행성과 검토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 이행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양국은 '동북아지역 SDGs 이행 검토체계' 개발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SDGs 달성을 촉진할 수 있다.

##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국가단위 2030 의제 이행의 핵심은 국가, 지역 및 지구적 단위의 분야별 정책, 이니셔티브에 SDGs를 비롯한 의제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별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SDGs를 기존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분야별·부처별 계획에 SDGs 및 세부목표 일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지역(regional) 및 소지역(subregional) 차원의 협력은 국가단위 이행과 더불어 SDGs 이행의 핵심적 요소이다. (소)지역단위 이행 협력은 국가 간 연계된 목표를 협력 이행함으로써 참여 국가 모두의 SDGs 달성을 제고하거나, 혹은 취약국가 지원 등을 통한 지역 SDGs 달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될 것이다.

'2030 의제'는 협력을 의제 이행의 한 요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2030 의제'를 그 안에 구체화된 목표인 '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 계획'으로 정의하고, '협력'을 의제 이행의 기본 수단으로 제시한다.[166] SDGs 달성을 포함한 의제 이행의 책임과 권한은 기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에 있지만, 구체적 이행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유엔 DESA는 SDGs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SDGs 협력의 영향을 극대화하기(Maximising the impact of partnerships for the SDGs)'라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167] 이 가이드북은 'SDGs를 위한

166) "*본 의제는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 …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업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2030 의제 서언)

협력(partnerships for the SDGs)'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은 그 노력이 정부 간 합의된 발전 목표 및 공약의 이행에 기여하는 정부, 국제기구,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다중 이해당사자 이니셔티브이다." (Sibbe, Reid, and Gilbert, 2018)

이 가이드북은 SDGs 협력관계를 자원의 결합방식과 협력을 통해 얻는 편익 유형에 따라 '영향/교환', '결합/통합', '변환'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관계는 참여자 일방 혹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SDGs 이행에 도움이 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관계이다. 자원의 교환이 상호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참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살펴본 유형의 협력관계와 구분된다.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관계는 참여자 모두의 편익을 위해 각자의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상대방에게 더 가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큰 공동의 편익을 얻기 위해 상호보완적 자원을 결합하는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변환' 유형의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방식의 관계이다. 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의 근본적인 변환까지도 고려한다는 면에서 '결합/통합' 유형과 구분된다.

---

167) Sibbe, Reid, and Gilbert(2018).

표 4-2 UN DESA의 SDGs 협력관계 유형

| | 영향/교환<br>Leverage/Exchange | 결합/통합<br>Combine/Integrate | 변환<br>Transform |
|---|---|---|---|
| | | | |
| 정의 | - 한쪽이 상대방 이행에 기여<br>- 한쪽 혹은 양쪽의 이행 제고를 위해 자원을 교환 | - 개별적 이행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이 자신의 자원을 결합 | -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행위자들이 공동 작업 |
| 특징 | - 거래, 일방적 이전<br>- 기술, 지식, 자금의 상호 교환<br>- 양쪽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포함 | - 병행 생산, 상호책임성, 혁신적 접근<br>- 새로운 접근을 개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과 창조적 대화 포함 | - 복수 행위자들의 독특하고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포함<br>-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참여를 위한 복수 이해당사자 대화가 요구됨 |
| 적용 여건 | - 한쪽이 상대방에게 가치가 더 높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통해 양쪽 모두에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경우 | - 이슈가 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경우 |

자료: Sibbe, Reid, and Gilbert(2018), p.9.

##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최근에 새롭게 구축되는 국가 간 협력관계들은 2030 의제와 관련된 SDGs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만, 의제 채택 이전에 수립된 협력관계의 경우 의제나 SDGs 이행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개별 협력관계들은 그 고유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30 의제'는 그 21번째 단락에서 의제 이행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적·지구적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적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 "우리 모두는 국가들의 현실 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 책과 우선과제를 존중하는 한편, 자국 내에서 그리고 지역 및 지구

적 차원에서 이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국제규칙 공약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특히 개도국)의 정책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에서 지역·소지역 차원, 지역 경제통합 및 상호연계성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지역·소지역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개발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옮기도록 촉진할 수 있다." ('2030 의제' 21번째 단락)

'2030 의제'를 통해 합의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의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은 SDGs 관련 국가 간 협력 모두에 적용된다. 의제는 개별 회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국가 고유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모든 국가 간 협력관계의 SDGs 일관성(consistency)'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신 이 원칙이 기존 국가 간 협력관계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개별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국가 간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원칙 및 목표와 정합적(coherent)이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168]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간 협력관계에 '2030 의제' 및 SDGs의 반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 간 협력관계가 '2030 의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의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개 영역(areas)에서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협약, 조약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7

168)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지구적 협력에 관한 목표인 SDG 17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정합성 제고'를 그 14번째 세부목표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위한 정책정합성 제고 메커니즘을 도입한 국가수'를 그 측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 SDGs와 169개 세부목표 설정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그 이행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기도 하다.[169]

둘째, 국가 간 협력관계는 각 개별 국가의 SDGs 이행노력과 '수직적 정합성'(vertical coherence)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지역적 범위에서의 SDGs 이행 노력 간 정합성을 의미하는 수직적 정합성은 과거 개발협력 분야에서 핵심 평가요소 둥 하나로 사용던 개념인데, '2030 의제' 채택과 함께 최근에는 SDGs 맥락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다.[170]

셋째, 의제 채택 이후 유엔기관을 중심으로 지구적·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별 이니셔티브들이 추진되고 있다. 유엔은 'SDGs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the SDGs)'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SDGs 목표별로 분류된 파트너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71] 이 플랫폼의 목적은 분야별 파트너십을 소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구적 SDGs 달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간 협력관계에 SDGs를 반영한 또 하나의 접근은 이러한 분야별 파트너십과 연계하는 것이다.

###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현행 한·중 협력관계에 SDGs를 반영하는 소위 '주류화(mainstreaming)' 과정은 양국의 효과적 SDGs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협력관계의 지속가능발전 유효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주류

169) '2030 의제'의 원칙들은 의제 서문과 18~38번째 단락에서 제시되었다.
170) SDGs 맥락에서의 정책정합성 개념에 대해서는 OECD(2015, 2018)를 참고한다.
171) 이 온라인 플랫폼 주소는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s/이다.

화 작업은 개별 협력관계별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양국 협력관계에 반영되어야 할 '2030 의제' 관련 원칙

'2030 의제'에는 17개 SDGs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체화되는 의제의 기본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들은 의제의 채택과 함께 포괄적으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SDGs 및 세부목표로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SDGs 이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제 내용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핵심적 원칙들을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제 이행과 이를 위한 협력**: 모든 국가와 전 세계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글로벌 개발과 상생 협력에 공동으로 헌신('2030 의제' 18번째 단락)
- **국제적 규약 준수**: 의제는 유엔 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목적과 원칙,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 인권조약들, 그리고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2005 World Summit Outcome)를 따름('2030 의제' 10번째 단락)
- **양성 평등**: 지구·지역·국가 차원에서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과 관련한 제도 지원 강화에 대한 투자를 현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2030 의제' 20번째 단락)
- **지역·소지역 협력**: 지속가능개발에서 지역·소지역 차원, 지역 경제통

합 및 상호 연계성의 중요성('2030 의제' 21번째 단락)

○ **빈곤 퇴치**: 2030년까지 극빈 근절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의 중요한 역할과 포용적 성격을 재확인하고, 영양에 관한 로마 선언 및 행동 계획(Rome Declaration on Nutrition and the Framework for Action)을 환영('2030 의제' 24번째 단락)

○ **양질의 교육**: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기술 직업훈련 등 모든 수준에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2030 의제' 25번째 단락)

○ **신생아·아동·모성 보호**: 2030년 이전까지 모든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함으로써 신생아·아동·모성 사망 감소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룬 진전을 가속화하고, 가족계획·정보·교육 목적을 포함하여 성·생식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확보하며, 지속가능개발에 주요한 도전이 되는 행동·발달·신경 장애를 포함한 만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약속('2030 의제' 26번째 단락).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2030 의제' 27번째 단락)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재화서비스 생산·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2030 의제' 28번째 단락)

○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협상하는

주요한 국제 정부 간 포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가 초래하는 위협에 단호히 대처('2030 의제' 31번째 단락)

○ **생물종다양성**: 대양·바다 및 담수 자원뿐 아니라 산림, 산 및 건조지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며,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야생동물을 보호할 것과, 지속가능 관광 진흥, 물 부족 오염 문제 대응, 사막화·먼지폭풍·토지황폐화·가뭄 관련 협력 강화 및 회복력·재난위험 경감 증진을 결의('2030 의제' 33번째 단락)

○ **세계시민의식과 동동의 책임**: 문화 간 이해, 관용, 상호 존중 및 세계시민의식과 공동의 책임 윤리를 육성('2030 의제' 36번째 단락)

○ **완전한 자결권과 독립성**: 경제·사회 개발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식민·외국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완전한 자결권 실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조치와 행동('2030 의제' 35번째 단락). 유엔 헌장에 따라 국가들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필요성을 재확인('2030 의제' 38번째 단락)

2030 의제는 지구적 이행의 실질적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재원 조달, 능력 배양, 환경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이행수단 세부목표(MoIs)'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재정 관련 협력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제3차 개발재원총회(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172]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 공적 자원', '국내·국제 민간 비즈니스 및 금융', '국제개발협력',

172) '2030 의제' 62번째 단락

‘국제무역’, ‘부채’, ‘체계적 이슈’, 그리고 ‘과학, 기술, 혁신 및 능력 형성’의 7개 분야로 구분된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30 의제’의 일부로 봐야 하기 때문에 SDGs 이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적 사항에 해당한다.

### 2) 국가단위 SDG 정책과 양국 협력관계 간의 수직적 정합성 제고

‘2030 의제’의 SDG 17은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 강화를 위해 14번째 세부목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정합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을 SDGs 이행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정책정합성은 OECD가 국제협력 맥락에서 국내적 정책과 국제적 정책 간의 정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던 개념인데, ‘2030 의제’ 채택 이후 SDGs 이행 노력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173]

정책정합성 개념은 수평적 정합성(horizontal coherence)과 수직적 정합성(vertical coherence)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수평적 정합성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의 정책 간 정합성을 의미하고, 수직적 정합성은 서로 다른 지역적 범위 정책 간의 정합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별 협력관계의 수직적 SDGs 정합성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 한·중 협력관계를 유형별로 조사하고 이를 17개 SDGs에 따라 분류하였다.

173) SDGs 맥락에서 정책정합성 개념에 대해서는 OECD(2015)를 참고한다.

표 4-3 SDGs 목표별 한·중 협력관계

| | 회의, 위원회, 협정 | 협의회, 포럼 |
|---|---|---|
| 1. 빈곤 | | • 한중 사회보험협정<br>• 한중 사회보장협정 |
| 2. 기아, 지속가능한 농업 | • 한중 FTA 공동연구농업전문가회의<br>• 한중 농업협력회의<br>•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 • 한중 사회적 경제포럼<br>•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br>• 한중 식품전문가협의회 |
| 3. 건강, 웰빙 | • 한중 의학교류촉진위원회<br>• 한중 동물위생·검역협력협정 | |
| 4. 양질의 교육 | • 한중 IT자격상호인정협정 | • 한중 대학총장 포럼<br>• 한중 역사가포럼<br>• 한중 유학생포럼<br>• 한중 인문학포럼<br>• 한중 차세대리더포럼<br>• 한중 청년리더포럼<br>• 한중 청년포럼 |
| 5. 성평등 | | • 한중 여성지도자포럼 |
| 6. 깨끗한 물과 위생 | • 한중 동물위생·검역협력협정<br>• 한중 환경협력협정 | |
| 7. 에너지 | •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 • 한중 에너지민관협의회<br>• 한중 에너지협의회 |
| 8. 양질 일자리와 경제성장 | • 한중 경제장관회의<br>• 한중 경제공동위원회<br>• 한중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 | • 한중 경제포럼<br>• 한중 경제협력포럼<br>• 한중 사회적 경제포럼 |
| 9. 산업, 혁신, 인프라 | • 한중 산업장관회의<br>• 한중 산단 국장급 실무회의<br>• 한중 게임산업공동위원회<br>• 한중 전파국장회의<br>•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br>• 한중 특허청장회의<br>• 한중 투자협력위원회<br>•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br>• 한중 복합화물차운송협정<br>• 한중 항공협정 | • 한중 기업인고위급포럼<br>• 한중 문화산업포럼<br>• 한중 산업협력투자협력포럼<br>• 한중 일대일로기업고위급포럼<br>• 한중 자동차산업발전포럼<br>• 한중 저작권포럼<br>• 한중 해외건설포럼<br>• 한중 산단 차관급 협의회<br>•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
| 10. 불공평 감소 | | • 한중 사회공헌포럼<br>• 한중 사회보험협정<br>• 한중 사회보장협정 |
| 11.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 • 한중 지사·성장회의<br>•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br>• 한중 환경협력계획 | • 한중 사회적 경제포럼<br>• 한중 관광실무협의회<br>• 한중 관광통역사협의회<br>• 한중 민간문화교류협의회 |
|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 • 한중 재계회의<br>•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br>• 한중 환경협력계획<br>• 한중 환경협력협정 | • 한중 기업인고위급포럼<br>• 한중 비즈니스포럼<br>• 한중 자원순환포럼 |

표 4-3 계속

| | 회의, 위원회, 협정 | 협의회, 포럼 |
|---|---|---|
| 13. 기후변화 대응 | • 한중 기상청 협력회의<br>•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br>• 한중 환경협력계획 | |
| 14. 해양생태계 | •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br>• 한중 어업공동위원회<br>•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br>•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br>• 한중 환경협력계획<br>• 한중 어업협정<br>• 한중 환경협력협정 | |
| 15. 육상생태계 | • 한중 환경협력계획<br>•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br>• 한중 환경협력협정 | |
| 16. 정의, 평화, 제도 | •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br>• 한중 국방실무회의<br>•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br>•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br>• 한중 수색구조협정<br>• 한중 군사정보협정<br>• 한중 영사협정<br>• 한중 평화협정<br>• 한중 해상구조협정<br>•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br>• 한중 형사 사법공조조약 | • 한중 고위언론인포럼<br>• 한중 대테러협의회<br>• 한중 우호교류협의회<br>• 한중 의원외교협의회<br>• 한중 동아시아협의회 |
| 17. 국제적 협력 |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br>• 한중 기초과학교류위원회<br>• 한중 전파국장회의<br>•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br>• 한중 국세청장회의<br>•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br>• 한중 조세정책회의<br>• 한중 IT자격상호인정협정<br>• 한중 영사협정<br>•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br>• 한중 자유무역협정<br>• 한중 조세협정<br>• 한중 통화스와프협정<br>• 한중 조세조약 | • 한중 FTA포럼<br>• 한중 경제협력포럼<br>• 한중 공공외교포럼<br>• 한중 과학협력포럼<br>• 한중 미래포럼<br>• 한중 비즈니스포럼<br>• 한중 새만금사업투자협력포럼<br>• 한중 저작권포럼<br>• 한중 지도자포럼<br>• 한중 경제교류촉진협의회<br>• 한중 민간경제협의회<br>• 한중 통상민관협의회<br>•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 |

주: 분야별 한·중 협력관계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 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조사하여 수집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3) 지구적 차원의 SDGs 이니셔티브와 연계

한·중 협력관계에 SDGs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접근은 각 협력관계를 관련 유엔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 등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각 협력관계가 관련된 지구적 SDGs 이행 노력과 상충하지 않도록 보장함은 물론, 지역 차원의 SDGs 이행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다양한 국제협약과 지구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 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이나 이니셔티브들은 SDGs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제적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도 주요 협약 및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양국 협력관계에 연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UN DESA는 36개 유엔기관의 SDGs 이행 노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 '유엔 시스템에 지속가능발전 세 측면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ystem)'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유엔 기관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과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174]

174) UN(2018a).

표 4-4 유엔 기관의 SDGs 이행 노력 현황

| 기관 | 주요 SDGs 이행 노력 |
|---|---|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 2017-2019년 경영계획에 SDGs 이행을 반영 |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 2018-2019년 중기전략에 SDGs 이행을 통합<br>- 86개 이상의 세부목표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연관<br>- 전체 지구 SDGs 지표 중 26개 환경 관련 지표를 관리 |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들의 능력 강화 및 국가자발적 검토 지원<br>- SDGs와 인권 간 상호연계성(interlinkages)에 대한 인식 증진 |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 회원국에 통합적 정책 자문 제공 및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및 능력 개발 지원<br>- '2030 의제'와 SDGs의 성-책임적(gender-responsive) 이행 지원 |
|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 - SDG 1(빈곤)과 SDG 17(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2018-2021 기간 전략 수립<br>- 로컬 파이낸스 솔루션을 통한 SDGs 달성에 기여 |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 SDG 11(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에 전략적 우선순위<br>- 2015년 보건 전략과 물·위생 전략을 수립<br>-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강력히 추진<br>- Save the Children과 함께 Global Coalition to End Child Poverty 출범 |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 기관의 성과기반 관리코드를 해당 SDGs에 연계 |
| UN-OHRLLS | - 기관의 사업들과 SDGs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시너지를 제고<br>- '2030 의제'를 사업 예산에 통합적으로 반영 |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 혁신의 촉진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 |
| World Trade Organization | - 기관 내에 무역 관련 SDGs 달성 모니터링을 위한 '부서 간 태스크포스(interdivisional task force)' 설치 |

자료: UN(2018a)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한국과 중국, 양국은 앞서 살펴본 '영향/교환'과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관계 맥락에서 다양한 SDGs 이행 협력기회를 찾아 볼 수 있다.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협력 수요에 대해서는 SDGs 목표별 정책과제를 고찰하고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도출하였고,

중국의 협력 수요에 대해서는 협동연구기관인 중국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는 일관된 평가체계로 한·중 양국의 SDGs 달성 수준을 측정한 SDSN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도출하였다. 양국이 모두 낮은 성과를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관계가 높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 1) 우리나라의 SDGs 이행 협력 수요

환경부는 2017년 추진한 연구용역,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 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의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정리하였다. 특히 '정책과제' 부문에서 국내 주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각 목표·세부목표 수준의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지역 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세부목표들을 관련 국내 정책과제와 함께 발췌하고 SDGs 이행 측면에서의 '협력 수요'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SDG 2. 기아 종식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2.b<br>•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현상 시정 | | •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 교정 협력 |

### ○ SDG 3. 건강과 웰빙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3.3<br>• 감염성 질환 퇴치 | *•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시체계의 지속적 강화*<br>*• 결핵에 대한 정보체계 강화* | • 감염병 감시체계 관련 협력 |

### ○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6.5<br>• 통합된 수자원 관리 이행 | *• 통일 대비 국제하천관리 정책 준비* | • 국제하천관리를 위한 협력 |

### ○ SDG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7.2<br>•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 증대 | *•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br>*• 관련 산업 인프라 강화* | • 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br>• 관련 국제표준 개발 협력 |
| 세부목표 7.a<br>•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8.9<br>•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 *•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유지* | •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 |

### ○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11.6<br>• 도시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 감축 |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협력 강화*<br>*•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비상채널 구축*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비상채널(HOT Line) 구축 |

○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12.7<br>•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확대 |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 • 한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경험 공유 |

○ SDG 13. 기후변화 대응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13.3<br>• 기후변화 교육 강화 | • *기후변화 관련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br>• *중국·러시아·국제기구를 활용한 북한 참여 유도* | • 북한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한·중 협력 |

○ SDG 14. 해양생태계 보존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14.4<br>• 불법조업 및 남획 방지 | •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규제 조치 마련*<br>• *항만국 검색 제도 및 어획증명제도 활성화* | • 불법어업 차단을 위한 협력 |

○ SDG 15. 육상생태계 보호

| 세부목표 | 관련 국내 정책과제 | 협력 수요 |
|---|---|---|
| 세부목표 15.2<br>• 산림파괴 중지 및 조림·재조림 확대 | • *국제기구·북한과의 산림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 | • 국제 산림협력 |

## 2) 중국의 SDGs 이행 협력 구상[175)]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13차 5개년 규획』이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개

175) 중국의 SDGs 이행 협력 수요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협동연구기관인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연구소'가 작성한 生态环境部环境规划院(2018)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전체 원고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발 사상과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개발 이념을 명확히 제시해 중국의 '2030 의제' 이행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였고, 중국 경제 발전과 새로운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은 지속가능 발전을 이행하는 데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176] 대외적으로는 '2030 의제'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그리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남남협력' 강화와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177]

○ SDGs 이행과 일대일로의 연계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하며, 관련 국가와 인프라 연결, 산업 투자, 생태환경, 금융 및 인문 교류 등 주요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7월까지 중국은 60여 개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 5월,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였다. '일대일로'는 인프라에 대한 목표인 SDG 9는 다른 사회, 환경, 경제 분야 목표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2030 의제'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78] 이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2030 의제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세계빈곤해소회의, 유엔기후회의, 국제 수질 및

176) 朱旭峰, 李远博(2018).
177) PRC(2016), p.14-16.
178)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일대일로 의미에 대해서는 UNDP and CCIEE(2017)을 참고한다.

토양보호 회의,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총회, 세계수자원회의, 세계호수회의, 해양환경보호를 통한 육지 오염 방지에 관한 정부 간 회의 및 제4차 세계도시포럼(WUF)을 차례로 개최해 빈곤 해소, 수자원 및 위생에 관한 MDG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은 SDGs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의제 이행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남남협력과의 연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100억 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최빈국 아세안 가입 국가에도 150억 달러의 신용차관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했다. 그리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와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의 기관에 (추가)기탁했으며,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 발전기금을 세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설립을 추진하고, 중국과 중동부유럽의 '16+1'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5년 9월,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유엔평화발전기금과 남남협력 원조기금의 설립, 국제발전지식센터, 남남협력개발대학 창설을 발표하였고, 2017년 5월, 남남협력 원조기금에 10억 달러를 추가 기탁할 것을 발표하였다. 2016년 4월에는 베이징대학에 남남협력개발대학을 창설하여, 일정 정원의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발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

성능력 강화를 돕고자 하였다.

###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하 SDSN)와 Bertelsmann Stiftung의 Sachs et al.(2018)는 국가별로 SDGs 달성 수준에 대한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179]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SDGs 달성 수준을 서로 비교하고 SDGs 달성을 위한 협력수요를 고찰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국가별로 SDGs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1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UN SDGs의 지표와 동일한 지표도 있고 다른 지표도 있다. 또한 국가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한국은 OECD 그룹에, 중국은 동아시아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각 그룹의 평가지표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양 국가에서 모두 적용된 지표에 한정하여 양국의 달성도를 비교하였다. 달성도는 평가치에 따라서 순서대로 녹색(4)-노란색(3)-주황색(2)-빨간색(1)으로 표시되는데, 달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녹색이며, 순서대로 노란색-주황색을 거쳐 빨간색은 달성도가 낮은 수준임을 나타낸다(본문의 〈표 4-5〉, 〈표 4-6〉, 〈표 4-7〉, 〈표 4-8〉에서는 녹색은 4, 노란색은 3, 주황색은 2, 그리고 빨간색은 1로 달성도를 표시하였다).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로 나타내었다. 각 지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계치(threshold) 값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179) Sachs et al.(2018).

표 4-5 한국과 중국의 SDGs 달성도 비교

| 목표 | 지표 | 한국 | | 중국 | |
|---|---|---|---|---|---|
| | | 점수 | 달성도 | 점수 | 달성도 |
| G1 | 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day (% population) | 0.5 | 4 | 0.4 | 4 |
| | Projected 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day in 2030 (% population) | 0.5 | 4 | 0.1 | 4 |
| G2 | Prevalence of under nourishment (% population) | 2.5 | 4 | 9.6 | 3 |
| | Prevalence of stunting (low height-for-age)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 2.5 | 4 | 9.4 | 3 |
| | Prevalence of wasting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 0.9 | 4 | 2.3 | 4 |
| | Prevalence of obesity, BMI ≥ 30 (% adult population) | 4.7 | 4 | 6.2 | 4 |
| | Cereal yield (t/ha) | 6.8 | 4 | 6.0 | 4 |
| |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 | 0.6 | 2 | 0.8 | 1 |
| G3 | Maternal mortality rate (per100,000 live births) | 11.0 | 4 | 27.0 | 4 |
| |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 1.5 | 4 | 5.1 | 4 |
| | Mortality rate, under-5 (per 1,000 live births) | 3.4 | 4 | 9.9 | 4 |
| | Incidence of tuberculosis (per 100,000 population) | 77.0 | 1 | 64.0 | 2 |
| | HIV prevalence (per 1,000) | 0.0 | 4 | 0.0 | 4 |
| | Age-standardised death rate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and chronic respiratory disease in populations age 30-70 years (per 100,000 population) | 8.3 | 4 | 18.1 | 3 |
| | Age-standardised death rate attributable to household air pollution and ambient air pollution (per 100,000 population) | 16.5 | 4 | 169.4 | 1 |
| | Traffic deaths rate (per 100,000 population) | 12.0 | 3 | 19.4 | 1 |
| |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 82.3 | 4 | 76.1 | 4 |
| | Adolescent fertility rate (births per 1,000 women ages 15-19) | 1.7 | 4 | 6.5 | 4 |
| |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 | 100.0 | 4 | 99.9 | 4 |
| | Surviving infants who received 2 WHO-recommended vaccines (%) | 98.0 | 4 | 99.0 | 4 |
| | Universal Health Coverage Tracer Index (0-100) | 81.6 | 4 | 70.0 | 3 |
| | Subjective Wellbeing (average ladder score, 0-10) | 5.9 | 3 | 5.1 | 2 |
| G4 | Net primary enrolment rate (%) | 96.8 | 3 | NA | - |
| | Mean years of schooling | 12.2 | 4 | 7.6 | 1 |
| | Literacy rate of 15-24 year olds, both sexes (%) | NA | - | 99.6 | 4 |
| G5 | Unmet demand for contraception, estimated (% women married or in union, ages 15-49) | 6.7 | 4 | 4.3 | 4 |
| | Female to male mean years of schooling, population age 25+ (%) | 89.1 | 3 | 91.1 | 3 |
| | Female to 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 | 71.4 | 4 | 80.8 | 4 |
| |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 17.0 | 1 | 24.2 | 2 |

표 4-5 계속

| 목표 | 지표 | 한국 | | 중국 | |
|---|---|---|---|---|---|
| | | 점수 | 달성도 | 점수 | 달성도 |
| G6 | High-income countries: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water services (%) | 98.0 | 4 | NA | - |
| | Other countries: population using at least basic drinking water services (%) | NA | - | 95.8 | 3 |
| | High-income countries: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sanitation services (%) | 98.5 | 4 | NA | - |
| | Other countries: population using at least basic sanitation services (%) | NA | - | NA | - |
| | Freshwater withdrawal as % total renewable water resources | 57.6 | 2 | 29.9 | 3 |
| | Imported groundwater depletion ($m^3$/year/capita) | 10.8 | 3 | 1.6 | 4 |
| G7 | Access to electricity (% population) | 100.0 | 4 | 100.0 | 4 |
| | Access to clean fuels & technology for cooking (% population) | 100.0 | 4 | 57.2 | 2 |
| | $CO_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electricity output ($MtCO_2$/TWh) | 1.1 | 3 | 1.6 | 1 |
| G8 | Slavery score (0-100) | 80.0 | 4 | 80.0 | 4 |
| | Adults (15 years +) with an account at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or with a mobile-money-service provider (%) | 94.9 | 4 | 80.2 | 4 |
| G9 |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sing the internet (%) | 92.8 | 4 | 53.2 | 2 |
|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 109.7 | 4 | 69.4 | 3 |
| | 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 (1= extremely underdeveloped; 7= extensive and efficient by international standards) | 5.7 | 4 | 4.5 | 4 |
|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Quality of trade and transport-related infrastructure (1=low to 5=high) | 3.8 | 4 | 3.8 | 4 |
| | The Times Higher Education Universities Ranking, Average score of top 3 universities (0-100) | 61.7 | 4 | 72.4 | 4 |
| | Number of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 articles (per 1,000 population) | 1.2 | 4 | 0.3 | 3 |
| |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 GDP) | 4.2 | 4 | 2.1 | 4 |
| G10 | Gini Coefficient adjusted for top income (1-100) | 32.3 | 3 | 41.9 | 1 |
| G11 |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of less than 2.5 microns of diameter (PM2.5) in urban areas($\mu g/m^3$) | 28.7 | 1 | 58.4 | 1 |
| | Improved water source, piped (% urban population with access) | NA | - | 90.0 | 3 |
| |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 (%) | 75.0 | 4 | 72.0 | 3 |
| G12 | E-waste generated (kg/capita) | 15.9 | 1 | 4.4 | 4 |
| | Anthropogenic wastewater that receives treatment (%) | 84.8 | 4 | 16.1 | 2 |
| | Production-based $SO_2$ emissions (kg/capita) | 14.5 | 3 | 25.5 | 2 |
| | Net imported $SO_2$ emissions (kg/capita) | 11.2 | 2 | -5.7 | 4 |
| | Reactive nitrogen production footprint (kg/capita) | 33.9 | 2 | 22.8 | 3 |
| | Net imported emissions of reactive nitrogen (kg/capita) | NA | - | -12.5 | 4 |

표 4-5 계속

| 목표 | 지표 | 한국 | | 중국 | |
|---|---|---|---|---|---|
| | | 점수 | 달성도 | 점수 | 달성도 |
| G13 | Energy-related $CO_2$ emissions per capita ($tCO_2$/capita) | 11.6 | 1 | 7.5 | 1 |
| | Imported $CO_2$ emissions, technology-adjusted ($tCO_2$/capita) | -1.6 | 4 | -0.8 | 4 |
| | $CO_2$ emissions embodied in fossil fuel exports (kg/capita) | 0.8 | 4 | 20.6 | 4 |
| G14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marine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26.8 | 2 | 18.8 | 2 |
| | Fish Stocks over exploited or collapsed by EEZ (%) | 7.0 | 4 | 8.6 | 4 |
| | Fish caught by trawling (%) | 45.1 | 2 | 60.0 | 1 |
| G15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terrestrial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36.6 | 3 | 52.1 | 4 |
|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freshwater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36.8 | 3 | 41.6 | 3 |
| | Red List Index of species survival (0-1) | 0.8 | 1 | 0.8 | 1 |
| | Annual change in forest area (%) | 3.5 | 3 | 5.0 | 2 |
| | Imported biodiversity threats (threats per million population) | 7.3 | 3 | 0.7 | 4 |
| G16 | Homicides (per 100,000 population) | 0.7 | 4 | 0.7 | 4 |
| | Prison population (per 100,000 population) | 107.4 | 3 | 120.5 | 3 |
| | Population who feel safe walking alone at night in city or area where they live (%) | 69.0 | 3 | 80.0 | 4 |
| | Government Efficiency (1-7) | 3.5 | 2 | 4.3 | 3 |
| | Property Rights (1-7) | 4.8 | 4 | 4.6 | 4 |
|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0-100) | 54.0 | 3 | 41.0 | 2 |
| | Children 5-14 years old involved in child labour (%) | 0.0 | 4 | NA | - |
| | Transf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exports) (constant 1990 US$ million per 100,000 population) | 0.6 | 4 | 0.1 | 4 |
| G17 | Government Health and Education spending (%GDP) | 11.6 | 2 | NA | - |
| | High-income and all OECD DAC countries: International concessional public finance,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GNI) | 0.1 | 1 | NA | - |
| | Other countries: Tax revenue (% GDP) | NA | - | 9.4 | 1 |
| | Tax Haven Score (best 0-5 worst) | 0.0 | 4 | 1.0 | 4 |

자료: Sachs, et al(2018), pp.148-149, pp.260-26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한국과 중국의 SDGs 목표별 지표의 달성도를 비교하여 양국의 협력 수요로서 가능성이 있을 항목을 도출하고자 ①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 ②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 ③ 양국 모두 진전이 필요한 부문

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은 〈표 4-6〉과 같다.

표 4-6 한국의 비교우위 지표

| 목표 | 지표 | 한국 | | 중국 | |
|---|---|---|---|---|---|
| | | 점수 | 달성도 | 점수 | 달성도 |
| G3 | Age-standardised death rate attributable to household air pollution and ambient air pollution (per 100,000 population) | 16.5 | 4 | 169.4 | 1 |
| | Traffic deaths rate (per 100,000 population) | 12.0 | 3 | 19.4 | 1 |
| | Subjective Wellbeing (average ladder score, 0-10) | 5.9 | 3 | 5.1 | 2 |
| G4 | Mean years of schooling | 12.2 | 4 | 7.6 | 1 |
| G7 | Access to clean fuels & technology for cooking (% population) | 100.0 | 4 | 57.2 | 2 |
| | $CO_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electricity output ($MtCO_2$/TWh) | 1.1 | 3 | 1.6 | 1 |
| G9 |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sing the internet (%) | 92.8 | 4 | 53.2 | 2 |
| G10 | Gini Coefficient adjusted for top income (1-100) | 32.3 | 3 | 41.9 | 1 |
| G12 | Anthropogenic wastewater that receives treatment (%) | 84.8 | 4 | 16.1 | 2 |
| | Production-based $SO_2$ emissions (kg/capita) | 14.5 | 3 | 25.5 | 2 |
| G15 | Annual change in forest area (%) | 3.5 | 3 | 5.0 | 2 |
| G16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0-100) | 54.0 | 3 | 41.0 | 2 |

자료: Sachs, et al(2018), pp.148-149, pp.260-26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두 번째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은 〈표 4-7〉과 같다.

표 4-7 중국의 비교우위 지표

| 목표 | 지표 | 한국 | | 중국 | |
|---|---|---|---|---|---|
| | | 점수 | 달성도 | 점수 | 달성도 |
| G6 | Freshwater withdrawal as % total renewable water resources | 57.6 | 2 | 29.9 | 3 |
| G12 | E-waste generated (kg/capita) | 15.9 | 1 | 4.4 | 4 |
| | Net imported $SO_2$ emissions (kg/capita) | 11.2 | 2 | -5.7 | 4 |
| | Reactive nitrogen production footprint (kg/capita) | 33.9 | 2 | 22.8 | 3 |
| G16 | Government Efficiency (1-7) | 3.5 | 2 | 4.3 | 3 |

자료: Sachs, et al(2018), pp.148-149, pp.260-26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세 번째로 한국과 중국의 양국이 모두 진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지표는 〈표 4-8〉와 같다. 양국이 진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지표들의 달성도는 '2' 및 '1'로 표시된 지표들로 파악하였다.

표 4-8 양국 모두 진전이 필요한 지표

| 목표 | 지표 | 한국 | | 중국 | |
|---|---|---|---|---|---|
| | | 점수 | 달성도 | 점수 | 달성도 |
| G2 |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 | 0.6 | 2 | 0.8 | 1 |
| G3 | Incidence of tuberculosis (per 100,000 population) | 77.0 | 1 | 64.0 | 2 |
| G5 |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 17.0 | 1 | 24.2 | 2 |
| G11 |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of less than 2.5 microns of diameter (PM2.5) in urban areas($\mu g/m^3$) | 28.7 | 1 | 58.4 | 1 |
| G13 | Energy-related $CO_2$ emissions per capita ($tCO_2$/capita) | 11.6 | 1 | 7.5 | 1 |
| G14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marine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26.8 | 2 | 18.8 | 2 |
| | Fish caught by trawling(저인망) (%) | 45.1 | 2 | 60.0 | 1 |
| G15 | Red List Index of species survival (0-1) | 0.8 | 1 | 0.8 | 1 |

자료: Sachs, et al(2018), pp.148-149, pp.260-26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세 분류로 나누어서 양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목표 안에서도 양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는 지표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서 서로 협력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신규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협력을 통하여 달성도의 증진이 가능하며, 양국 간 수요가 있는 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건강위해성을 감안한 미세먼지 관리, 전자폐기물 발생 관리, 적색목록 지수 관리를 위한 협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한국과 중국의 대기 분야 협력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180]과, '한-중

180)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2013),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베

환경협력계획(2018-2020)'[181]에서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의된 바 있음에 따라 건강위해성을 감안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질 공동연구단'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의 제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한·중·일 공동성명',[182]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183] 등에서 국가 간 협력 이슈로 다룬 바 있다. 또한 폐기물 분야는 한·중 환경협력(2018-2022)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기존의 협력 이슈로는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발생량 관리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181)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2017),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2017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환경보호부장 간에 체결되었다. 주요내용으로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4개 우선협력 분야(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에서의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18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성명(2009), 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주요 협력 분야는 환경부문의 10개 환경 우선 협력 분야(① 환경교육, 대중의 환경인식 및 참여, ② 기후변화, ③ 생물다양성 보존, ④ 황사, ⑤ 오염 통제(대기, 수질, 해양 환경 등), ⑥ 환경친화적 사회/3R/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⑦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⑧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 ⑨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⑩ 환경산업 및 기술), 3R을 포함한 자원순환, 과학기술 등을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 하천 및 수자원 통합관리, 산림 및 야생동물 보호,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농업, 기후변화 부문이다.

183)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015),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본 성명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주요 협력 이슈로 제17차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채택되는 9대 협력 분야((1) 대기질 개선, (2) 생물다양성, (3)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4)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5) 기후변화 대응, (6) 물·해양환경의 보전, (7) 환경 교육, 대중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8) 농촌 환경 관리, (9) 녹색경제로의 전환, 이와 관련하여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2015~2019'를 채택), 자원순환사회/순환경제/3R,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쓰레기/전기전자폐기물·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녹색경제 전환, 감염병 대응, 북극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SDSN에서 목표 15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택한 지표 중 하나인 적색목록지수는 UN SDGs의 세부목표 15.5의 지표와 동일하다. 세부목표 15.5는 "자연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는 것[184]이다. 기존의 공동성명문 등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협력은 양국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와 중국 국가임업국은 2014년 '한·중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185]하고, 2015년 장관대화를 통하여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사업을 위해 멸종위기종 원종의 확보에 중국의 협조를 요청[186]한 바 있다. 이에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협력관계의 제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SDSN에서 보고한 SDGs 목표별 달성 정도를 바탕으로 협력수요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들도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SN 외 다른 기관의 달성도 측정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동일 지표라 할지라도 달성도의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 양국의 SDGs 이행의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184) 김종호 외(2017) p.276.
185) 환경부 보도자료(2014.7.3).
186) 환경부 보도자료(2015.3.27).

##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의제의 채택을 통해 회원국들은 지구적 차원의 의제 이행성과는 물론 개별 회원국, 지역, 지방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이행성과에 대한 '주기적·포용적 검토(regular and inclusive reviews)'에 합의하였다. '후속조치 및 검토(FUR: follow-up and review)'는 SDGs, 이행수단(MoIs)과 더불어 2030 의제의 핵심 구성요소인데, 의제 이행성과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관찰되는 문제점이나 실패·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구적 단계에서 의제 이행 후속조치와 검토는 UN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LP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의 역할이다.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 단위 SDGs 이행성과 검토는 해당 지역 혹은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 회원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국가단위의 검토는 개별 회원국의 책임하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030 의제'의 이행성과는 기본적으로 각 목표 및 세부목표 측정을 위해 개발된 소위 'SDG 지표(SDG indicators)'를 통해 검토·평가된다. 이행성과 측정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는 의제의 채택과 함께 공식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할을 주도한 'SDG 지표에 대한 UN 기관 전문가그룹(IAEG-SDGs: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은 2016년 지구적 이행성과 검토에 활용될 지표체계를 발표하였다.

IAEG-SDGs는 개발된 '지구 SDG 지표체계(global SDG indicator

framework)'를 제70차 유엔총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2016년 3월 개최된 제47차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에서 합의되었다. 이후 지구적 지표체계는 2017년 7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개별 국가 및 지역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 지표를 개발·개선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는 글로벌 지표에 관련된 Tier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타데이터 작성과 보급을 권고하고 있다.[187]

의제는 국가단위의 검토와 함께 지역·소지역 단위의 검토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공유, 국가 이행성과 상호 검토, 그리고 지역 공동목표 설정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전체 및 참여 국가들의 이행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2030 의제는 이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지역 및 소지역 단계에서 후속조치 및 검토'를 지역 내 위원회 및 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30 의제는 회원국들이 국가단위의 SDGs 이행성과에 대한 '주기적이고 포용적인 검토'(regular and inclusive review)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는 SDGs의 정책 주류화, '이행수단(MoIs: Means of Implementations)'을 포함한 SDGs 이행성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성공요소 등을 포함한다. SDGs 이행성과 측정은 경제, 사회, 환경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서로 다른 측면과의 상호연관성(interlinkages)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조치 및 검토 과정은 중복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급적 기존 제도나 절차에 기초하여 수립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국가단위 검토와 더불어 지역(regional) 및 소지역(subregional) 단위

187) 김석호 외(2016).

이행성과 모니터링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소)지역단위 협력은 국가단위 검토를 보완하고 (소)지역에 특화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범위의 검토를 통해 지역적 단위 성과 측정과 함께 SDGs 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도전요인 식별이 가능해진다.

(소)지역단위의 검토를 통해 개별 국가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인접 국가의 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상호 검토하는 한편, 지역목표 설정을 통해서 지역 전체 이행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2030 의제는 이러한 (소)지역단위의 이행성과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지역단위 SDGs 이행성과 검토는 국가 단계의 이행 결과의 측정에 사용되는 '국가 공식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188] 또한 일정 기간의 성과를 기준 시점과 대비하여 측정하기 위해 사전에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준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SDGs 이행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자료와 통계의 형식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의 국가 간 차별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의제는 IAEG-SDGs가 제시한 지구 SDG 지표를 참고하여 국가, (소)지역 단위 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권고하고 기대하고 있다. IAEG의 지구 SDG 지표는 의제에 포함된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와 이행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범위가 넓고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 수준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역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데이터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189] 그리고 현재 양국가의 SDGs와

188) As national ownership is key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utcome from national-level processes will be the foundation for reviews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given that the global review will be primarily based on national official data sources.

관련된 지표는 국가별 현황을 반영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소) 지역 단위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지표를 검토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양 국가의 국가 SDGs 지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한국과 중국은 UN-SDGs의 지표를 검토하여, 각자 국가의 특성에 알맞은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수립을 진행 중이거나 수립 완료하였다. 한국은 K-SDGs 목표와 지표를 현재 수립중이며, 218개의 지표가 제안되었다. 중국은 128개의 지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UN-SDGs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별도의 국가 목표를 수립하지는 않은 것[190]으로 나타났다. 각 목표별 중점 추진지표를 설정하거나, 지표별 우선순위는 현재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각 목표별로 한국과 중국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서로 차이점이 나타난다.

G1 빈곤 퇴치의 경우 한국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지표들이 추가되어 있다. 최저 생계보장에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G2 기아 종식과 관련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농촌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3 건강과 웰빙 목표에서 한국은 출

189)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 의제는 관련 지역 포럼 설립·참여하고, UN 지역 위원회들(UN regional commissions)은 이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0) 한국의 경우 목표 내 세부목표는 UN-SDGs의 세부목표를 삭제하거나 한국 목표를 신규로 수립하였으나, SDGs 17개의 큰 틀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2018.10월 현재).

산장려, 흡연율 관리,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 등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는 열대 질병의 관리와 안전한 분만에 대한 지표들이 나타난다.

G4 양질의 교육 목표에서 한국은 ICT 교육, 교육의 형평성, 세계시민교육과 문해율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은 문맹률과 교육예산의 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G5 양성평등 목표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표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은 18개의 지표가 제안되었으나, 중국은 2개의 지표만이 수립되어 있다. 한국의 지표는 가정 및 성폭력, 성차별, 가사노동, 사회의 여성관리자 비율, 성교육과 피임실천율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국은 남녀 교육기회의 평등 수준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다.

G6 물·위생 관리 목표에서 한국은 관거시설과 관련된 지표,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농촌 화장실 보급 등의 지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G1의 농촌지역의 생활 수준의 제고(도농격차 해소)와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G7 에너지 지표와 관련해서 한국은 에너지 빈곤층, 건물의 에너지 효율, 친환경차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전력사용이 가능한 인구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G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물질발자국, 물질 소비량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무역추진 원조 이니셔티브' 원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G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목표에서는 한국이 총 7개의 지표를 제시한 데 반해, 중국은 12개 지표를 수립하였다. 한국에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등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은 과학기술공헌률, 제조업의 부가가치, 인구 만명당 특허 보유량, 기초 인프라 국제 공적원조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G10 불평등 해소 목표의 경우 소득 하위 인구의 가구소득 증가율, 고용률, 다문화 가족 관련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은 지니계수와 수혜국-원조국 간 자금 이동 유형에 따른 자금이동액 등에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G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보장 목표의 경우 한국은 녹색교통,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범죄예방, 세계유산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은 도농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 산업폐기물 이용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G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증진 목표에서도 한국은 총 14개의 지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중국은 2개의 지표만이 수립되어 목표 간 지표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식품 폐기물, 자원생산성, 녹색제품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제안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행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G13 기후변화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국가 교육 등이 중국에 비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G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에서는 한국은 해양 폐기물을 육상 기인·해상 기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며, 바다숲 조성, 어획량·수산자원량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름철 부영양화와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있다. G15 육상생태계의 보전 목표에서 한국은 밀렵생물, 생태축 관리 등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목표에서 중국도 한국과 유사한 지표가 다수 수립되어 있으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는 성과의 측정 기준에 '정부발전지원금'을 활용하는 지표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G16 인권·평화증진 목표의 경우 한국의 지표는 총 25개가 제안되었으나 중국은 1개만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의 지표체계에서 지표수의 차이가 가장 큰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폭력사건 관리, 아동보호, 부정부패, 정책 수립 과정의 사회적 약자 참여, 국제개발원조 지원 규모, 알권리 보호, 이주아동 보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중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수만을 포함하고 있다.

G17 지구촌 협력강화 목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제안된 지표는 국가간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 관련 지표, 민간협력과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재정지출 대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비율 등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지표 비교

| | 한국 | 중국 |
|---|---|---|
| G1 |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 여부별)<br>- 근로빈곤층 대상 주요재정사업의 지출 규모(EITC 등)<br>- 건강보험 본인부담률<br>-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br>- 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성별, 연령별)<br>-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지출항목별)<br>-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br>- 자연재해별 사망 및 상해자 | -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br>- 빈곤발생률<br>- 도시인구 대비 도시 최저생활보장비 대상자 비율<br>- 농촌인구 대비 농촌 최저생활보장비 대상자 비율<br>- 전체 인구 대비 도농 장애인 최저생활보장비 대상자 비율<br>- 전체 인구 대비 자연재해 피해자 비율 |
| G2 |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br>- 영유아, 아동 영양상태<br>- 전체 농가 농외소득 지표<br>-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br>-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br>- 농경지 토양 유기물함량(%) 및 밭토양 산도(pH)<br>-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 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 유전자원의 점수<br>-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 | - 영양부족 발생률<br>- 농촌인구 일인당 평균가처분소득<br>- 일인당 평균 작물생산량<br>- 일인당 평균 경작면적<br>- 총재정지출 대비 농업/임업/어업 지출비율<br>- 정부지출의 농업지도지수<br>- 농업부문 공적자금(공적개발원조 및 기타 공적자금) 총액<br>- 총재정지출 대비 곡물/식용류 비축 지출비율<br>- 식품류 CPI |

표 4-9 계속

| | 한국 | 중국 |
|---|---|---|
| G3 | -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 인구)<br>- 성인 남성 흡연율(WHO 담배 규제기본협약의 이행)<br>-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br>-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br>- 교통사고 사망자수(천 명당)<br>- 결핵발생률(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br>-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신환자 수(연령, 성별, 고위험군)<br>- 연간 천 명당 말라리아 발병률<br>-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건수<br>- 출생아 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MMR)<br>-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br>- 신생아사망률<br>- 대기기준 미달성 지역 거주인구율<br>-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사망률<br>-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br>- 장애인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br>- 인구고령화 대비 케어 관련 지표(임종관리)<br>-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활용 케어서비스 개발<br>- 출산장려정책 | - 정상분만 산모 10만 명당 사망자수<br>- 5세 미만 아동사망률<br>- 신생아사망률<br>- 숙련된 의료진의 도움하에 분만하는 비율<br>- 인구 1,000명당 결핵 발병률<br>-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치료받아야 하는 소외된 열대질병 환자수<br>- 자살률<br>- 교통사고사망률<br>- 무의식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br>- 의학연구/기초보건 분야에 지급되는 공적개발원조 총액<br>- 에이즈발병률<br>- 이질발병률<br>- 폐결핵발병률<br>- 인구 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br>- 인구 만 명당 위생기술 인력수<br>- 인구 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br>- 인구 만 명당 고등학교 재학생수 |
| G4 | -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의 성비<br>-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학습평가 실시(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br>-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br>-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 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br>-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br>-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br>-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br>- 고등교육 이수율<br>-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비율<br>- 평생학습 참여율<br>-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성별, 연령별)<br>-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br>- 특정한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 여부, 취약계층별 가용 데이터의 세분화)<br>-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PIAAC)<br>- 청소년/성인 문해율<br>-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성별, 연령별)<br>- 세계시민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 되어 있는 정도 | -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농업종사자 비율<br>- 초등학교 입학 3년 전 유치원 입학률<br>- 인구 만 명당 대학교 재학생수<br>- 고등교육기관 학생 교사비율<br>- 초중등 학생 교사비율<br>- 부처, 학습 유형별 장학금 공정개발기금 총액<br>- 15세 이상 문맹률<br>- 인구 만 명당 고등학교 교사수<br>- 인구 만 명당 대학 교수수<br>- GDP 대비 교육예산비중 |

표 4-9 계속

| | 한국 | 중국 |
|---|---|---|
| G5 |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br>- 지난 1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br>- 지난 1년간 성폭력 신고건수<br>- 성차별적인 유해한 관습과 법·제도 개선 여부<br>-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성별, 연령별, 지역별)<br>-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비율<br>-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비율<br>-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br>- 장관급 여성비율<br>- 성 및 재생산 건강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 마련 여부<br>- 성교육 수행 학교 비율<br>- 자녀계획 혹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실천율(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br>- 농지 소유자 중 여성비율<br>-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중 여성비율<br>- 농가 경영주 중 여성비율<br>- ICT 산업 여성종사율<br>-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과 법, 재원 할당시스템 마련 여부 | - 남녀 교육기회 평등 수준(남녀 문맹률 비율)<br>- 여성 국회의원 비율 |
| G6 | - 수돗물의 직간접 음용률<br>- 농어촌지역 노후관거 저감비율<br>- 도농 간 수돗물 요금비율<br>-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지자체 수<br>-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률<br>-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비율<br>- 하수 악취저감률<br>- 하수처리수 재이용율<br>- 상수원 수질 좋음(I) 등급(BOD, 총인 기준) 달성 비율<br>-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B) 등급 비율<br>- 신규오염물질 관리항목 확대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달성률<br>- 누수율<br>- 전체 지자체 중 물공급이 안정적인 지자체 비율(물공급 안전율)<br>-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 정도<br>-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 관리협정 체결 유무<br>-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br>- 하천생태계 연결성 정도<br>- 주민과 물이용자,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 건강한 물순환 유지, 위생관리 개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각급 행정기구의 비율<br>- 물과 위생 관리 관련 협의체 구성과 민간 참여비율 | - 식용수 안전관리서비스를 받는 인구비율<br>- 안전하게 관리되는 환경위생서비스<br>- (비누와 물 제공 등 손세정시설) 사용 인구비율<br>- 수자원 및 환경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br>- 농촌 중앙집중식 급수 인구비율<br>- 도시용수 보급률<br>- 총 재정지출 중 의료보건/산아제한 지출비율<br>- 농촌화장실보급률<br>- 지표수 품질 Ⅲ급 이상 비율<br>- 지표수 품질 Ⅴ급 미만 비율<br>- 도시 오수처리율<br>- GDP 만 위안당 용수량<br>- 산업부가가치 만 위안당 용수량<br>- 농촌관개수 효율적 활용계수<br>- 일인당 평균 수자원 |

표 4-9 계속

| | 한국 | 중국 |
|---|---|---|
| G7 | - 전체 가구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장애 여부 구분 등)<br>-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br>-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br>- 1차 에너지 대비 석탄 비중<br>-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br>-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에너지효율지표 (Toe/m2·년)<br>- 친환경차 확대 수 | - 전력사용가능 인구비율<br>- 전체 에너지소비량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br>- 1차 에너지와 GDP로 계산한 에너지 밀집도<br>-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감소율 |
| G8 |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br>- 연간 취업자 I인당 실질 GDP 성장률(성별)<br>- 고용성장지수<br>- 물질 발자국<br>- 국내 물질 소비량<br>-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청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정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전체 GDP 대비 관광 분야 GDP 비율<br>- 외국인 방문객수<br>-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 실제 일인당 GDP 연성장률<br>- 취업인구 실제 일인당 GDP 연성장률<br>- GDP 연성장률<br>- 전체 인구 노동생산율<br>- 도시표본실업률(도시등록실업률)<br>- 총재정지출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분야 지출비율<br>- 〈무역 추진 원조 이니셔티브〉 원조금<br>- 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및 ATM기 수량 |
| G9 | - 도로보급률<br>-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br>-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br>-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br>-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br>- GDP 대비 연구개발비<br>-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와 일인당 평균 부가가치<br>- 여객운송량<br>- 화물운송량<br>- 핸드폰 보급률<br>- 인구 만 명당 특허보유량<br>- 과학기술공헌율<br>- 전체 자산투자 대비 교통운수사업 및 우정사업 투자비율<br>-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br>- GDP 대비 R&D 비율<br>- 인구 백만 명당 R&D 연구원수(정규직과 동일한 경력)<br>- 총부가가치 대비 미드/하이엔드 과학기술 산업부가가치비율<br>- 기초인프라 국제 공적원조 총액(공적개발원조 및 기타 공적기금) |
| G10 | -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 격차비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소득 5분위 배율<br>-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 유무 등) 빈곤율<br>- 인구집단별 고용율(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br>-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br>- GDP 대비 노동소득<br>-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이탈률 | - 지니계수<br>- 수혜국과 원조국 간 자금이동 유형(예: 공적개발원조, 외국직접투자, 기타 이동)에 따라 분류한 개발 촉진 자금이동 총액 |

표 4-9 계속

| | 한국 | 중국 |
|---|---|---|
| G11 | - 슬럼, 비공식주거, 적절하지 못한 주거에 사는 인구비율<br>- 대중교통 수단분담률<br>-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률(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률 등)<br>-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 분담률, 도로대비 자전거 도로연장, 공공자전거 이용률 등)<br>- 시가화지역 비율(%)<br>-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예산 반영률(%)<br>-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건수 및 국제적인 등위<br>-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br>-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br>- 광역도시별 대기오염도<br>- 친환경차 등록대수<br>-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br>-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 면적<br>-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br>-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br>-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 총 재정지출 대비 주택보장지출 비율<br>- 일인당 평균 철도길이<br>- 일인당 평균 도로길이<br>- 총 재정지출 대비 도농 지역사회에 대한 지출 비율<br>-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br>- 인구 10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연평균 사망률<br>-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공기질 양호일수 비율<br>- 도시 PM2.5 연평균수치<br>- 전국 산업폐기물(고체) 종합 이용률<br>- 도시 부지 증가율과 인구성장률 비율<br>- 일인당 평균 공원녹지 면적<br>- 산업 고위험 폐기물 처분 이용률<br>- 생활쓰레기 무해화(無害化) 처리율 |
| G12 | -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br>- 물질 발자국(MF: Material Footprint), 1인당 물질 발자국<br>- 국내 자원 소비량(DMC), 1인당 자원소비량<br>-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br>- 식품손실지표(Food Waste Index)<br>- 식품폐기물지표(Food Loss Index)<br>-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수와 유해폐기물 발생량<br>-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br>-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br>-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확대<br>- 공공 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br>-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건수<br>-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br>- 대국민 환경교육 만족도 및 환경의식 수준<br>-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br>-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br>-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수<br>- GDP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 발행 기업수<br>- GDP에 대한 관광업 기여도 |
| G13 | - 지역 기반의 상대적 연평균 인명피해, 재해 피해액, 피해복구액<br>-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예산 비율<br>- 민간기업 기후변화 적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비율<br>-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교육 활성화 | - 자연재해 피해자 사망자수<br>-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 |

표 4-9 계속

| | 한국 | 중국 |
|---|---|---|
| G14 | - 수질평가 지수 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br>- 육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비율<br>- 해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투기 감소비율<br>- 전국 연안 연평균 pH 농도<br>- 해양보호구역 면적<br>- 바다숲 조성 면적<br>-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중<br>- 목표자원량 대비 현재 수산자원량의 비율 | - 여름철 부영양화 면적<br>- 연안해역 우수 수질(1급, 2급) 비율 |
| G15 |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br>-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br>-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진전(국제협력 국가보고 지표 개선 비율과 국가보고 지표 개선)<br>- 산림생태계의 유형, 천이단계, 영급 등에 따른 산림면적<br>-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비율<br>-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br>- 산 녹색보호지수<br>-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ist Index)<br>-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수단의 진행 건수<br>-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비율<br>-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수단 집행건수<br>- 단절·훼손된 생태축에 대한 생태연결성 복원 비율 | - 초원 종합 식생 커버리지<br>- 자연보호구역이 전체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br>- 보호구 내 육지 및 담수생물 다양성 관련 중요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br>- 삼림면적이 전체 육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삼림 커버리지)<br>-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이행 현황<br>- 보호구로 지정되고,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총면적<br>- 레드리스트 지수<br>- 생물다양성/생태시스템 분야 정부발전지원금 및 재정지출<br>- 생물다양성/생태시스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정부발전지원금 및 재정지출 |
| G16 | -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연령, 성별, 장애인, 국적 등)<br>- 일상생활 폭력사건 수와 문제해결 비율(층간소음, 데이트폭력)<br>- 아동폭력 사례수<br>- 전체 복지 관련 예산에서 아동보호예산의 비율과 보호기관 종사자수<br>- 국가기관의 헌법 등 실정법 준수 여부와 수준<br>- 수사기관(경찰, 검찰, 사법부)의 공정성과 피의자 인권 존중 정도<br>-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의 수와 해결 비율<br>-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 비율<br>- 국민 권익위의 일반 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결과<br>-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br>- 배임·횡령 등 민간부문 부패 범죄 통계<br>-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 결과<br>-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감시 여부 및 평가 결과<br>- 국가기관의 정책협의 위원회 중 사회적 약자의 참여 비율<br>- 개도국의 국제기구 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조) 프로그램 여부, 수와 지원 액수<br>- 개도국 시민사회단체(CSO)의 국제 네트워킹 및 옹호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원조) 프로그램 여부 지원액수 | -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사건 피해자수 |

표 4-9 계속

| | 한국 | 중국 |
|---|---|---|
| |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유무<br>- 출생등록증은 없으나 법적 신원을 취득한 인구비율<br>- 국민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수와 응답률<br>-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b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건수와 증감률<br>- 계층별 디지털 격차(불평등)와 증감률<br>-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정도<br>- 차별 사건을 다루는 제도와 진정 절차 구축 여부와 효과성<br>-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평가 | |
| G17 | -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세수총액의 비율<br>-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동원(DRM) 관련 지원 규모<br>- GNI 대비 ODA 비율<br>- GNI 대비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비율<br>- 정부최종소비지출 대비 ODA 비율<br>- 해외직접투자(FDI Outflow) 중 개발도상국의 비율<br>- 해외송금 수수료율<br>-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 대비 채무상환비율(기존 국제지표)<br>- 해외직접투자 중 최빈개도국 투자비율<br>- 인터넷 이용자 비율<br>- 국가 간 과학기술·ICT 협력협정과 프로그램 수<br>- 친환경 기술 이전과 확산을 위한 개도국 지원 규모<br>- 최빈국 과학기술·ICT 분야 기술협력 지원 규모<br>-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배양 사업 지원 규모<br>-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교역비중<br>-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수<br>-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우선정책 영역별 가이드라인 운용실적<br>-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기존 국제지표)<br>- 지속가능개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 개발 효율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기존 국제지표)<br>-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금액(KOICA, EDCF, KSP 등 민관협력 (PPP) 재원측정)<br>-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에 따라 구축된 민·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및 민간단체 수<br>- 장애인, 이주 민 등 취약계층별 세분화된 국가승인통계의 비율<br>-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와 관련해 국가차원에서 생산·가공된 지표 숫자 및 이중 세분화된 지표의 비율<br>- 통계역량 강화 목적의 공적개발원조 금액 및 비율(OECD DAC) | - 일반 공공예산 지출 중 타 지역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br>- GDP 대비 송금액달러) 비중<br>-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원조의 달러가치(남북협력, 남남협력, 삼각협력 포함)<br>- GDP 대비 국가재정수입 비중<br>- GDP 대비 국가세수수입 비중<br>- 총 재정지출 대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 비율<br>- 상품/서비스 수출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br>- 인터넷 사용자 비율<br>- 인구 100명 당 유선 고속인터넷 사용자수(속도별 분류)<br>- 개발도상국의 통계능력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각종 자원의 달러 가치 |

자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PRC(201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 1) 지역의 주요 SDGs 도전요인

UN의 아시아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ssion)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는 2017년 발표한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지역 로드맵(Regional road map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 도전요인들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191]

**사회 개발**

아태지역에서는 높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 불평등 요소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가 커지며 불평등한 기회는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아태지역의 평균 지니계수는 0.9로, 라틴아메리카의 0.81보다 높다. 소득과 불평등은 대부분은 교육이나 양질의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아태지역의 초등교육의 격차는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평균입학률은 약 95%이나 출석률이 낮고 중퇴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192]

**기후변화**

아태지역은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하며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높은 온도, 해수면 상승, 기후와 관련하여 극한 기후 현상 및 변화는 아태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은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침수, 침식, 등과 같은 해안지역의 심각이 우려된다. 매년 평균 1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받는다.[193] 특히 1970년에서 2016년 사이 발생한 홍수의 약 35%가 아태지역에서 발생했다.[194]

최근 세계은행(WB)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조치 없이는 2030년까지 약 1억 명 이상의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195]

191) UN ESCAP(2017b), pp.13-19.
192) UN ESCAP(2017b), p.13.
193) UN ESCAP(2018b), p.26.
194) UN, ADB and UNDP(2018), p.13.
195) UN ESCAP(2017b),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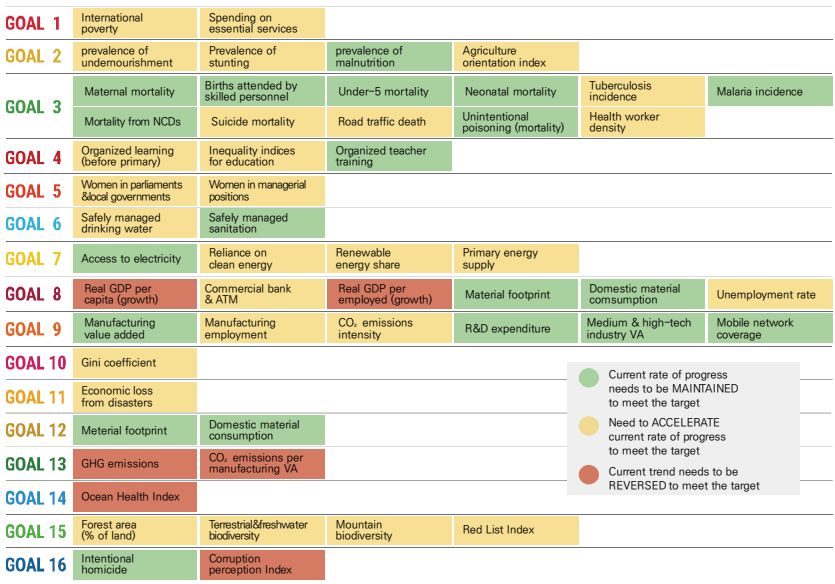
**재해위험 감소와 회복력 강화**

2005년 이래 아태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의 사망률에 기여하고, 사망 영향을 받는 사람은 80%이며 자연재해로부터 경제피해를 받는 사람은 45%이다. 2017년 기준 아태지역에는 약 5억 명이 넘는 빈곤층이 중간 또는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196] 주로 이 지역은 홍수, 엘리뇨, 가뭄,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가 상당하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따른 취약계층은 민감도 차이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재해 노출에 더 취약한 게 특징이다.

**에너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약 5억 명 인구가 전기공급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현재 아태지역은 SDG 7을 달성하기에 요원할 목표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의 약 80% 이상의 국가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을 생산가능하고 공급하는 업체로 부상 받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국가 및 하위 지역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사용 중이다. 아태지역은 SDG 7 달성을 위해 효율적 에너지 활용을 위해 지역적 활동을 조정 및 경제적 협력과 통합을 하여 자원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림 4-4 동·북동 아시아(ENEA)의 소지역 SDGs 이행 현황




자료: UN ESCAP(2018a), p.13.

ESCAP은 2017년, 60개 지구 SDG 지표와 6개 대체지표(proxy indicators)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그 소지역들의 SDGs 달성 수

196) UN ESCAP(2017b), p,17.

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시아·태평양 SDG 진전 보고서(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17)'로 발표하였다. 2017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s 이행 현황 및 성과를 측정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북동 아시아(ENEA: East and North-East Asia) 소지역의 SDGs 달성 전망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197]

이 평가에 따르면 동·북동아시아 지역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달성), SDG 13(기후변화), SDG 15(육상생태계), 그리고 SDG 14(수상생태계) 목표의 수준이 악화되거나 이행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SDG 모니터링을 위한 소지역 협력체계

아시아 지역 전체의 '2030 의제' 이행 모니터링은 ESCAP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이행성과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매년 HLPF 주도로 실시되는 지구적 성과 검토에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 이행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ESCAP의 노력은 지표를 이용한 주기적 평가와 함께 국가 통계능력 제고 및 관련 지식생산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98]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에서는 올해 9월, ESCAP과 몽고 의회·정부 공동으로 주최된 'SDGs에 대한 북동아시아 포럼(North East Asian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주요한 협력 노력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이 회의는 2019년에 개최될 '제6차 아시아·태평

197) 동·북동 아시아(ENEA) 소지역 국가는 한국, 중국, 북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몽고이다.
198) UN ESCAP, "2030 Agenda Overview", https://www.unescap.org/2030-agenda, 검색일: 2018.9.18.

양 지속가능발전 포럼'의 준비회의 성격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99]

공식적 정부 간 협력체계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몽고,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여 1993년에 설립한 '북동아시아 소지역 환경협력 프로그램(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200]이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로, 다양한 사회, 경제 분야 목표를 포괄하는 SDGs 이행을 조율할 협력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 소지역 SDGs 협력체계 구축 논의에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한·중·일 3국 정부 간 협력체계이다. 한·중·일 3국은 대부분의 SDGs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지역 SDG 이행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3국 정부 간 주요 협의체는 〈표 4-10〉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4-10 한·중·일 3국 정부 간 주요 협의체

| 분야 | 장관급 | 고위급 | 국장급 | 실무급 |
|---|---|---|---|---|
| 전반/지역·국제 정세 | • 외교장관회의 | • 외교부 고위급(차관보) 회의<br>• 대테러협의회<br>• 사이버정책협의회<br>• 아시아 정책대화 | • 중남미국장회의<br>• 아프리카 정책대화 | • 외교부 부국장회의 |
| 통상/산업 | • 경제통상장관회의<br>• 관세청장회의<br>• 특허청장회의 | • FTA 협상 | • 국장급 표준협의체<br>•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 • 동북아 표준 협력포럼<br>• 한·일·중 지적재산워킹그룹 |

199) ESCAP의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콘셉트노트,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Concept%20note_NEA%20SDGs%20Forum.pdf, 검색일: 2018.9.18.

200)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www.neaspec.org/, 검색일: 2018.9.18.

표 4-10 계속

| 분야 | 장관급 | 고위급 | 국장급 | 실무급 |
|---|---|---|---|---|
| 금융/거시경제 | •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br>• 중앙은행총재회의 | | | |
| 농업/어업 | • 농업장관회의 | • 수산연구기관장 회의 | • 산림협력 국장급 회의 | |
| 에너지 | • 수자원장관 회의 | •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TRM) | | • TRM 실무대표조정 그룹회의 |
| 환경 | • 환경장관회의 (TEMM) | • 환경과학원장회의 (TPM)<br>• 북극협력대화 | •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br>• 환경장관회의 준비 국장급회의(TDGM) | • 황사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실무그룹<br>• 화학물질 정책대화<br>•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회의<br>• 한·일·중 대기 분야 정책대화<br>•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
| 관광 | • 관광장관회의 | | | • 청소년교육관광포럼 |
| 문화 | • 문화장관회의<br>• 스포츠장관회의 | • 문화콘텐츠 산업포럼<br>•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 | |
| 교육 | • 교육장관회의 | | •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 • CAMPUS Asia 실무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 | • 과학기술장관회의<br>• 정보통신장관회의 | | • 과학기술 국장급회의<br>• IT 국장급 회의 | |
| 운송/물류 | • 교통물류장관회의 | | •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br>• 교통물류 국장급회의 | • 교통물류 과장급회의 |
| 방재 | • 지진협력청장회의<br>• 재난관리기관장회의 | | • 재난관리 국장급회의 | |
| 감사 | • 감사원장회의 | | | • 감사실무협력회의 |
| 인사행정 | • 인사장관회의 | • 한일중 외교연수원장회의 | • 인사국장회의 | • 중간관리자워크숍 |
| 보건 | • 보건장관회의 | | • 고령화회담<br>• 의약품 국장급회의 | • 보건포럼 |
| 학술 | | • 3자 협력 포럼<br>• 싱크탱크 네트워크 | | |
| 치안 | | | • 경찰협력회의 | |
| 수준별 협력체수 | 21 | 14 | 17 | 15 |

자료: 외교부(2018), "한·일·중 3국 협력", 검색일: 2018.6.20.

### 3) 소지역 SDG 모니터링 및 이행협력체계 구축방안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에서의 '2030 의제' 이행 협력은 지역 전체는 물론 한·중 양국의 SDGs 이행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때 한국과 중국의 주도적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지역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목적', '측정지표체계', '측정 결과의 환류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지역 단위 SDGs 평가의 목적으로는 ① 지역 및 지구 SDGs 이행 검토에 기초자료 제공, ② 분야별 취약국가 및 협력 분야 발굴, ③ 소지역 정책 및 협력의 SDGs 파급효과 분석 등을 꼽을 수 있다. 측정지표체계 개발은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가 개발한 '지구 SDGs 지표'를 기반으로 소지역의 '자료능력'(data capacity) 및 관련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앞서 소개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ESCAP 지표체계는 지구 SDG 지표 중 60개와 대체지표 형태로 추가된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지역의 SDGs 이행 수준에 대한 측정 결과는 개별 국가의 SDGs 달성도를 인근 국가와 비교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적·지구적 협력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소지역 SDGs 모니터링은 그 목적과 활용방식을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도록 역내 SDGs 이행협력체 구축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의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을 제안한다.

○ **동북아 SDGs 모니터링 체계**

① 소지역 SDGs 모니터링 지표체계 개발

② 소지역 SDGs 이행성과 측정

○ **동북아 SDGs 협력체계**

① 소지역 SDGs 이행성과 검토

② 소지역 성과 보고서 작성

③ 역내 SDGs 이행협력사업 발굴

○ **동북아 지속가능발전 포럼**

① 장기 지속가능발전 전망 및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

② 역내 주제별(thematic) 협력 발굴

③ 공공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제5장 결 론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한·중 협력관계는 2015년 FTA 발효를 거치면서 한층 더 크게 확대되었다.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은 앞서 두 해 동안 구축된 양국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이행된 해였다. 9월에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방한하여 양자회담과 함께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4년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양국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체제'가 7월에 출범하였고,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이 11월에 개최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가 개최되었고, 50개의 인문유대 세부사업이 이행되는 등 문화적 교류도 확대되어 나갔다.

2016년 7월,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양국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고, 9월 사드부지가 선정되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크게 위축되어 교육, 투자, 관광,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교역액은 2,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양국관계가 일시적인 국제정세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2030 의제'는 협력을 의제 이행의 한 요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2030 의제'를 그 안에 구체화된 목표인 '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 계획'으로 정의하고, '협력'을 의제 이행의 기본 수단으로 제시한다.[201] SDGs 달성을 포함한 의제 이행의 책임과 권한은 기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에 있지만, 구체적 이행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가단위 2030 의제 이행의 핵심은 국가, 지역 및 지구적 단위의 분야별 정책, 이니셔티브에 SDGs를 비롯한 의제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때 지역·소지역 차원의 협력은 국가 간 연계된 목표를 협력 이행함으로써 참여 국가 모두의 SDGs 달성을 제고하거나, 혹은 취약국가 지원 등을 통한 지역 SDGs 달성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유엔 DESA는 SDGs를 위한 협력을 자원의 결합방식과 협력을 통해 얻는 편익 유형에 따라 '영향/교환', '결합/통합', '변환'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관계는 참여자 일방 혹은 상호 간에 상대방의 SDGs 이행에 도움이 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관계이다.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관계는 참여자 모두의 편익을 위해 각자의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의 관계이다. 그리고 '변환' 유형의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방식의 관계이다.

한·중 협력관계는 FTA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협력은 물론 환경, 사회, 안보,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의 SDG 대응은 기존 분야별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양국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의 SDGs 이행계획을 관련된 분야별 협력관계에 반영함으로써 SDGs 이행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예: 인프

201) "*본 의제는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업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2030 의제' 서언)

라, 무역, 산업,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국제협력 등). 이들 목표들은 기존 협력관계의 강화와 새로운 협력 수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역내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양국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성공적 SDGs 이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중 협력관계에 SDGs의 주류화이다. 국가단위 2030 의제 이행의 핵심은 SDGs를 분야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의제는 SDGs 이행이 국가단위 이행과 더불어 지역(regional) 및 소지역(subregional) 협력을 통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한·중 협력관계를 SDGs 맥락에서 개편하는 소위 '주류화(mainstreaming)'는 양국 간의 SDG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협력관계의 지속가능발전 유효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는 ① 협력관계에 2030 의제의 주요 원칙 반영, ② 양국의 관련 SDGs 이행 정책과 정합성 확보, ③ 지구적 SDGs 이니셔티브들과의 연계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국의 SDGs 이행에 시너지가 기대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중국은 SDGs와 일대일로 간의 연관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관련 국가, 국제기구와 정책을 협의하고 개발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인프라 연결, 산업 투자, 생태 환경, 금융 및 인문 교류 등 주요 부문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까지 60여 개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적극적인 동북아 협력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SDGs 이행 전략을 고려할 때,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은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

셋째,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소지역(sub-region) SDGs 이행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지역단위의 검토를 통해 개별 국가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인접 국가의 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상호 검토하는 한편, 지역목표 설정을 통해서 지역 전체 이행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2030 의제는 이러한 '(소)지역단위의 이행성과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적 단위 성과 측정과 함께 SDGs 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도전요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① 소지역(sub-region) 범위 설정 및 협의체 구성, ② SDGs 이행성과 검토 위원회 및 포럼 설립, ③ '소지역 SDGs 이행성과 보고서' 작성 등의 단계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관계부처합동(2016),『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강준영, 유정원(2016),「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 국립외교원.

김윤희(2017),「무역통계로 보는 한중 경제」, KOTRA.

김석호 외(2016),「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통계개발원.

김종호 외(2017),「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환경부.

김호석 외(2009),「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의미와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호석 외(2016),「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호석 외(2018), "지속가능발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편,「미래를 위한 환경정책 되돌아보기」, 크레파스북 pp.16-51.

기경석(2017),「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DG 7)」, KOICA, p.8.

박영실 외(20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조사연구」, 18(3), 한국조사연구학회, p.81.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EU 및 EU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지원제도 현황.

오정화, 박영실(2015),「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청.

외교부(2013),「한중 미래비전공동성명 참고자료」.

외교부(2015),「2015 외교백서」.

외교부(2016a),「2016 외교백서」.

외교부(2016b), 「한중공공외교백서(2010-2016)」.
외교부(2017a), 「2017 외교백서」.
외교부(2017b),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중관계 25년」.
외교부(2018), 「한·일·중 3국 협력(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윤유리(2017),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 과정 검토 II", 「개발과 이슈」, 39, p.2.
이근, 김흥규(2013), 「한·중·일 공공외교 협력방안 연구」, 외교부.
이문형 외(2017),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성우 외(2014),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해양수산부.
이현태 외(2018),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18(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장민 외(2017), 「한·중 환경협력 기본구상(2016~2025) 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 p.63.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작업반 워크숍 자료집」.
황재호 외(2014),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한중협력 방안」, 통일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2.7.16),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성황리에 마쳐",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70620, 검색일: 2018.10.10.
환경부 보도자료(2014.7.3), "정상회담 계기로 한-중 환경 상생의 동반자 시대 열어",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354740&menuId=286, 검색일: 2018.10.10.
환경부 보도자료(2015.3.27), "환경부 장관, 중국 국가임업국장(장관)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498370&menuId=286, 검색일: 2018.10.10.
환경부 보도자료(2016.1.12), "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

boardId=596850&menuId=286, 검색일: 2018.10.10.

[국외문헌]

ESCAP, ADB, and UNDP(2018),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in Asia and the Pacific*.

European Commission(2016a),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 European Action for Sustaianbility*.

European Commission(2016b), *Proposal for a new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Our world, Out Dignity, Out Future*.

European Commission(2018), *EU's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urostat(2017a), "Processes Put in Place in Eurostat and in the European Statistical System", In *GCC Statistical Forum*.

Eurostat(2017b),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Monitoring Report on Progress Towards the SDGs in an EU Context*.

Eurostat(2018). *Result of The Review in Preparation of the 2018 Edition of the Eu Sdg Monitoring Report*.

Halonen et al.(2017), *Sustainable Development Action-the Nordic Way*. Nordic Council of MInisters.

Nordic Council of Ministers(2013), *A Good Life in a Sustainable Nordic Region: Nordic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CD(2015), *Policy Coherence for Sustaianble Development in the SDG Framework*.

OECD(2018),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C(2016), *China's National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achs et al.(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8*.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Stibbe, D., S. Reid, and J. Gilbert(2018), *Maximising the Impact of Partnerships for the SDGs.*

UN(2015),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UN(2018a), *Mainstreaming of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ystem.*

UN(2018b),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Synthesis Report on Water and Sanitation*

UN Environment(2018), *One Plan for One Planet: 5 Year Strategy 2018-2022*

UN ECOSOC(2017), *Report of the Fourth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ECOSOC(2018a), *President's Summary of the 2018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ECOSOC(2018b),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DESA(2016), *Overview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at National Level.*

UN DESA(2017), *Overview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at National Level.*

UN DESA(2018), *Compendium of Nation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A(2018), *Handbook for the Preparation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UNDG(2015), *United Na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UNDG(2017), *Guidelines to Support Country Reporting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DP and CCIEE(2017),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new means to transformative global governanc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UN ESCAP(2005), *Report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UN ESCAP(2017a),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17.*

UN ESCAP(2017b), *Regional Road Map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in Asia and the Pacific*, p.6.

UN ESCAP(2018a),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UN ESCAP(2018b),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in Asia and the Pacific*, p.26.

UN General Assembly(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p.12.

UNSC(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UNSD(2015), *United Na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온라인 자료]

구글 공공데이터(2018.7.6), "중국 국내총생산",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hl=ko&dl=ko#!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ny_gdp_mktp_cd&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CHN&ifdim=region&hl=ko&dl=ko&ind=false, 검색일: 2018.10.10.

구글 공공데이터(2018.7.6), "중국 국가빈곤선 기준 빈곤층 인원수",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hl=ko&dl=ko#!ctype=l&strail=false&bcs=d&

nselm=h&met_y=poverty_headcount_ratio_at_national_poverty_line&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CHN&ifdim=region&tstart=1286982000000&tend=1476370800000&hl=ko&dl=ko&ind=false, 검색일: 2018.10.10.

구글 공공데이터(2018.7.6), "5세 미만 사망률"(신생아 1,000명당 5세 이전 사망수),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hl=ko&dl=ko#!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poverty_headcount_ratio_at_national_poverty_line&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CHN&ifdim=region&tstart=1286982000000&tend=1476370800000&hl=ko&dl=ko&ind=false, 검색일: 2018.10.10.

외교부(2015.11.1),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015)", 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6914, 검색일: 2018.10.10.

외교부(2009.10.1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성명(2009)", http://www.mofa.go.kr/www/brd/m_3964/view.do?seq=343288, 검색일: 2018.10.10.

외교부(2013.7.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466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28, 검색일: 2018.10.10.

외교부(2011.5.23),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협력문서(2011)", http://www.mofa.go.kr/www/brd/m_3964/view.do?seq=343247, 검색일: 2018.10.10.

외교부(2012.5.14),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http://www.mofa.go.kr/www/brd/m_3964/view.do?seq=343240, 검색일 2018.10.10.

인민망 한국어판(2013.7.2), "중국통의 고찰〈24〉 이문기 세종대학교 교수", http://

kr.people.com.cn/203093/206638/8307249.html, 검색일: 2018.8.28.
지속가능발전포털(2018.4.2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 http://ncsd.go.kr/app/board/publicNotice/view.do, 검색일: 2018.7.1.
청와대 홈페이지(2017.8), "국정과제 61-1",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3, 검색일: 2018.8.29.
SDG Knowledge Hub(2018.8.2), "42 Countries to Present VNRs to HLPF 2019", http://sdg.iisd.org/news/42-countries-to-present-vnrs-to-hlpf-2019/, 검색일: 2018.9.20.
SDG Knowledge Hub(2017.7.20), "Scientists Provide Update on GSDR 2019", http://sdg.iisd.org/news/scientists-provide-update-on-gsdr-2019/, 검색일: 2018.9.1.
Sustainable Development Platform(2017.7.19), "HLPF 2017",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17, 검색일:2018.7.7.
The World Bank(2017.1.1), "RISE –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http://www.worldbank.org/en/topic/energy/publication/rise---regulatory-indicators-for-sustainable-energy, 검색일: 2018.7.5.
UN ESCAP, "2030 Agenda Overview", https://www.unescap.org/2030-agenda, 검색일: 2018.9.18.

[중국]

生态环境部环境规划院(2018),「中国实施2030议程和区域合作」.
人民网(2015.11.3),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http://politics.people.com.cn/GB/8198/371536/index.html, 검색일: 2018.9.28.
中国共产党新闻网(2012.11.12)"十八大报告", http://cpc.people.com.cn/18/. 검색일: 2018.9.22.

新华网(2016.3.17),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lh/2016-03/17/c_1118366322.htm, 검색일: 2018.9.22.

中国共产党新闻网(2017.10.28),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cpc.people.com.cn/n1/2017/1028/c64094-29613660.html, 검색일: 2018.9.22.

新华网(2018.5.20), “开创美丽中国建设新局面——习近平总书记在全国生态环境保护大会上的重要讲话引起热烈反响”, http://www.xinhuanet.com/2018-05/20/c_1122859915.htm, 검색일: 2018.9.22.

崔文星(2016), “2030年可持续发展议程与中国的南南合作[J]”, 「国际展望」, 1, pp.34-55, p.154.

人民网(2015.11.3), “中共中央关于制定十三五年规划的建议”, http://politics.people.com.cn/n/2015/1103/c1001-27772701.html, 검색일: 2018.9.22.

外交部网站(2015.9.26), “习近平：‘谋共同永续发展 做合作共赢伙伴——在联合国发展峰会上的讲话’”, http://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xzxzt/xpjdmgjxgsfw_684149/zxxx_684151/t1300882.shtml, 검색일: 2018.9.22.

董亮, 张海滨(2016), “2030年可持续发展议程对全球及中国环境治理的影响[J]”, 中国人口·资源与环境, 1, pp.8-15.

外交部网站(2016.10.12), “中方发布‘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 http://www.fmprc.gov.cn/web/zyxw/t1405173.shtml, 검색일: 2018.9.22.

国务院(2016.12.15),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方案”, http://www.china-un.org/chn/zgylhg/jsyfz/fazhang2015/t1424315.htm, 검색일: 2018.9.22.

外交部网站(2017.8.24),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进展报告”, http://www.

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qtzt/2030kcxfzyc_686343/, 검색일: 2018.9.22.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07.4.9), 关于印发国家可持续发展实验区管理办法和国家可持续发展先进示范区管理办法的通知, http://www.most.gov.cn/fggw/zfwj/zfwj2007/200711/t20071105_56942.htm, 검색일: 2018.9.22.

搜狐(2017.6.20), 专访|探索我国可持续发展的新动力与模式——访科技部社会发展科技司司长吴远彬, http://www.sohu.com/a/150517115_390536, 검색일: 2018.10.4.

外交部网站(2016.10.12), "中方发布'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 http://www.fmprc.gov.cn/web/zyxw/t1405173.shtml, 검색일: 2018.9.22.

朱旭峰, 李远博(2018), "拉美和加勒比可持续发展进展及与中国合作展望[J]", 「中国科学院院刊」, 33(1), pp.48-55.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2015), 「中国-东盟可持续发展的国家战略和区域合作: 新挑战和新机遇[M]」, 中国环境出版社.

2018年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 "中非合作论坛—北京行动计划(2019-2021年)", http://www.focac2018.com/, 검색일: 2018.10.4.

2018年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关于构建更加紧密的中非命运共同体的北京宣言", http://www.focac2018.com/606.shtml, 검색일: 2018.10.4.

# 부 록

Ⅰ. 한·중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마련 요약보고서(중문)

Ⅱ. SDSN Indicator Threshold

Ⅲ. 중국환경계획원(CAEP): 中国实施2030议程和区域合作研究报告(중문)

# 1. [요약보고서] 한·중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마련: 关于中韩在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SDGs)落实进展的比较及合作方案

## 内 容 概 要

《2030年可持续发展议程(简称'2030议程')》明确了联合国会员国2030年拟实现的17项可持续发展目标(简称SDGs)和169项具体目标。SDGs是全球目标，以环境，经济，社会三个部分为核心，设定所有国家普遍能够实现的可持续发展水平。

韩国从2006年起就开始制定可持续发展基本规划，继2011年制定第二个基本规划后，2016年制定《第三次可持续发展基本规划》时，已将SDGs与国内可持续发展目标进行有机结合。第三次基本规划明确了环境，社会，经济，国际等4大目标(健康的国土环境，整合的放心社会，包容的创新经济，全球性的负责任国家)和各领域14大战略和50个执行项目，并在制定14大战略时，将SDGs纳入其中。

全球SDGs是一项通过国家间协商达成共识的'全球性议题'。它包含可能产生协同效应的国家间的合作，援助不发达国家或发展中国家实现SDGs，区域性合作等方式。由于韩中两国在经济，社会，环境等可持续发展三方面都建立了密切的关系，在实现SDGs方面对韩国来讲中国是重要国家。考虑到两国的地位，在本地区 SDGs合作上，双方互为重要的伙伴国家。

本文旨在探索中韩两国密切的合作关系在落实《2030议程》方面的发展方向及其未来合作方案。在结合2030议程的次区域合作以及经济与社会事务部()的'SDGs合作类型'之后，本文提出的中韩合作方案重点围绕以下三方面:

① 提高原有两国合作关系与SDGs的契合度，② 为落实SDGs加强两国合作，③ 东北亚次区域SDGs监测及执行体系。

## 第一章 序言

### 1. 研究背景及目的

2015年联合国通过的《2030议程》明确了联合国会员国2030年拟实现的17项可持续发展目标和169项具体目标。SDGs是全球目标，以环境，经济，社会三个部分为核心，设定所有国家普遍能够实现的可持续发展水平。它的基本精神就是通过全球共同合作与努力实现《2030议程》

政府落实《2030议程》将包括'把SDGs纳入国内政策'和'通过合作与支持实现全球及区域级SDGs'两个方面。参与本议程通过的会员国要将SDGs与本国政策结合起来，定期讨论议程落实进展，与国际社会分享其成果。

韩国从2006年开始制定可持续发展基本规划，继2011年制定第二次基本规划后，2016年制定《第三次可持续发展基本规划》时，已将SDGs纳入国内可持续发展目标中。第三次基本规划明确了环境，社会，经济，国际等4大目标(健康的国土环境，整合的放心社会，包容的创新经济，全球性的负责任国家)和各领域14大战略和50个执行项目，并在制定14大战略时，将SDGs纳入其中。

除此之外，根据17项SDGs和169项具体目标，韩国正在制定其独有的可持续发展目标。今年二月已制定'国家可持续发展目标(K-SDGs)推进计划'，目前正在着手建立国家可持续发展目标，截止目前(2018年10月)还在进行之中。

在合作落实《2030议程》方面，中国是韩国最重要的合作对象国家。由于韩中两国在经济，社会，环境可持续发展等三方面都建立了密切的关系，在

实现SDGs方面对韩国来讲中国是一个重要的国家。考虑到两国的地位，在本地区SDGs合作上，双方互为重要的伙伴国家。

由于中国政府认为促进国家可持续发展和一带一路战略等其主导的倡议将发挥重要作用，因此比任何国家都更积极地推动《2030议程》。该议程通过后，2016年中国就正式发布《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将本议程和SDGs纳入到"十三五"规划中。尤其，《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是为落实SDGs，分析中国的环境，按照17项SDGs和169项具体目标，设定国家目标的。中国的这一举措远比当时任何其他国家都要迅速。

本文旨在探索如此密切的中韩合作关系在《2030议程》落实层面的发展方向及未来合作方案。合作方案主要围绕以下三方面进行探索，① 提高原有两国合作关系与SDGs的契合度，② 为落实SDGs加强两国合作，③ 东北亚次区域SDGs监测及执行体系。与这三种合作方案相对应的是《2030议程》次区域合作事宜，以及下文拟介绍的经济与社会事务部(简称DESA)的'SDGs合作类型'。

## 2. 研究方法

本文中'合作'采用联合国DESA定义的概念。按此概念，以SDGs为目的的合作关系的定义是有助于落实《2030议程》的"由政府，国际机构，主要集团及其他利益攸关方自发履行的多方利益攸关方倡议"。合作方案涵盖SDGs所有领域，因此个别领域的具体合作并不在本文涉及范畴内。但为提供各领域具体含义，对各领域进行了细化分析和考证。中韩落实SDGs合作方案主要围绕'现有各领域中韩合作关系和《2030议程》的原则及与SDGs的契合度'，

‘中韩SDGs合作需求’，‘中韩在东北亚次区域内落实SDGs的主导作用’等三个方面进行探讨。

议程通过前建立的个别领域的合作关系是以各自固有的宗旨和目的形成的，因此有可能并未充分反映以落实议程或SDGs观点所具有的意义和重要性。将SDGs反映到国家及区域性政策上是为落实《2030议程》所要做的第一大课题。本文对各领域两国合作关系做了调查，将提高与议程及SDGs契合度方案分成‘反映《2030议程》原则’，‘国家SDGs和国际关系的垂直契合度’，‘与全球SDGs倡议对接’。

在SDGs合作方式中中韩两国以‘影响&交换’和‘结合&整合’类型为主，可以寻求多样的合作机会。为提出影响&交换类型的合作机会，本文对中韩两国的合作需求进行了调查。为了解韩国的合作需求，考证了SDGs各目标的政策课题，找出有合作需求的领域；而中国的合作需求，则是运用了我方合作研究机关中国生态环境部环境规划院的分析结果。结合&整合类型的合作机会按照统一的评估体系，根据测评中韩两国实现SDGs水平的SDSN评估结果得出的。在两国成绩均低迷的领域，结合&整合类型的合作关系将给中韩两国带来较高的成果。

《2030议程》建议要同步进行国家层面的审查和区域，次区域的SDGs落实与审查。次区域的成果审查可以通过域内国家间案例分享，国家层面的落实成果相互审查，区域性共同目标的设定等发挥督促区域整体SDGs落实的作用。

本文通过中韩两国主导性作用，提出促进东北亚地区落实SDGs的方案。该方案包括东北亚次区域内SDGs监控体系和应与此同步运作的次区域落实合作体系。

## 第二章《2030议程》及SDGs背景和全球落实情况

### 1.《2030议程》背景和主要内容

《2030议程》的落实是从两方面开始的。首先，2010年联合国大会上联合国秘书长提出用'年'代替MDGs的后续工作。另外，2012年联合国可持续发展峰会(Rio+20)也开始探讨这个话题，这一年刚好是1992年巴西里约热内卢联合国环境发展大会召开20周年。Rio+20峰会通过了包括联合国强化方案'我们憧憬的未来'协议，并向联合国大会要求制定SDGs。以此为基础，联合国大会于2013年1月成立开放工作组 (OWG)，通过对不同主题的商讨，起草了17项SDGs草案，接着出现在2014年联合国秘书长综合报告中。

2015年9月召开的第七十届联合国发展峰会正式通过了包括SDGs的'改变我们的'。并把《年》更名为《2030议程》。它由 ① 包括愿景和原则的宣言，② SDGs目标和具体目标，③ 执行手段，④ 后续落实与评估等四个部分组成。

《2030议程》在未来15年里作为实现人类与地球持续共存所要推进的开发合作议程，将严格遵守人类，繁荣，地球，和平，伙伴关系等五大原则。为实现其愿景，需要所有利益攸关方参与，并强调全球合作伙伴关系，通过署名让全世界共同付诸行动。《2030议程》还包括为实现共同的愿景目标，从全球，国家，区域层面通过定期审查以及对包容性后续措施的评估等内容。

### 2. 全球落实情况及成果

为高效落实《2030议程》和SDGs，联合国构建以下全球执行体系，履行其职责。为核查《2030议程》和SDGs，还将高级别政治论坛(简称HLPF)作为其平台。2012年6月联合国可持续发展大会(Rio+20)成立的HLPF将定期评估

SDGs落实情况，寻求未来课题，共同探讨解决方案。2018年是《2030议程》正式通过的第三个年头，各国为提高本国可持续发展水平，实现全球契约，构建了SDGs执行体系，并自愿向HLPF提交国家报告。在这一过程中各国都为落实SDGs，努力完善体制，制定政策与计划等。

全球《2030议程》后续措施核查由联合国大会和经济及社会理事会(ECOSOC)主管的HLPF主导。此外，国家或次区域的可持续发展目标和具体目标的执行和评估则是会员国的责任与权限

引入SDGs后，2016年首次召开的HLPF在'确保不让任何人掉队'的主题下，探讨了今后HLPF的后续措施和发展方向。此外，还首次对自愿国家审查报告进行讨论。

第二年的2017HLPF作为评估SDGs落实过程和确定后续措施的平台，以'在变化的世界里消除贫困和促进繁荣'为主题，重点评估了SDGs1，2，3，5，9，14，17。2017HLPF的整体意见是虽然无法明确全球层面在SDGs落实方面有明显变化，但个别国家已制定国家SDGs战略与计划，对此予以积极评价。进而还结合执行国家SDGs的机制，已开始将它与区域及全球层面的执行体系进行整合。

引入SDGs第三个年头召开的2018HLPF以'向可持续和有弹性的社会转型'为主题，详细审查了SDGs 6，7，11，12，13，17等6项目标。2018年是联合国大会通过SDGs的第三个年头，世界各国都在努力推进这项国际契约，主要成果如下：按照2018HLPF通过的"部长宣言"，在17项目标，169项具体目标相关领域均有一定进展。尤其部分国家已制定SDGs执行战略，构建执行及监测体系，并落实具体的执行计划。尽管做出上述积极的努力，但最不发达国家(LDCs)，内陆发展中国家(LLDCs) 和小岛屿发展中国家(SIDS)在所有目标上均处于落后状态。尤其因气候变化带来海平面上升的因素会

对SIDS实现目标产生负面影响。根据目前执行速度，大会认为LDCs，LLDCs，SIDS很难在2030年实现SDGs。加之中等收入国家出现了与国际社会通过SDGs追求的目标完全背道而驰的现象，即收入不平等问题越来越严重。高收入国家则在SDG12和14这两项目标上成绩非常低。

同时，会议还指出许多国家在官方开发援助(ODA)方面缺乏足够努力。尤其以2017年为准，OECD DAC会员国ODA规模虽同比(1,450亿美元)增加1.1%，共计1,466亿美元，但相比会员国国民总收入，ODA比率(ODA/GNI)平均仅为0.31%，同比下降0.01%。ODA规模大幅下降的主要国家其原因是援助国国内的难民资金同比减少。

### 3. 地区的落实案例：EU

保持强有力的经济及制度整合的欧盟在推行《2030议程》和SDGs方面同样也是通过积极合作来推行的。欧盟的《2030议程》是在同时实现区域SDGs和提高全球可持续发展为目标的。

2016年《2030议程》通过一年后，欧盟正式发布了应对方案和实现SDG的战略——《可持续的未来行动》

为解决经济，社会，环境领域的挑战，促进可持续发展，需要整合并调整各领域的政策。从这一角度来看，在欧盟可持续发展是'治理(Governance)'的问题，又是一个国家间及各领域间政策契合度问题。

欧盟对《2030议程》的应对可分为两种方式，一是将SDGs纳入原有政策体系和区域政策中，二是树立结合《2030议程》和SDGs的欧盟发展长期愿景，并建立各部门政策和财政体系以实现这一愿景。

为评估SDGs进展情况，欧盟开发了EU SDG指标，并于2017年5月正式

获得通过。该指标按17项目标区分，由符合欧盟实情的100个指标构成。SDG 14和17有5个指标，其余每项目标有6个指标。100个指标中41个是用于测量1项以上目标的。

EU SDG指标是基于会员国，NGO，学者，国际机构等代表广泛讨论结果开发出来的。第一个指标体系是2017年4月表决通过，经最后审查5月正式通过，11月第一次被运用在EU SDG监测报告中。

## 第三章 中韩SDGs落实进展比较

### 1. 韩国的SDGs落实

UNCED《21世纪议程》的《关于环境与发展的里约热内卢宣言》。 大会结束后，韩国政府于同年7月，组建由国务总理任委员长的‘地球环境相关部长应对会议’，制定按各领域明确规定政府和人民为实现可持续发展目标应履行的中长期《21世纪议程 国家落实计划》，并于1996年10月，将其提交联合国。

在2000年世界环境日当天，韩国政府发布《千禧年国家环境愿景》，宣布将可持续发展作为国政运营基调，为听取民意设立‘(PCSD)’。2006年，第四期可持续发展委员会制定《第一个国家可持续发展战略和执行计划》，提出测评落实进展和成果的评估体系。2010年1月13日随着低碳绿色成长基本法的制定，可持续发展基本法失去基本法地位，转成可持续发展法，主要内容被删除或转移到低碳绿色增长基本法中。此外，总统所属国家可持续发展委员会调整为环境部长所属委员会。

2016年，韩国向联合国HLPF提交了名为‘韩国落实SDGs第一年：从发展成功模式到可持续发展愿景自愿国家审查报告’。该报告介绍过去一年韩国为

实现可持续发展目标所做的努力——包括成立可持续发展委员会，制定《可持续发展基本法》,《可持续发展基本计划》,《温室气体减排路线图》及《经济创新三年计划》。另外，还有为实现可持续发展目标之一的两性平等，制定《两性平等基本法》与《有关职业生涯女性经济活动促进法》，应对老龄化社会颁布的《低生育老龄化社会基本法》,《产业振兴法》,《低生育老龄化社会基本计划》等。

2017年执政的文在寅政府将‘重整可持续发展治理’作为国政课题，计划升级可持续发展委员会的级别，制定并落实‘2030可持续发展国家目标，愿景及执行战略’。2018年2月随着《国家可持续发展目标(K-SDGs)推进计划 》成功出台，开始着手制定国家可持续发展目标，截止2018年10月该工作仍在进行。K-SDGs旨在针对联合国通过SDGs，将符合韩国国情的国家目标的设定，管理，政策目标，从行政层面转向让人民切身体会生活质量提高的方向。

## 2. 中国的SDGs落实

2016年9月19日，中国在第七十一届联合国大会上发布《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阐述中国政府将本着统筹考量国内外局势，建设小康社会，深化改革，依法治国，从严治党战略和创新，和谐，环保，开放，共享的发展理念，整合经济建设，政治建设，文化建设，社会建设，环境建设及党的建设。通过落实可持续发展的《2030议程》，在规定期限内建设小康社会，实现两个一百年目标，推动全球合作发展。

中国政府提出的创新，和谐，环保，开放，共享五大发展理念反映了可持续发展这一时代潮流，与《2030议程》强调的人类，地球，繁荣，和平，伙伴

的五大理念相融相通。另外，它作为经济社会发展规律的扩展及深化概念，将引领中国落实《2030议程》。

中国方案包括以下五个部分：① 中国的MDGs落实成果及经验，② 落实《2030议程》的机遇和挑战，③ 落实《2030议程》的方向和原则，④《2030议程》落实方法，⑤ 17项SDGs执行计划等。中国实现可持续发展的《2030议程》执行原则如下：① 和平发展原则，② 合作共赢原则，③ 全面协调原则，④ 包容开放原则，⑤ 自主自愿原则，⑥ '共同但有区别的责任'原则。

### 3. 中韩SDGs执行体系比较

SDGs执行及审查主体

在韩国，有多个不同部门和机关主管SDGs落实工作。首先，包括HLPF在内的国际SDGs执行等事宜全部由外交部负责。但与联合国统计委员会共同商定全球SDGs指标与国内适用性分析等业务则由统计厅负责。而作为国内可持续发展政策主管部门的环境部则负责把SDGs与国内可持续发展基本计划有机结合合的工作，目前正主导开发被称为韩国版SDGs的K-SDGs。

相比之下，中国政府则由外交部牵头，成立'落实SDGs跨部门'，并由此制定执行计划，监督进展情况，协调政策与沟通等工作。该工作机制包括43个部门和机关，各发挥制定相关SDGs和具体目标的作用。

○ SDGs的国家政策，战略，计划的整合及主流化

韩国的SDGs整合及主流化最早是通过《第三次可持续发展基本规划》实现的。2014年制定的《第三次可持续发展基本规划》在经过听取各相关部门意见，专家研讨会，以及可持续发展委员会，绿色增长委员会及国务会议审议

后，2016年1月最终确定下来，与以往的基本规划相比，最大特点就是将规划制定时通过的联合国SDGs纳入了其中。规划由4大目标，14项各领域战略，50个执行课题组成，其中14项各领域战略与17项SGDs是对应的。

国际发展合作领域是通过制定《第二次国际发展合作基本规划》实现SDGs主流化的。该规划在落实国际合作相关SDGs发挥核心作用，它明确规范了ODA相关基本原则和财政计划。2015年11月确定的第二次规划不仅把《2030议程》及SDGs纳入规划背景中，还协调了内容，以便为落实SDGs做贡献。

中国政府在2016年9月19日第七十一届联合国大会上发布了《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处于发展中国家的中国，虽然坚持在全球可持续发展中'开发'始终应占据优先地位，但考虑到在国际社会的影响力，在较快的时间节点表示要忠实履行目标的坚定意志。该方案包括将17项SDGs和169项具体目标与国家发展整体规划有机结合，以及在特别规划中修改，调整并协调的内容。《十三五规划》明确阐述要履行《2030议程》，并将发挥本议程与中国中长期国家发展战略的协同效应作为目标。为此，把SDGs量化为经济，社会，环境领域的具体课题。经济方面发布《》，《全国农业可持续发展规划(2015-2030)》，《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社会方面颁布《打赢脱贫攻坚战》，《健康中国2030》规划纲要；环境方面则发布《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2011-2030)》，《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2014-2020)》。

○ 落实SDGs的制度建设

韩国在落实SDGs的制度建设方面虽然没有具体规划，但作为可持续发展和国际合作政策的主管单位——国务调停室，外交部，环境部等部门均具备

了落实SDGs所必要的制度条件。

而中国为制定依托《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支持推进《2030议程》所需的制度，机制，政策，提出以下四大战略：一是为构建落实《2030议程》所需制度体系，促进改革。二是通过完善法律体系，为落实《2030议程》提供法律保障。三是科学制定政策，为落实《2030议程》提供政策支持。四是明确政府职责，要求各级政府承担主要权责。

○ 执行手段(MoI)动员情况，面临的问题，所需的其他支持

中国政府为落实《2030议程》计划动员所有可利用的资源，包括以下三个战略。一是聚焦财政，税制及金融系统改革，为落实本议程保障合理的财政投入。并以此支持金融部门的可持续发展，促进金融行业整体发展。二是开发创新型合作模式。促进政府与社会资本间合作，引导社会资本投入可持续发展中。三是加强国际合作与交流。为实现可持续发展，中国将积极引入新的发展概念，技术专业性以及其他价值支持。

○ SDGs落实成果和测量及审查

以全球SDGs指标为基础，中国筛选出符合本国国情的163个指标，制定可持续发展指标体系。由于评估指标的目标值很难衡量，因此利用时间序列分析法，分析163个指标的变化趋势，并发现无法连续获得163个指标中的40个指标的数据。为此根据是否方便获取数据，选择并评估了可以连续获得数据的123个指标。各指标的评估结果用三种颜色标示，红色表示情况不容乐观，目标很难实现；绿色表示提前实现目标或目标容易实现；黄色表示执行顺利，通过努力可以实现目标。

| | 韩国 | 中国 |
|---|---|---|
| 国家战略主流化 | • 将SDGs纳入第三次可持续化发展基本规划中 | • 将SDGs纳入十三五规划中 |
| 制度体系 | • 根据具体落实事宜, 国务调停室, 外交部, 环境部分各负其责 | • 外交部主导成立的'跨部门SDGs机制'将负责落实方面的工作 |
| 国家执行计划 | • 国家可持续发展目标, 即'K-SDGs'正在制定中 | • 制定'落实2030可持续发展议程的国家规划(2016)' |
| 议会 | • 为支持落实SDGs, 成立国会UN SDGs论坛 | • 从2015年中国人大通过有关落实SDGs的法案 |
| 监测与审查 | • 统计厅从国家层面筛选SDGs指标进行监测 | • 筛选163个国家指标 |

注: 作者根据UN DESA(2018)重新整理

## 第四章 中韩落实SDGs的合作方案

### 1. SDGs合作必要性

《2030议程》明确规定将合作作为落实议程的一大要素。首先将《2030议程》定义为'到2030年实现具体目标——SDGs所需要的一系列行动计划', 指出'合作'是执行本议程的基本手段。为促进实现SDGs的合作, 联合国DESA还发行了名为《实现SDGs合作影响力最大化》的指南。该指南按资源结合方式和合作带来的便利 类型将合作关系分为'影响&交换', '结合&整合', '变换'三种类型。

○ 两国合作关系的重要性和落实SDGs的关联性

中韩合作关系除围绕FTA的经济合作外, 还广泛分布在环境, 社会, 安保, 技术, 金融等不同领域。仅从两国进出口规模来看, 以2016年为例, 韩国为中国第一大进口来源国, 中国成为的来源地。两国SDGs的应对影响着现有各领域合作, 这反过来又会影响两国关系。通过将两国SDGs落实计划纳入各领域合作关系中, 提高推进SDGs的契合度。

○ 促进中韩两国及东北亚区域合作，发挥SDGs落实协同效应

两国优先推进的相当一部分可持续目标超越了国家概念，具有区域性质。针对这些目标(例如基础设施，贸易，工业，能源，气候变化，海洋，国际合作等)可通过加强现有合作关系和新的合作关系，可有效执行目标，还可发挥不同的协同效应。

○ 构建次区域SDGs执行监测体系

全球SDGs落实情况由HLPF用IAEG(Inter-agency and Expert Group)的SDG指标定期审查。对此，个别会员国通过'自愿国家审查(VNRs)'，提供有关国别履行信息，联合国地区委员会则向HLPF提供各地区的落实成果。与此同时，联合国还建议对次区域(sub-regional)SDGs落实成果进行审查，因为这是在分享国家间经验的同时，也是发掘新的合作机遇。在区域内占较大比重的中韩两国，通过'东北亚区域SDGs落实审查体系'的开发，可以推动东北亚地区SDGs的实现。

围绕中韩的次区域SDGs合作，北欧地区的案例会给我们很多积极启示。北欧地区为可持续发展的合作最早始于首个总理宣言通过的1998年。当时参与合作的国家有丹麦，芬兰，冰岛，挪威，瑞典，巴洛约群岛，格陵兰岛，奥兰多群岛。2001年制定第一次'可持续发展联合战略(join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后，目前实施的是2013年通过的第四次联合战略。北欧的丹麦，芬兰，挪威，瑞典四国首相参加2016年11月在丹麦哥本哈根举行的第六十八届北欧协议会，并探讨了实现SDGs的个别合作方案。2017年9月，北欧国家通过了合作落实《2030议程》的'Generation2030'项目，它有三个核心目标：① 北欧部长级协议会活动将通过该项目为落实《2030议程》

服务，② 在北欧地区分享有关《2030议程》的知识，③ 在域内以及国际社会分享北欧部长级协议会为落实《2030议程》所做的努力。

### 2. 合作方案I：通过中韩合作关系落实SDGs，提高政策契合度

虽然最近建立的国家间合作关系均把与《2030议程》有关的SDGs当做重要因素考略，但建立已久的合作关系并不可能充分从落实议程或SDGs的角度审查其意义和重要性，因为合作关系是为了实现其固有的宗旨和目的的。因此要将《2030议程》与SDGs纳入国家间合作关系，应遵循以下三点。

第一，国家间合作应通过《2030议程》保持与国际原则的一致性。本议程明确了人类，地球，繁荣，和平，合作五大基本原则以及相关国际协议与条约等。这既是设定17项SDGs和169项具体目标的背景，也是落实过程中必须遵守的原则。

第二，国家间合作关系必须与各国的SDGs推进努力保持纵向契合(vertical coherence)。纵向契合表示不同区域为落实SDGs所做努力的契合度，这个概念原来是用于开发合作领域核心评估要素的，最近被运用到《2030议程》与SDGs方面。

第三，《2030议程》正式通过后，以联合国为中心，正在推行全球及区域层面的不同领域的倡议。联合国构筑在线平台‘SDGs合作伙伴(Partnerships for the SDGs)’，提供按SDGs不同目标分类的合作伙伴信息。该平台旨在介绍各领域的合作伙伴，推动利益攸关方参与，从而尽早实现全球SDGs。另外，推动各领域合作伙伴的相互联系。

1) 应贯彻到中韩合作关系中的《2030议程》原则

《2030议程》包括17项SDGs和169项具体目标在内的基本原则。 由于这些原则是通过议题一起得到全体认同的，即使没有将其原则量化到SDGs和具体目标中，也必须在落实目标的过程中全部考虑进去。本文通过分析议题内容，将核心原则概括整理如下：

- 议题执行及其合作：共同为世界各国及全球带来福祉的国际开发与合作做贡献(《2030议程》19段)
- 遵守国际准则：依循《联合国宪章》的宗旨和原则，充分尊重国际法。它以《世界人权宣言》，国际人权条约，《联合国千年宣言》和2005年世界首脑会议成果文件为依据。(《2030议程》10段)
- 两性平等：努力争取为缩小两性差距大幅增加投入，在性别平等和增强妇女权能方面，在全球，区域和国家各级进一步为各机构提供支持。(《2030议程》20段)
- 区域及次区域合作：承认区域和次区域因素，区域经济一体化和区域经济关联性在可持续发展过程中的重要性。(《2030议程》21段)
- 消除贫困：承诺消除一切形式和表现的贫困，包括到2030年时消除极端贫困。为此重申世界粮食安全委员会需要各方参与并发挥重要作用，欢迎《营养问题罗马宣言》和《行动框架》。(《2030议程》24段)
- 优质教育：承诺在各级提供包容和平等的优质教育——幼儿教育，小学，中学和大学教育，技术和职业培训。(《2030议程》25段)
- 新生儿，儿童和孕产妇保护：承诺加快迄今在减少新生儿，儿童和孕产妇死亡率方面的进展，到2030年时将所有可以预防的死亡减至零。承诺让所有人获得性保健和生殖保健服务，包括计划生育服务，提供信息和教育。

并承诺预防和治疗非传染性疾病，包括行为，发育和神经系统疾病。(《2030议程》26段) 消灭强迫劳动和人口贩卖，消灭一切形式的童工。(《2030议程》27段)

- 可持续的消费与生产：承诺从根本上改变我们的社会生产和消费商品及服务的方式。鼓励执行《可持续消费和生产模式方案十年框架》。(《2030议程》28段)
- 气候变化：确认《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是谈判确定全球气候变化对策的首要国际政府间论坛。决心果断应对气候变化和环境退化带来的威胁。(《2030议程》31段)
- 生物多样性：决心保护和可持续利用海洋，淡水资源以及森林，山地和旱地，保护生物多样性，生态系统和野生动植物。我们还决心促进可持续旅游，解决缺水和水污染问题，加强在荒漠化，沙尘暴，土地退化和干旱问题上的合作，加强灾后恢复能力和减少灾害风险。(《2030议程》33段)
- 世界公民意识和共同责任：促进不同文化间的理解，容忍，相互尊重，确立全球公民道德和责任共担。(《2030议程》36段)
- 完整的自决权和独立性：呼吁依照国际法进一步采取有效的措施和行动，消除处于殖民统治和外国占领下的人民充分行使自决权的障碍，因为这些障碍影响到他们的经济和社会发展，以及他们的环境。(《2030议程》第35段)根据《联合国宪章》重申尊重各国的领土完整和政治独立的必要性。(《2030议程》38段)

2) 提高国家SDGs政策和两国合作关系的垂直契合度

为加强执行手段，本议程的目标17明确把具体目标14定为‘提高可持续发展的政策契合度’。政策契合度不仅是SDGs执行原则，也是设定的独立目标。

本文为方便审查未来个别合作关系的SDGs契合度，按不同类型调查中韩合作关系后，根据17项目标进行了分类。

| | 会议, 委员会, 协定 | 协议会, 论坛 |
|---|---|---|
| 1. 贫困 | | • 中韩社会保险协定<br>• 中韩社会保障协定 |
| 2. 饥饿, 可持续的农业 | • 中韩FTA联合研究农业专家会议<br>• 中韩农业合作会议<br>• 中韩农业合作委员会 | • 中韩社会经济论坛<br>• 中韩食品标准专家协议会<br>• 中韩食品专家协议会 |
| 3. 健康, 乐活 | • 中韩医学交流促进委员会<br>• 中韩动物卫生检疫合作协定 | |
| 4. 优质的教育 | • 认证协定 | • 中韩大学校长论坛<br>• 中韩历史学家论坛<br>• 中韩留学生论坛<br>• 中韩人文学论坛<br>• 中韩下一代领导论坛<br>• 中韩青年领导者论坛<br>• 中韩青年论坛 |
| 5. 两性平等 | | • 中韩妇女界知名人士论坛 |
| 6. 干净的水和卫生 | • 中韩动物卫生检疫合作协定<br>• 中韩环境合作协定 | |
| 7. 能源 | • 中韩原子能联合委员会 | • 中韩能源民官协议会<br>• 中韩能源协议会 |
| 8. 体面工作和经济增长 | • 中韩经济部长会议<br>• 中韩经贸联合委员会<br>• 中韩青年就业创业发展委员会 | • 中韩经济论坛<br>• 中韩经济合作论坛<br>• 中韩社会经济论坛 |
| 9. 工业, 创新, 基础设施 | • 中韩产业合作部级对话会议<br>• 中韩工业园局级工作组会议<br>• 中韩游戏产业联合委员会<br>• 中韩无线电管理局长会议<br>• 中韩互联网圆桌会议<br>• 中韩知识产权局局长会议<br>• 中韩投资合作委员会<br>• 中韩著作权政府间会议<br>• 中韩陆海联运汽车货物运输协定<br>• 中韩航空协定 | • 中韩企业家高峰论坛<br>• 中韩文化产业论坛<br>• 中韩产业合作投资论坛<br>• “一带一路”中韩企业高峰论坛<br>• 中韩汽车产业发展论坛<br>• 中韩著作权论坛<br>• 中韩海外建设论坛<br>• 中韩产业园合作协调机制<br>• 中韩产业合作园区工作协议会 |
| 10. 消除不公平 | | • 中韩社会责任论坛<br>• 中韩社会保险协定<br>• 中韩社会保障协定 |
| 11. 可持续的城市与社区 | • 中韩省长知事会议<br>• 中韩环境合作联合委员会<br>• 中韩环境合作计划 | • 中韩社会经济论坛<br>• 中韩旅游工作协议会<br>• 中韩导游协议会<br>• 中韩民间文化交流协议会 |

| | 会议, 委员会, 协定 | 协议会, 论坛 |
|---|---|---|
| 12. 可持续的消费与生产 | • 中韩高层财经界对话会<br>• 中韩环境合作联合委员会<br>• 中韩环境合作计划<br>• 中韩环境合作协定 | • 中韩企业家高峰论坛<br>• 中韩商务论坛<br>• 中韩资源循环论坛 |
| 13. 应对气候变化 | • 中韩气象台合作会议<br>• 中韩环境合作联合委员会<br>• 中韩环境合作计划 | |
| 14. 海洋生态界 | • 中韩海事安全政策会议<br>• 中韩渔业联合委员会<br>• 中韩海洋科技合作联合委员会<br>• 中韩环境合作联合委员会<br>• 中韩环境合作计划<br>• 中韩渔业协定<br>• 中韩环境合作协定 | |
| 15. 陆地生态界 | • 中韩环境合作计划<br>• 中韩 环境合作联合委员会<br>• 中韩环境合作协定 | |
| 16. 正义, 和平, 制度 | • 中韩海事安全政策会议<br>• 中韩国防工作组会议<br>• 中韩国防政策工作组会议<br>• 中韩搜寻救助<br>• 中韩军事信息协定<br>• 中韩领事协定<br>• 中韩和平协定<br>• 中韩海上救援协定<br>• 中韩民商事司法协助条约<br>• 中韩刑事司法协助条约 | • 中韩媒体高层论坛<br>• 中韩反恐协议会<br>• 中韩友好交流协议会<br>• 中韩议员外交协议会<br>• 中韩东亚协议会 |
| 17. 国际合作 | • 中韩自贸协定(FTA)联委会<br>• 中韩基础科学交流委员会<br>• 中韩无线电管理局长会议<br>• 中韩互联网圆桌会议<br>• 中韩税务局长会议<br>• 中韩著作权政府间会议<br>• 中韩税收政策交流会<br>• 中韩 IT资格相互认证协定<br>• 中韩领事协定<br>• 中韩电影合拍协议<br>• 中韩自由贸易协定<br>• 中韩税收协定<br>• 中韩货币互换协定<br>• 中韩税收条约 | • 中韩FTA论坛<br>• 中韩经济合作论坛<br>• 中韩公共外交论坛<br>• 中韩科学合作论坛<br>• 中韩未来论坛<br>• 中韩商务论坛<br>• 中韩新万金项目投资合作论坛<br>• 中韩著作权论坛<br>• 中韩领导者论坛<br>• 中韩经济交流促进协议会<br>• 中韩民间经济协议会<br>• 中韩经贸民官协议会<br>• 中韩经贸合作协议会 |

注: 各领域中韩合作关系是通过调查相关部门官网, 报告, 媒体报道等收集的。
资料: 作者重新整理

3) 与全球SDGs倡议对接

把SDGs纳入中韩合作关系的另一种方式就是将各类合作关系与联合国相关项目或倡议进行对接。这不仅能保障各种合作关系与落实全球SDGs步调一致，落实区域SDGs的努力也能得到认可。

目前，由17项目标和169项具体目标构成的SDGs正在通过各类国际协议和全球倡议得到落实。尤其，最近国家间达成的被受关注的环境协议或倡议与SDGs有机融合。由于中韩两国拟计划积极参与国际环境问题的主要协议与倡议，因此这些努力应反映在两国合作关系上。

DESA调查联合国36个机构SDGs落实情况后，发表了《联合国可持续发展三个维度的主流化》报告。该报告介绍的联合国为落实SDGs所做的努力和主要工作如下:

| 机关 | 为落实主要SDGs所做的努力 |
|---|---|
| 国际组织 | 将SDGs执行纳入2017-19年管理计划 |
| 联合国环境规划署 | 将SDGs执行纳入2018-19年中期战略<br>超过86项具体目标与环境可持续性有关<br>全球SDGs指标中，管理26个有关环境的指标 |
| 联合国人权事务高级专员办事处 | 协助会员国及利益攸关方强化能力及审查国家资源<br>提高对SDGs与人权相互联系的认识 |
| 促进性别和增强妇女权能署 | 为会员国提供整体政策咨询及支持开发包容，具体的资料及实力开发<br>支持《2030议程》与SDGs落实两性平等责任 |
| 资本开发基金会 | 围绕SDG1(脱贫)和SDG 17(国际合作)，制定2018-21战略<br>利用本土融资解决方案，为实现SDGs做贡献 |
| 儿童基金会 | 将战略优先顺序放在SDG 11(可持续城市和社区)，制定2015年保健战略和水，卫生战略<br>有力推进终结对儿童的暴力<br>成立救助儿童会和全球消除儿童贫困联盟 |
| 工业发展组织 | 将成果中心的管理代码与相关SDGs结合起来 |
| 最不发达国家高级代表处，内陆发展中国家和小岛屿发展中国家办事处 | 分析其项目与SDGs的关联性，以提高协同效应<br>把《2030议程》纳入项目预算 |
| 世界知识产权组织 | 促进创新，实现SDGs |
| 世界贸易组织 | 设立'跨部门工作组'，监测内部实现贸易相关SDGs情况 |

资料：作者用表格重新整理UN(2018a)的具体内容。

## 3 . 合作方案II: 为落实SDGs加强两国合作

中韩两国可在上述‘影响&交换’和‘结合&整合’类型的合作模式中寻找更多落实SDGs的合作机会。为明确指出影响&交换型合作机会，本文调查了两国的合作需求。针对韩国的需求，考察了各SDGs的政策课题，找出需要合作的领域；而对中国的需求，则参考了中国生态环境部环境规划院的分析结果。’

### A. 影响&交换类型的合作机会

1) 韩国落实SDGs的合作需求

环境部通过各领域专家参与2017年科研课题《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国内进展情况及课题分析研究(环境政策评估研究院，2017)》，总结整理了17项目标和169项具体目标在韩国的落实情况及政策课题。本文从中把有必要和域内国家合作的具体目标同相关国内政策课题筛选出来，并增加了在落实SDGs方面具有‘合作需求’的领域。具体参考下表下:

| 具体目的 | 相关国内政策课题 | 合作需求 |
|---|---|---|
| ○ 具体目标2.b<br>• 纠正和防止世界农业市场上的贸易限制和扭曲 | | • 纠正和防止农产品市场上的贸易限制和扭曲的合作 |
| ○ 具体目标3.3<br>• 消除传染病 | • *继续加强监控机制，防止新传染病发生*<br>• *加强有关肺结核的信息体系* | • 有关传染病监控机制的合作 |
| ○ 具体目标6.5<br>• 水资源综合管理 | • *制定应对国家统一的国际河流管理政策* | • 有关国际河流管理的合作 |
| ○ 具体目标7.2<br>• 到2030年提高全球可再生能源比重 | • *开拓新能源和可再生能源市场*<br>• *强化相关产业基础设施* | • 开辟区域可再生能源市场<br>• 合作开发相关国际标准 |
| ○ 具体目标7.a<br>• 加强国际合作，开发普及清洁能源 | | • 加强国际合作，研究清洁能源和开发相关技术 |

| 具体目的 | 相关国内政策课题 | 合作需求 |
| --- | --- | --- |
| ○ 具体目标8.9<br>• 振兴可持续旅游 | *• 为可持续旅游,<br>保持与国际机构及其他国家间合作关系* | • 振兴可持续旅游的合作 |
| ○ 具体目标11.6<br>• 减低城市的负面环境影响 | *• 加强大气污染防治中日韩环境部长会议的合作*<br>*• 构建降低微颗粒物中韩紧急热线* | *• 构建降低微颗粒物中韩紧急热线* |
| ○ 具体目标12.7<br>• 扩大可持续公共采购 | *• 加强韩国在国际社会的影响力* | • 分享韩国的可持续公共采购经验 |
| ○ 具体目标13.3<br>• 加强气候变化教育培训 | *• 加强应对气候变化能力及技术转让*<br>*• 通过中俄及国际机构, 引导朝鲜参与* | • 中韩合作,<br>加强朝鲜对应气候变化的能力 |
| ○ 具体目标14.4<br>• 防止非法及过度捕捞 | *• 出台规范中国渔船非法捕捞政策措施*<br>*• 推动港口国家检索制度及捕捞证明制度* | • 有关终止非法捕捞的合作 |
| ○ 具体目标15.2<br>• 停止破坏森林,<br>扩大保护森林和重新造林 | *• 与国际机构及朝鲜合作,<br>加强联合应对气候变化能力* | • 森林领域国际合作 |

2) 中国落实SDGs的合作构想

中国政府对内通过《十三五规划》明确指出以发展思想和创新, 和谐, 环保, 开放, 共享为发展理念, 确定落实《2030议程》的基本方向, 同时促进中国经济发展和新的工业化, 信息化, 城镇化, 农业现代化也是推进可持续发展目标的坚实基础。对外, 则正在努力加强《2030议程》与一带一路倡议的结合, 扩大与国际机构的合作力度, 同时将其与支援发展中国家的'南南合作'进行对接。

○ SDGs落实与一带一路的结合

中国正在推进一带一路国际合作, 加强与相关国家在基建的互联互通, 工业投资, 生态环境, 金融, 人文交流等主要领域的合作。截止2017年7月, 中国已与60多个国家和国际机构签署合作协议, 正在构建为发展中国家建设基础设施的合作体系。同年5月, 中国召开“”。一带一路在基建方面的目标SDG9和其他社会, 环境, 经济领域的目标有着紧密的联系。中国强调, 一

带一路对落实《2030议程》有着举足轻重的作用，中方将通过一带一路倡议支持本议程的落实，为此将扩大与国际机构的合作。

○ 扩大与国际机构的合作

中国正在推进一带一路国际合作，加强与相关国家在基建的互联互通，工业投资，生态环境，金融，人文交流等主要领域的合作。截止2017年7月，中国已与60多个国家和国际机构签署合作协议，正在构建为发展中国家建设基础设施的合作体系。同年5月，中国召开“”。一带一路在基建方面的目标SDG9和其他社会，环境，经济领域的目标有着紧密的联系。中国强调，一带一路对落实《2030议程》有着举足轻重的作用，中方将通过一带一路倡议支持本议程的落实，为此将扩大与国际机构的合作。

○ 与南南合作的对接

最近几年，中国一直致力于对发展中国家的援助。已向非洲国家提供100亿美元优惠贷款，向东盟的老挝，柬埔寨等最不发达国家提供150亿美元信用贷款，以支持该地区的基础设施建设。并将资金托管给世界银行所属国际开发协会(IDA)，亚洲开发银行，国际农业开发基金会(IFAD)等机构，还在联合国及相关国际机构设立专项发展基金，成立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AIIB)，金砖国家新开发银行(NDB)，与中东欧成立‘16+1’金融控股公司等。

2016年9月，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纪念联合国成立七十周年首脑峰会上宣布，设立中国-联合国和平与发展基金，南南合作援助基金，国际发展知识中心以及南南合作与发展学院。2017年5月，中国发表向南南合作援助基金追加10亿美元援助款。2016年4月，在北京大学设立南南合作与发展学

院，提供一定定额的学位课程，通过分享发展案例，提高相关国家实现可持续发展目标的能力。

### B. 结合&整合类的合作机会：基于两国SDGs挑战因素的合作领域

可持续发展解决方案网络(SDSN)和贝塔斯曼基金会发布了《可持续发展目标指数和仪表板报告》。本文利用该报告比较中韩两国落实SDGs的水平，并找出双方的合作需求。

该报告为评估各国的SDGs落实水平选出114个指标，其中有些与UN SDGs指标一致，有些是不一致的。另外还把对会员国分组，韩国归到OECD国家，中国则归到东亚国家。本文对中韩两国的比较仅限于均适用两国的指标。根据指标评估分数的高低，用绿色(4)-黄色(3)-橘黄色(2)-红色(1)标注。落实水平高的用绿色标注，然后依次是黄色-橘黄色，红色则是水平低的。(灰色表示无资料)

为比较两国在SDGs各目标下，相关指标的落实水平，找出具有合作需求的部分，将结果分成三个部分：① 韩国占比较优势的领域，② 中国占比较优势的领域 ③ 两国均有待提升的领域。首先是韩国占比较优势的领域，请见下表:

| 目标 | 指标 | 韩国 | | 中国 | |
|---|---|---|---|---|---|
| | | 分数 | 度 | 分数 | 度 |
| G3 | Age-standardised death rate attributable to household air pollution and ambient air pollution (per 100,000 population) | 16.5 | • (4) | 169.4 | • (1) |
| | Traffic deaths rate (per 100,000 population) | 12.0 | • (3) | 19.4 | • (1) |
| | Subjective Wellbeing (average ladder score, 0-10) | 5.9 | • (3) | 5.1 | • (2) |
| G4 | Mean years of schooling | 12.2 | • (4) | 7.6 | • (1) |

| 目标 | 指标 | 韩国 | | 中国 | |
|---|---|---|---|---|---|
| | | 分数 | 度 | 分数 | 度 |
| G7 | Access to clean fuels & technology for cooking (% population) | 100.0 | • (4) | 57.2 | • (2) |
| | $CO_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electricity output ($MtCO_2$/TWh) | 1.1 | • (3) | 1.6 | • (1) |
| G9 |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sing the internet (%) | 92.8 | • (4) | 53.2 | • (2) |
| G10 | Gini Coefficient adjusted for top income (1-100) | 32.3 | • (3) | 41.9 | • (1) |
| G12 | Anthropogenic wastewater that receives treatment (%) | 84.8 | • (4) | 16.1 | • (2) |
| | Production-based $SO_2$ emissions (kg/capita) | 14.5 | • (3) | 25.5 | • (2) |
| G13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Monitor (best 0-1 worst) | 0.0 | • (4) | 0.3 | • (1) |
| G15 | Annual change in forest area (%) | 3.5 | • (3) | 5.0 | • (2) |
| G16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0-100) | 54.0 | • (3) | 41.0 | • (2) |

以下是中国占比较优势的领域。

| 目标 | 指标 | 韩国 | | 中国 | |
|---|---|---|---|---|---|
| | | 分数 | 度 | 分数 | 度 |
| G6 | Freshwater withdrawal as % total renewable water resources | 57.6 | • (2) | 29.9 | • (3) |
| G12 | E-waste generated (kg/capita) | 15.9 | • (1) | 4.4 | • (4) |
| | Net imported $SO_2$ emissions (kg/capita) | 11.2 | • (2) | -5.7 | • (4) |
| | Reactive nitrogen production footprint (kg/capita) | 33.9 | • (2) | 22.8 | • (3) |
| G16 | Government Efficiency (1-7) | 3.5 | • (2) | 4.3 | • (3) |

最后是中韩两国都要努力提升的领域。下面用橘黄色和红色标注了有待提升的指标。

| 目标 | 指标 | 韩国 | | 中国 | |
|---|---|---|---|---|---|
| | | 分数 | 度 | 分数 | 度 |
| G2 |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 | 0.6 | • (2) | 0.8 | • (1) |
| G3 | Incidence of tuberculosis (per 100,000 population) | 77.0 | • (1) | 64.0 | • (2) |
| G5 |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 17.0 | • (1) | 24.2 | • (2) |
| G11 |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of less than 2.5 microns of diameter (PM2.5) in urban areas($\mu g/m^3$) | 28.7 | • (1) | 58.4 | • (1) |
| G13 | Energy-related $CO_2$ emissions per capita ($tCO_2$/capita) | 11.6 | • (1) | 7.5 | • (1) |
| G14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marine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26.8 | • (2) | 18.8 | • (2) |
| | Fish caught by trawling() (%) | 45.1 | • (2) | 60.0 | • (1) |
| G15 | Red List Index of species survival (0-1) | 0.8 | • (1) | 0.8 | • (1) |

根据以上比较两国占据优势领域的结果显示，在同一目标下，两国占比较优势的指标是不同的。即使占据优势，也并不一定可以相互合作。例如，比较目标8下调整过的两国经济增长率，韩国为-0.5%，中国为3.1%，然而经济增长率并不是因两国加强特定领域的合作或共享知识，经验及系统就会大大提高的部分。因此，为挖掘新的合作需求，有必要选择具有实际合作可能性，通过合作能够提高目标达成度，在两国切实存在需求的领域。

为此，我们可以考虑一下危害健康的微颗粒物管理，电子废弃物产生管理，红色目录指数管理等方面的合作。包括颗粒物在内的大气领域的中韩合作已经在‘中韩未来愿景联合声明’与‘中韩环境合作规划(2018-2020)’中作为主要合作领域被提及过。随着第22次中韩环境合作联合委员会会议达成提升人民生活质量，增进健康水平的共识，笔者认为双方能够在加强危害健康的微颗粒物管理上达成一致。此外，由于两国通过大气质量联合研究团，持续开展联合研究，在该领域提高合作关系的空间很高。

电子废弃物领域的合作曾在‘中日韩可持续发展联合声明’和‘东北亚和平与合作联合宣言’中多次成为国家间合作热点话题，也是中韩环境合作规划(2018-2020)的主要合作领域。此间的合作焦点是国家间的移动，如今应该将其扩大到废弃物产生管理方面。

SDSN为评估目标15所选择的红色目录指数与UN SDGs的具体目标15.5是一致的。具体目标15.5是‘采取紧急重大行动来减少自然栖息地的退化，遏制生物多样性的丧失，到2020年，保护濒危物种，防止其灭绝’。根据现有联合声明来看，在保护生物多样性方面的合作需求一直是存在的。此外，韩国环境部和中国国家林业局在2014年签署了《关于系统》，2015年在环境部长会议上，韩方为其繁育复原濒危野生动植物项目，请求中国协助提供濒危物种种源。因此，两国在包括保护濒危物种在内的生物多样性领域提升合作关

系的可能性非常高。

### 4. 合作方案III: 构筑次区域SDGs监测及执行合作体系

《2030议程》成员国要对其国家层面SDGs实施进展'进行和具有的'。中韩两国根据各自国情正在制定或已完成制定可持续发展指标。韩国政府正在制定K-SDGs目标和指标，提出218项指标。中国政府则制定了128项指标，并已进行自主评估。两国均以UN-SDGs为准，确定属于各目标的相关指标，没有另外制定国家目标。目前还没有指定各目标中重点推进的指标或为各指标设定优先顺序。

《2030议程》强调，国家层面的审查和区域及次区域层面成果监测的合作必要性。次区域合作可以补充国家层面审查，并以生产区域新信息为目的。通过不同层次范围的审查，可有效区分区域成果测定和实现SDGs方面遇到的瓶颈与挑战。

全亚洲地区《2030议程》监测工作由联合国亚太经济社会委员会(ESCAP)主导。ESCAP调查解整个亚太地区议程落实进展，并将其每年作为审查全球目标实施进展情况的基础资料提供给主管机构HLPF。ESCAP监测各区域成果的努力还体现在利用指标定期评估，提高国家统计能力与生产相关知识等包容性领域。

东北亚次区域的《2030议程》合作不仅对该地区，对中韩两国落实SDGs也将非常有利，而此时中韩的积极参与将起到举足轻重的作用。要想构建次区域监测体系，一定要明确'监测目的'，'测定指标体系'，'测定结果的反馈与运用'等事宜。

次区域的SDGs评估目的是 ① 为审查区域及次区域SDGs提供基础资料，

② 挖掘各领域薄弱国家及合作领域, ③ 分析该区域政策及合作的SDGs波及效应等。测定指标体系开发以IAEG-SDGs的'全球SDGs指标'为基础, 考虑次区域'数据能力'及相关统计资料的利用可能性等因素。前面所说的针对亚太地区的ESCAP指标体系是由全球SDG指标中的60个和以替代指标形式追加的6个指标构成。次区域SDGs落实测定结果可以运用到将个别国家SDGs目标达成度与周边国家进行比较, 并将其纳入寻求区域, 全球合作中。

为正式定义次区域SDGs监测目的与运用方式, 应同时构建起域内落实SDGs的合作体。基于此, 本文就东北亚次区域SDGs监测及落实合作做如下建议:

○ 东北亚SDGs监测体系

- 作用: ① 开发次区域SDGs监测指标体系, ② 测定次区域SDGs落实成果

○ 东北亚SDGs合作体系

- 作用: ① 审查次区域SDGs落实成果, ② 编写次区域成果报告, ③ 挖掘域内落实SDGs合作项目

○ 东北亚可持续发展论坛

- 作用: ① 长期可持续发展展望及联手应对挑战因素, ② 挖掘域内不同主题(thematic)的合作, ③ 建立公共及民间合作网络

## 第五章 结论

《2030议程》将合作明确定义为落实议程的一个要素。首先将《2030议程》

定义成'到2030年为实现SDGs所需的一系列行动计划'，指出合作是执行本议程的基本工具。包括实现SDGs在内的落实议程的责任与权限基本在于各会员国自身，但要明确的是具体落实应该通过不同形式的合作实现。落实国家层面《2030议程》的核心在于将包括SDGs在内的相关事宜与在，和各级的政策，倡议相结合。此时，区域和次区域合作则通过合作连接国家间的目标，提高所有参与国家实现SDGs，或者通过援助薄弱国家，提升该地区实现SDGs的水平。

考虑中韩两国的地位，期待两国能为东北亚地区成功落实SDGs发挥主导作用。为此，本文提出以下三种合作方案。

第一，中韩合作关系实现SDGs主流化。落实国家层面《2030议程》的核心是将国家各领域政策同SDGS相结合。议程强调，在落实SDGs的同时，要加强区域及次区域合作。所谓的主流化就是在SDGs脉络中重新调整现有中韩合作关系，这可以有效帮助两国落实SDGs，还有助于提升现有中韩合作关系的有效性和契合度。两国合作关系实现SDGs主流化应该遵循以下三点：① 将《2030议程》的主要原则充分融入合作关系中，② 实现两国有关SDGs政策的高度契合，③ 与全球性SDGs倡议紧密互联。

第二，挖掘两国在落实SDGs方面具有协同效益的新的合作关系。中国对SDGS和一带一路的相关性倾注极大关注。目前正在为推进一带一路倡议，与相关国家，国际机构协商相关政策，共同策划开发战略，加强在基础设施互联互通，工业投资，生态环境，金融，人文交流等主要领域的实质性合作。截止2017年7月，中国已与60多个国家及国际机构签署了合作协定。中国的这一战略将对韩国积极强化东北亚合作关系产生不小的影响。尽管在其他领域构筑新的合作关系也非常重要，但考虑到中国的SDGs落实战略，显然以一带一路倡议寻求新的合作关系具有现实性的优势。

第三，建立包括中韩两国在内的次区域SDGs执行成果监测体系。通过次区域审查，为个别国家提供互学互鉴环境相似的周边国家案例，可以相互审核成果，通过设定区域目标，提高整个区域执行成果。《2030议程》鼓励构建这样的(次)区域执行成果体系。并通过它测定区域的成果以及有效认识在实现SDGs过程中遇到的瓶颈与挑战。为此需进行如下阶段性合作。① 规定次区域范围及构建协议体，② 成立SDGs执行成果审查委员会及论坛 ③ 制定次区域SDGs执行成果报告等。

## 2. Indicator Threshold[202)]

SDG 대시보드의 구성을 위해 각 지표에 대해 0에서 100까지의 범위가 설정(상한값(최상위, 100) 과 하한값(최하위, 0))되었다. 녹색은 SDG가 달성됨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주요 문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노란색과 주황색은 아직 도전과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 SDG | Label | Best (value = 100) | Green | Yellow | Orange | Red | Worst (value = 0) |
|---|---|---|---|---|---|---|---|
| 1 | 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day (% population) | 0 | ≤2 | 2 < x ≤ 7.4 | 7.4 < x ≤ 12.7 | >12.7 | 72.6 |
| 1 | Projected 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day in 2030 (% population) | 0 | ≤1 | 1 < x ≤ 2 | 2 < x ≤ 3 | >3 | 66.9 |
| 1 |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 population) | 6.1 | ≤10 | 10 < x ≤ 12.5 | 12.5 < x ≤ 15 | >15 | 17.7 |
| 2 |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 population) | 0 | ≤7.5 | 7.5 < x ≤ 11.3 | 11.3 < x ≤ 15 | >15 | 42.3 |
| 2 | Prevalence of stunting (low height-for-age)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 0 | ≤7.5 | 7.5 < x ≤ 11.3 | 11.3 < x ≤ 15 | >15 | 50.2 |
| 2 | Prevalence of wasting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 0 | ≤5 | 5 < x ≤ 7.5 | 7.5 < x ≤ 10 | >10 | 16.3 |
| 2 | Prevalence of obesity, BMI ≥ 30 (% adult population) | 2.8 | ≤10 | 10 < x ≤ 17.5 | 17.5 < x ≤ 25 | >25 | 35.1 |
| 2 | Cereal yield (t/ha) | 8.6 | ≥2.5 | 2.5 > x ≥ 2 | 2 > x ≥ 1.5 | <1.5 | 0.6 |
| 2 |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 | 0 | ≤0.3 | 0.3 < x ≤ 0.5 | 0.5 < x ≤ 0.7 | >0.7 | 1.2 |
| 3 | Maternal mortality rate (per 100,000 live births) | 3.4 | ≤70 | 70 < x ≤ 105 | 105 < x ≤ 140 | >140 | 814 |
| 3 |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 1.1 | ≤12 | 12 < x ≤ 15 | 15 < x ≤ 18 | >18 | 39.7 |
| 3 | Mortality rate, under-5 (per 1,000 live births) | 2.6 | ≤25 | 25 < x ≤ 37.5 | 37.5 < x ≤ 50 | >50 | 130.1 |
| 3 | Incidence of tuberculosis (per 100,000 people) | 3.6 | ≤10 | 10 < x ≤ 42.5 | 42.5 < x ≤ 75 | >75 | 561 |
| 3 | HIV prevalence (per 1,000) | 0 | ≤0.2 | 0.2 < x ≤ 0.6 | 0.6 < x ≤ 1 | >1 | 16.5 |
| 3 | Age-standardized death rate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and chronic respiratory disease in populations age 30–70 years (per 100,000 population) | 9.3 | ≤15 | 15 < x ≤ 20 | 20 < x ≤ 25 | >25 | 31 |
| 3 | Age-standardized death rate attributable to household air pollution and ambient air pollution (per 100,000 population) | 0 | ≤18.1 | 18.1 < x ≤ 84.5 | 84.5 < x ≤ 150.9 | >150.9 | 368.8 |
| 3 | Traffic deaths rate (per 100,000 people) | 3.2 | ≤8.4 | 8.4 < x ≤ 12.6 | 12.6 < x ≤ 16.8 | >16.8 | 33.7 |
| 3 |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 73.6 | ≥65 | 65 > x ≥ 62.5 | 62.5 > x ≥ 60 | <60 | 46.1 |
| 3 | Adolescent fertility rate (births per 1,000 women ages 15-19) | 2.5 | ≤25 | 25 < x ≤ 37.5 | 37.5 < x ≤ 50 | >50 | 139.6 |
| 3 |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 | 100 | ≥98 | 98 > x ≥ 94 | 94 > x ≥ 90 | <90 | 23.1 |

202) Sachs, J., et al.(2018) pp.61-65.

| SDG | Label | Best (value = 100) | Green | Yellow | Orange | Red | Worst (value = 0) |
|---|---|---|---|---|---|---|---|
| 3 | Percentage of surviving infants who received 2 WHO-recommended vaccines (%) | 100 | ≥90 | 90 > x ≥ 85 | 85 > x ≥ 80 | <80 | 41 |
| 3 | Universal Health Coverage Tracer Index (0-100) | 100 | ≥80 | 80 > x ≥ 70 | 70 > x ≥ 60 | <60 | 38.2 |
| 3 | Subjective Wellbeing (average ladder score, 0-10) | 7.6 | ≥6 | 6 > x ≥ 5.5 | 5.5 > x ≥ 5 | <5 | 3.3 |
| 3 | Gap in life expectancy at birth among regions (years) | 0 | ≤4 | 4 < x ≤ 5.5 | 5.5 < x ≤ 7 | >7 | 11 |
| 3 |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income (0-100) | 0 | ≤20 | 20 < x ≤ 25 | 25 < x ≤ 30 | >30 | 41.1 |
| 3 | Daily smokers (% population age 15+) | 10.1 | ≤20 | 20 < x ≤ 22.5 | 22.5 < x ≤ 25 | >25 | 29.8 |
| 4 | Net primary enrolment rate (%) | 100 | ≥98 | 98 > x ≥ 89 | 89 > x ≥ 80 | <80 | 53.8 |
| 4 | Mean years of schooling (years) | 13.2 | ≥12 | 12 > x ≥ 11 | 11 > x ≥ 10 | <10 | 2.3 |
| 4 | Literacy rate of 15-24 year olds, both sexes (%) | 100 | ≥95 | 95 > x ≥ 90 | 90 > x ≥ 85 | <85 | 45.2 |
| 4 | Population age 25-64 with tertiary education (%) | 52.2 | ≥25 | 25 > x ≥ 20 | 20 > x ≥ 15 | <15 | 16.8 |
| 4 | PISA score (0-600) | 525.6 | ≥493 | 493 > x ≥ 446.5 | 446.5 > x ≥ 400 | <400 | 415.7 |
| 4 | Percentage of variation in science performance explained by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 8.3 | ≤10.5 | 10.5 < x ≤ 15.3 | 15.3 < x ≤ 20 | >20 | 21.4 |
| 4 | Students performing below level 2 in science (%) | 9.8 | ≤12 | 12 < x ≤ 21 | 21 < x ≤ 30 | >30 | 47.8 |
| 4 | Resilient students (%) | 46.6 | ≥38 | 38 > x ≥ 29 | 29 > x ≥ 20 | <20 | 12.8 |
| 5 | Estimated demand for contraception that is unmet (% women married or in union, ages 15-49 ) | 0 | ≤20 | 20 < x ≤ 30.7 | 30.7 < x ≤ 41.3 | >41.3 | 85.8 |
| 5 | Ratio of female to male mean years of schooling of population age 25 and above | 100 | ≥98 | 98 > x ≥ 86.5 | 86.5 > x ≥ 75 | <75 | 41.8 |
| 5 | Ratio of female to 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100 | ≥70 | 70 > x ≥ 60 | 60 > x ≥ 50 | <50 | 21.5 |
| 5 |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 50 | ≥40 | 40 > x ≥ 30 | 30 > x ≥ 20 | <20 | 1.2 |
| 5 | Gender wage gap (Total, % male median wage) | 0 | ≤7.5 | 7.5 < x ≤ 11.3 | 11.3 < x ≤ 15 | >15 | 36.7 |
| 6 | For high-income and OECD countries countries :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water services (%) | 100 | ≥95 | 95 > x ≥ 87.5 | 87.5 > x ≥ 80 | <80 | 10.5 |
| 6 | For all other countries : Population using at least basic drinking water services (%) | 100 | ≥98 | 98 > x ≥ 89 | 89 > x ≥ 80 | <80 | 40 |
| 6 | For high-income and OECD countries countries :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sanitation services (%) | 100 | ≥90 | 90 > x ≥ 77.5 | 77.5 > x ≥ 65 | <65 | 14.1 |

| SDG | Label | Best (value = 100) | Green | Yellow | Orange | Red | Worst (value = 0) |
|---|---|---|---|---|---|---|---|
| 6 | For all other countries : Population using at least basic sanitation services (%) | 100 | ≥95 | 95 > x ≥ 85 | 85 > x ≥ 75 | <75 | 9.7 |
| 6 | Freshwater withdrawal as % total renewable water resources | 12.5 | ≤25 | 25 < x ≤ 50 | 50 < x ≤ 75 | >75 | 100 |
| 6 | Imported groundwater depletion ($m^3$/year/capita) | 0.1 | ≤5 | 5 < x ≤ 12.5 | 12.5 < x ≤ 20 | >20 | 42.6 |
| 7 | Access to electricity (% population) | 100 | ≥98 | 98 > x ≥ 89 | 89 > x ≥ 80 | <80 | 9.1 |
| 7 | Access to clean fuels and technology for cooking (% population) | 100 | ≥85 | 85 > x ≥ 67.5 | 67.5 > x ≥ 50 | <50 | 2 |
| 7 | $CO_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electricity output ($MtCO_2$/TWh) | 0 | ≤1 | 1 < x ≤ 1.3 | 1.3 < x ≤ 1.5 | >1.5 | 3.3 |
| 7 |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 | 51.4 | ≥20 | 20 > x ≥ 15 | 15 > x ≥ 10 | <10 | 2.7 |
| 8 | Adjusted Growth (%) | 5 | ≥0 | 0 > x ≥ -1.5 | -1.5 > x ≥ -3 | <-3 | -14.7 |
| 8 | Slavery score (0-100) | 100 | ≥80 | 80 > x ≥ 65 | 65 > x ≥ 50 | <50 | 0 |
| 8 | Adults (15 years and older) with an account at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or with a mobile-money-service provider (%) | 100 | ≥80 | 80 > x ≥ 65 | 65 > x ≥ 50 | <50 | 8 |
| 8 | Unemployment rate (% total labor force) | 0.5 | ≤5 | 5 < x ≤ 7.5 | 7.5 < x ≤ 10 | >10 | 25.9 |
| 8 |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 | 77.8 | ≥60 | 60 > x ≥ 55 | 55 > x ≥ 50 | <50 | 51.6 |
| 8 |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 | 8.1 | ≤10 | 10 < x ≤ 12.5 | 12.5 < x ≤ 15 | >15 | 28.2 |
| 9 | Population using the internet (%) | 100 | ≥80 | 80 > x ≥ 65 | 65 > x ≥ 50 | <50 | 2.2 |
| 9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 100 | ≥75 | 75 > x ≥ 57.5 | 57.5 > x ≥ 40 | <40 | 1.4 |
| 9 | 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 (1= extremely underdeveloped; 7= extensive and efficient by international standards) | 6.3 | ≥4.5 | 4.5 > x ≥ 3.8 | 3.8 > x ≥ 3 | <3 | 1.9 |
| 9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Quality of trade and transport-related infrastructure (1=low to 5=high) | 4.2 | ≥3 | 3 > x ≥ 2.5 | 2.5 > x ≥ 2 | <2 | 1.8 |
| 9 | The Times Higher Education Universities Ranking, Average score of top 3 universities (0-100) | 91 | ≥20 | 20 > x ≥ 10 | 10 > x ≥ 0 | <0 | 0 |
| 9 | Number of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 articles (per 1,000) | 2.2 | ≥0.5 | 0.5 > x ≥ 0.3 | 0.3 > x ≥ 0.1 | <0.1 | 0 |
| 9 |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 GDP) | 3.7 | ≥1.5 | 1.5 > x ≥ 1.3 | 1.3 > x ≥ 1 | <1 | 0 |
| 9 |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ers (per 1,000 employed) | 15.6 | ≥8 | 8 > x ≥ 7.5 | 7.5 > x ≥ 7 | <7 | 0.8 |
| 9 | Triadic Patent Families filed (per million population) | 115.7 | ≥20 | 20 > x ≥ 15 | 15 > x ≥ 10 | <10 | .1 |

| SDG | Label | Best (value = 100) | Green | Yellow | Orange | Red | Worst (value = 0) |
|---|---|---|---|---|---|---|---|
| 9 | Gap in internet access by income (%) | 11.2 | ≤7 | 7 < x ≤ 26 | 26 < x ≤ 45 | >45 | 63.6 |
| 9 |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 | 38.1 | ≥33 | 33 > x ≥ 29 | 29 > x ≥ 25 | <25 | 16.2 |
| 10 | Gini Coefficient adjusted for top income (1-100) | 27.5 | ≤30 | 30 < x ≤ 35 | 35 < x ≤ 40 | >40 | 63 |
| 10 | Palma ratio | 0.9 | ≤1 | 1 < x ≤ 1.2 | 1.2 < x ≤ 1.3 | >1.3 | 2.5 |
| 10 | Elderly Poverty Rate (%) | 3.2 | ≤5 | 5 < x ≤ 15 | 15 < x ≤ 25 | >25 | 45.7 |
| 11 |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of less than 2.5 microns of diameter (PM2.5) in urban areas (µg/m3) | 6.3 | ≤10 | 10 < x ≤ 17.5 | 17.5 < x ≤ 25 | >25 | 87 |
| 11 | Improved water source, piped (% urban population with access) | 100 | ≥98 | 98 > x ≥ 86.5 | 86.5 > x ≥ 75 | <75 | 6.1 |
| 11 |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 (%) | 82.6 | ≥72.2 | 72.2 > x ≥ 57.8 | 57.8 > x ≥ 43.4 | <43.4 | 21 |
| 11 | Rent overburden rate (%) | 4.6 | ≤7 | 7 < x ≤ 12 | 12 < x ≤ 17 | >17 | 25.6 |
| 12 | Municipal Solid Waste (kg/year/capita) | 0.1 | ≤1 | 1 < x ≤ 1.5 | 1.5 < x ≤ 2 | >2 | 3.7 |
| 12 | E-waste generated (kg/capita) | 0.2 | ≤5 | 5 < x ≤ 7.5 | 7.5 < x ≤ 10 | >10 | 23.5 |
| 12 | Percentage of anthropogenic wastewater that receives treatment (%) | 100 | ≥50 | 50 > x ≥ 32.5 | 32.5 > x ≥ 15 | <15 | 0 |
| 12 | Production-based $SO_2$ emissions (kg/capita) | 0.5 | ≤10 | 10 < x ≤ 20 | 20 < x ≤ 30 | >30 | 68.3 |
| 12 | Net imported $SO_2$ emissions (kg/capita) | 0 | ≤1 | 1 < x ≤ 8 | 8 < x ≤ 15 | >15 | 30.1 |
| 12 | Nitrogen production footprint (kg/capita) | 2.3 | ≤8 | 8 < x ≤ 29 | 29 < x ≤ 50 | >50 | 86.5 |
| 12 | Net imported emissions of reactive nitrogen (kg/capita) | 0 | ≤1.5 | 1.5 < x ≤ 75.8 | 75.8 < x ≤ 150 | >150 | 432.4 |
| 12 | Non-Recycled Municipal Solid Waste (MSW in kg/person/year times recycling rate) | 0.6 | ≤1 | 1 < x ≤ 1.3 | 1.3 < x ≤ 1.5 | >1.5 | 2.4 |
| 13 | Energy-related $CO_2$ emissions per capita ($tCO_2$/capita) | 0 | ≤2 | 2 < x ≤ 3 | 3 < x ≤ 4 | >4 | 23.7 |
| 13 | Imported $CO_2$ emissions, technology-adjusted ($tCO_2$/capita) | 0 | ≤0.5 | 0.5 < x ≤ 0.8 | 0.8 < x ≤ 1 | >1 | 3.2 |
| 13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Monitor (best 0-1 worst) | 0 | ≤0.1 | 0.1 < x ≤ 0.2 | 0.2 < x ≤ 0.2 | >0.2 | 0.4 |
| 13 | $CO_2$ emissions embodied in fossil fuel exports (kg/capita) | 0 | ≤100 | 100 < x ≤ 4050 | 4050 < x ≤ 8000 | >8000 | 43996.4 |
| 13 | Effective Carbon Rate from all non-road energy, excluding emissions from biomass (€/$tCO_2$) | 100 | ≥70 | 70 > x ≥ 50 | 50 > x ≥ 30 | <30 | -0.1 |
| 14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marine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100 | ≥50 | 50 > x ≥ 30 | 30 > x ≥ 10 | <10 | 0 |
| 14 | Ocean Health Index Goal - Biodiversity (0-100) | 100 | ≥90 | 90 > x ≥ 85 | 85 > x ≥ 80 | <80 | 76 |

| SDG | Label | Best (value = 100) | Green | Yellow | Orange | Red | Worst (value = 0) |
|---|---|---|---|---|---|---|---|
| 14 | Ocean Health Index Goal - Clean Waters (0-100) | 100 | ≥70 | 70 > x ≥ 65 | 65 > x ≥ 60 | <60 | 28.6 |
| 14 | Ocean Health Index Goal - Fisheries (0-100) | 100 | ≥70 | 70 > x ≥ 65 | 65 > x ≥ 60 | <60 | 19.7 |
| 14 | Percentage of Fish Stocks overexploited or collapsed by EEZ (%) | 0 | ≤25 | 25 < x ≤ 37.5 | 37.5 < x ≤ 50 | >50 | 90.7 |
| 14 | Fish caught by trawling (%) | 1 | ≤6.3 | 6.3 < x ≤ 33.2 | 33.2 < x ≤ 60 | >60 | 90 |
| 15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terrestrial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100 | ≥50 | 50 > x ≥ 30 | 30 > x ≥ 10 | <10 | 4.6 |
| 15 | Mean area that is protected in freshwater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 100 | ≥50 | 50 > x ≥ 30 | 30 > x ≥ 10 | <10 | 0 |
| 15 | Red List Index of species survival (0-1) | 1 | ≥0.9 | 0.9 > x ≥ 0.9 | 0.9 > x ≥ 0.8 | <0.8 | 0.6 |
| 15 | Annual change in forest area (%) | 0.6 | ≤3 | 3 < x ≤ 4.5 | 4.5 < x ≤ 6 | >6 | 18.4 |
| 15 | Imported biodiversity threats (threats per million population) | 0.1 | ≤5 | 5 < x ≤ 10.3 | 10.3 < x ≤ 15.5 | >15.5 | 26.4 |
| 16 | Homicides (per 100,000 people) | 0.3 | ≤1.5 | 1.5 < x ≤ 2.3 | 2.3 < x ≤ 3 | >3 | 38 |
| 16 | Prison population (per 100,000 people) | 25 | ≤100 | 100 < x ≤ 150 | 150 < x ≤ 200 | >200 | 475 |
| 16 |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ho feel safe walking alone at night in the city or area where they live (%) | 90 | ≥80 | 80 > x ≥ 65 | 65 > x ≥ 50 | <50 | 33 |
| 16 | Government Efficiency (1-7) | 5.6 | ≥4.5 | 4.5 > x ≥ 3.8 | 3.8 > x ≥ 3 | <3 | 2.4 |
| 16 | Property Rights (1-7) | 6.3 | ≥4.5 | 4.5 > x ≥ 3.8 | 3.8 > x ≥ 3 | <3 | 2.5 |
| 16 | Birth registrations with civil authority,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 100 | ≥98 | 98 > x ≥ 86.5 | 86.5 > x ≥ 75 | <75 | 11.3 |
| 16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0-100) | 88.6 | ≥60 | 60 > x ≥ 50 | 50 > x ≥ 40 | <40 | 13 |
| 16 | Children 5–14 years old involved in child labor (%) | 0 | ≤2 | 2 < x ≤ 6 | 6 < x ≤ 10 | >10 | 39.3 |
| 16 | Transf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exports) (constant 1990 US$ million per 100,000 people) | 0 | ≤1 | 1 < x ≤ 25.5 | 25.5 < x ≤ 50 | >50 | 3.4 |
| 17 | Government Health and Education spending (% GDP) | 20.7 | ≥16 | 16 > x ≥ 12 | 12 > x ≥ 8 | <8 | 5.1 |
| 17 | For high-income and all OECD DAC countries: International concessional public finance,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GNI) | 1 | ≥0.7 | 0.7 > x ≥ 0.5 | 0.5 > x ≥ 0.4 | <0.4 | 0.1 |
| 17 | For all other countries: Tax revenue (% GDP) | 30.4 | ≥25 | 25 > x ≥ 20 | 20 > x ≥ 15 | <15 | 1.5 |
| 17 | Tax Haven Score (best 0-5 worst) | 0 | ≤1 | 1 < x ≤ 2.5 | 2.5 < x ≤ 4 | >4 | 5 |
| 17 | Financial Secrecy Score (best 0-100 worst) | 42.7 | ≤40 | 40 < x ≤ 45 | 45 < x ≤ 50 | >50 | 76.5 |

## 3. 중국환경계획원(CAEP):
中国实施2030议程和区域合作 研究报告

**专家咨询报告**

# 中国实施2030议程和区域合作

# 研究报告

**注: 该研究报告中的观点仅代表专家个人观点**

# 目　录


1 中国实施SDGs的最新进展 …… 1
1.1 中国对UNSDG的响应 …… 1
1.2 中国的主要工作 …… 3
1.3 试点示范 …… 5
1.3.1《建设方案》的推进思路和目标 …… 5
1.3.2《建设方案》提出四项主要建设任务 …… 6
1.3.3《建设方案》对推动我国可持续发展具有三方面意义 …… 6
1.3.4 中国将为全球可持续发展作出贡献 …… 8
1.3.5 坚持问题导向，用科技创新驱动可持续发展 …… 9
1.3.6 建设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的主要目标 …… 10
1.3.7 “示范区建设”旨在推动经济，社会，环保协调发展 …… 10

2 中国实施SDGs2030议程的国家行动 …… 11
2.1 总体思路 …… 11
2.2 根本原则 …… 12
2.3 重点工作 …… 13
2.4 制度保障 …… 14
2.5 财政和金融保障 …… 16
2.6 技术保障 …… 16
2.7 SDGs监测框架 …… 18

3 中国实施SDG评估 …… 18
3.1 指标选择和评估方法 …… 19
3.2 评估结论 …… 23
3.2.1 123项指标评估结论 …… 23
3.2.2 17项目标评估结论 …… 23
3.3 评估建议 …… 28
3.3.1 尽快研究建立中国本土化可持续发展指标体系 …… 28

3.3.2 加快建立有效的SDGs推进实施机制 …… 28
3.3.3 加强SDGs落实的国际交流与合作 …… 29

4 SDG2030实施区域合作情况 …… 29
4.1 加强与发展中国家的合作 …… 29
4.1.1 通过减免关税,
债务和提供经济技术援助支持发展中国家减贫 …… 29
4.1.2 扩大向发展中国家提供的国际合作和能力建设支持 …… 30
4.1.3 帮助发展中国家培训相关官员和技术人员 …… 31
4.1.4 落实重大务实举措，帮助其他发展中国家实现共同发展 …… 31
4.2 加强与发达国家的合作 …… 32
4.2.1 加强可再生能源和节能领域交流与合作 …… 32
4.2.2 加强环境保护领域合作 …… 32
4.3 充分发挥国际合作平台的作用 …… 33
4.3.1 积极参与以联合国为主导的国际机构可持续发展活动 …… 33
4.3.2 建成了一批具有示范意义的合作项目 …… 33
4.3.3 逐步深化科技合作 …… 34
4.3.4 与国际组织合作帮助发展中国家提高可持续发展能力 …… 34
4.3.5 积极举办相关国际会议推动可持续发展进程 …… 35
4.4 认真履行环发领域国际公约 …… 36
4.4.1 推进防治荒漠化公约进程 …… 36
4.4.2 增强生物多样性公约履约能力 …… 36
4.4.3 认真履行《气候变化公约》 …… 36
4.4.4 积极推进《巴塞尔公约》履约工作 …… 37
4.5 推进“一带一路”沿线国家可持续发展合作 …… 38
4.6 取得成就总结 …… 38

5 加强SDG2030实施的地区合作的建议 …… 39
5.1 机遇和挑战 …… 39
5.1.1 发展机遇 …… 39
5.1.2 面临挑战 …… 40

5.2 区域和次区域合作的潜在领域 …… 43
5.2.1 重点领域 …… 43
5.2.2 合作机制 …… 44
5.3 相关政策建议 …… 46
5.3.1 大力推进“一带一路”国际合作,
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强大动力 …… 46
5.3.2 深度参与国际发展合作特别是深化南南合作,
为其他发展中国家继续提供力所能及的支持 …… 47
5.3.3 加强贸易投资合作和宏观经济政策协调,
促进国际发展环境优化 …… 48
5.3.4 深化发展伙伴关系, 构建人类命运共同体 …… 48

参考文献 …… 48

# 1. 中国实施SDGs的最新进展

## 1.1. 中国对UNSDG的响应

生态文明建设是可持续发展理念的中国表达，是落实可持续发展的中国方案。2015年4月，党中央，国务院发布的《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意见》明确指出，要以全球视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促进全球生态安全。生态文明的“五位一体”战略布局，拓展了世界可持续发展的经济，社会和环境三大支柱理论，是对可持续发展理论的拓展与升华，是可持续发展的中国化和升级版。

党的十八大以来，我国提出了“五位一体”总体布局，“四个全面”战略布局以及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五大发展理念，是对可持续发展内涵的丰富和完善，我国已经进入全球可持续发展理念创新的前沿。同时，十八大报告强调指出，必须把科技创新摆在国家发展全局的核心位置，建设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也是我国贯彻落实全国科技创新大会精神和《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充分发挥科技创新对可持续发展支撑引领作用的重要行动。我国高度重视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将议程确立的可持续发展目标全面融入《国民经济与社会发展十三五规划》。“十三五”规划强调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将生态文明，绿色发展融入经济社会发展的各个方面，充分体现了可持续发展的原则和内涵。特别是中国的可持续发展有明确的量化指标，为规划实施提供了可监测，可评估，可考核的重要依据。在G20杭州峰会上习近平主席提出的“共同构建包容联动的全球发展治理格局，以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为目标，共同增进全人类福祉”得到了与会代表的高度赞同，联合国秘书长潘基文高度评价

中国在推动2030年可持续发展方面的务实举措，盛赞中国向世界展示出卓越领导力，对中国引领全球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寄予了很高期望。习近平在2017年的十九大报告中指出，近5年来，中国每年超过1000万人脱贫，成为推动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目标的最大贡献者。2018年5月习近平在全国生态环境保护大会上强调，坚决打好污染防治攻坚战，推动生态文明建设迈上新台阶，共谋全球生态文明建设，深度参与全球环境治理，形成世界环境保护和可持续发展的解决方案，引导应对气候变化国际合作。

中国以落实《可持续发展议程》为己任，在"南南合作框架"下向世界提供更多"中国机遇"。一是中国政府首次在中央文件和中国国内发展五年规划中明确国际援助的承诺。在制定十三五规划的过程中，中国也提出，将扩大对外援助规模，完善对外援助方式，为发展中国家提供更多免费的人力资源，发展规划，经济政策等咨询培训，扩大科技教育，医疗卫生，防灾减灾，环境治理，野生动植物保护，减贫等领域的对外合作和援助，加大人道主义援助。二是在2015年9月的联合国发展峰会上，习近平主席向国际社会做出了一系列重要承诺，如建立中国—联合国和平与发展基金，设立"南南合作援助基金"，免除部分国家的政府间无息贷款债务，设立国际发展知识中心等；其中，首期20亿美元"南南合作援助基金"主要用于支持广大发展中国家落实可持续发展议程目标。三是有效帮助非洲国家推进落实2030年议程目标。2015年12月，习近平主席在中非合作论坛约翰内斯堡峰会上提出中非合作的"十大合作计划"，其中工业化，农业现代化，基础设施建设，公共卫生，和平与安全等都非常契合非洲的发展需要；为推动"十大合作计划"的落实，中国还承诺了600亿美元的资金支持——其中包括50亿美元的无偿援助和无息贷款，200个"幸福生活工程"和以妇女儿童为主要受益者的减贫项目等。

## 1.2. 中国的主要工作

2016年9月19日，李克强总理在纽约联合国总部主持召开“可持续发展目标：共同努力改造我们的世界——中国主张”座谈会，并宣布发布《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对落实工作进行了全面部署。《国别方案》包括中国的发展成就和经验，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的机遇和挑战，指导思想及总体原则，落实工作总体路径，17项可持续发展目标落实方案等五部分，将成为指导中国开展落实工作的行动指南，并为其他国家尤其是发展中国家推进落实工作提供借鉴和参考。面向未来，中国将以《国别方案》为指导，贯彻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加快推进可持续发展议程落实工作，并继续为全球发展事业做出力所能及的贡献。

为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务院于2016年12月印发《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方案》(以下简称“建设方案”)，就示范区建设作出明确部署。其总体定位是：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引，按照“创新理念，问题导向，多元参与，开放共享”的原则，以推动科技创新与社会发展深度融合为着力点，探索以科技为核心的可持续发展问题系统解决方案，为我国破解新时代社会主要矛盾，落实新时代发展任务作出示范并发挥带动作用，为全球可持续发展提供中国经验。

自2017年8月21日起，《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进展报告》开始实行。该报告是全球首个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报告，总结了中国在国家层面的做法和经验，展示了重要早期收获。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经验主要在三方面：一是注重组织协调。在中央政府层面建立了43个部委办协调机制，并通过发布国别方案和进展报告等方式保持部门之间的经常性紧密沟通，形成一个监测监督和竞争机制；二是注重规划引导，将2030

年可持续发展议程与中国中长期发展规划相结合； 三是在全面落实基础上，突出一些重点和优先领域的推进。

## 1.3. 试点示范

### 1.3.1.《建设方案》的推进思路和目标

《建设方案》明确了“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以下简称“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的推进思路和目标，即：紧密结合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以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为主线，以推动科技创新与社会发展深度融合为目标，以破解制约我国可持续发展的关键瓶颈问题为着力点，集成各类创新资源，加强科技成果转化，探索完善体制机制，提供系统解决方案，使科技创新对社会事业发展的支撑引领作用不断增强，经济与社会协调发展程度明显提升，形成一批可复制，可推广的可持续发展现实样板，对内为其他地区可持续发展发挥示范带动效应，对外为其他国家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供中国经验。 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将以现有的国家可持续发展实验区为基础进行创建。 山西太原， 广西桂林，广东深圳等3个城市作为首批示范区，既体现了我国东中西不同地域布局的代表性，也体现了可持续发展不同阶段和面临的不同类型问题的代表性。3个城市要把握好示范区建设的战略要求，探索出符合国际潮流，具有中国特色，地方特点的可持续发展之路，为国内外同类地区发展作出示范。“十三五”期间中国将建设约10个示范区。

### 1.3.2.《建设方案》提出四项主要建设任务

《建设方案》提出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将以现有的国家可持续

发展实验区工作为基础进行创建，并提出四项主要建设任务：

一是参照《2030年可持续发展议程》，结合本地现实需求，制定可持续发展规划；

二是围绕制约可持续发展瓶颈问题，加强技术筛选，明确技术路线，形成成熟有效的系统化解决方案；

三是增强整合汇聚创新资源，促进经济社会协调发展能力，探索科技创新与社会发展融合的新机制；

四是积极分享科技创新服务可持续发展的经验， 对其他地区形成辐射带动作用，向世界提供可持续发展中国方案。

### 1.3.3.《建设方案》对推动我国可持续发展具有三方面意义

国务院出台了《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方案》，建设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是国务院统筹国内国际两个大局作出的重要工作部署，可以从三个方面理解它的意义：

第一是中国参与全球治理的务实行动。建设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是中国作为一个负责任发展大国，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参与全球治理的务实行动。去年9月习近平主席参加联合国峰会与世界各国领导人共同签署了《2030年可持续发展议程》。 这是联合国190多个国家达成的一项非常重要的协议。大家知道，刚才讲的“三个不协调”，是世界普遍存在的问题，怎么样推动可持续发展是全球共识。我们发布了国别方案，在杭州G20峰会上， 对于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非常重视， 习主席明确提出依靠创新驱动增长，提出我们“要做行动队”，所以第一个意义体现在中国作为负责任的大国来落实这项工作是非常重要的。

第二是落实中国发展布局和理念的重要平台。 建设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是落实“五位一体”整体布局，“四个全面”战略布局，践行“五大发展理念”的重要平台。十八大以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提出了一系列战略思考。“五位一体”的总体布局是十八大提出来的。“四个全面”战略布局通过三中，四中，五中，六中全会分别落实，还有“五大发展理念”这都是未来工作的基础。这些理念如果得到很好地落实，是部门要思考的很重要问题。“五大发展理念”，《2030年可持续发展议程》最核心的是三个方面，经济发展，社会发展和环境保护，“五位一体”布局中，经济建设，政治建设，文化建设，社会建设和生态文明建设和2030年议程核心内涵是非常一致的，从这个意义上推进国际国内两个大局。所以推动示范区建设是落实“五位一体”总体布局很重要的平台。

第三是推进创新驱动可持续发展的重要举措。建设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是推进创新驱动可持续发展的重要举措。党的十八大提出创新驱动发展战略，今年召开了全国科技创新大会，发布了《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总书记在创新大会上提出要推动经济社会协调发展，要推动科技与经济和社会发展的结合。30年来科技与经济结合提的多，科技部落实多，成效也多。我们30年前开始布局了国家可持续发展实验区，我们一直在做很多工作。现在看来，科技与社会建设相结合这是短板。从创新驱动发展角度来说，以经济建设为中心推动科技与经济结合的同时，要加大科技支撑和引领我国社会发展工作，建立示范区也是推动科技与社会发展融合很重要的举措。建设示范区的意义从国际发展，国内整体发展和科技自身发展这三个层面来理解。

### 1.3.4. 中国将为全球可持续发展作出贡献

为国家全面建设小康社会和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提供综合实验示范，在总结多年来实验区工作经验的基础上，科学技术部印发《国家可持续发展实验区管理办法》和《国家可持续发展先进示范区管理办法》。《国家可持续发展实验区管理办法》对试验区的申报，考察与批复，组织与管理，检查与验收等方面作了详细规定。《国家可持续发展先进示范区管理办法》对示范区的基本条件，目标，任务和重点，申报程序，组织实施与管理等作出说明。

下一步，科技部将根据《建设方案》，与外交部，国家发展改革委，环保部等相关部门密切合作，进一步细化工作流程，推进创建工作全面开展。科技部也愿与联合国系统，有关国家等各利益攸关方合作，汇聚全球资源开展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并及时向国际社会分享示范区建设的经验，为全球可持续发展做出中国贡献。

### 1.3.5. 坚持问题导向，用科技创新驱动可持续发展

用科技创新驱动可持续发展，这次特别强调问题导向。首先，建设示范区，要解决制约中国可持续发展面临很多瓶颈问题，比如农业发展，耕地三分之二是中低产田，我国的战略是藏粮于地，藏粮于技，西部很多地方发展面临着缺水问题。有些地方发展面临着地方病流行，土壤污染等制约可持续发展瓶颈问题。建立示范区，首先要找到制约可持续发展的问题。找准问题后怎么解决，就是靠科技创新驱动。比如秸秆焚烧问题，既是环境问题也是经济问题，每年有八亿多吨秸秆，用好了是第二粮仓，用不好就是废弃物，对环境造成影响。秸秆问题怎么解决，根本出路要靠创新。

创新示范区，就是要汇聚全球科技力量和地方政府合作，形成系统地解

决方案，集聚资源来实施，在一个地方解决问题以后，形成可复制可推广的经验。希望通过科技创新，来真正地解决制约我国可持续发展的若干问题。从点上突破，面上推广，最后能够推动可持续发展水平的提升。

### 1.3.6. 建设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的主要目标

第一个是不断增强科技创新对社会事业发展的支撑引领作用。 这次示范区建设一个很重要的目标是通过科技手段来解决若干瓶颈制约问题。 也就是要通过创新驱动推动可持续发展，这个能力不断增强。

第二个是明显提升经济社会协调发展的程度。我们要很好地落实可持续发展理念，推动经济建设，社会发展和生态文明建设的同步提升，也就是协调性更强，“五位一体”的总体布局得到更好落实。

第三个是在“十三五”期间建10家左右示范区，这个示范区对内为其他地区提供示范带动效应， 对外为其他国家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供中国经验，讲好中国故事。

### 1.3.7. “示范区建设”旨在推动经济，社会，环保协调发展

我国经济快速发展，社会事业发展在有些地方没有跟上，还有一些工业化过程中带来的问题，怎么样推动协调发展是中央提出的明确要求。所以示范区建设主要目的是推动经济发展，社会发展，环境保护三者相协调。

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的建设，既是为全球可持续发展提供中国药方，在世界舞台上顺应国际形势，展现中国负责任大国形象的具体举措，也是贯彻落实全国科技创新大会精神和《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发挥科技创新对可持续发展支撑引领作用的行动方案。

## 2. 中国实施SDGs2030议程的国家行动

### 2.1.总体思路

统筹国内国际两个大局，坚持全面建成小康社会，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全面从严治党的战略布局，以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为指导，统筹推进经济建设，政治建设，文化建设，社会建设，生态文明建设和党的建设。通过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为如期全面建成小康社会，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和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提供坚实保障，为推进国际发展合作，提升全球整体发展水平注入强劲动力。

——坚持创新发展。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不断推进理论创新，制度创新，科技创新，文化创新等各方面创新，着力提高发展的质量和效益。

——坚持协调发展。推进区域协同，城乡一体，物质文明精神文明并重，经济建设国防建设融合，新型工业化，信息化，城镇化，农业现代化同步发展，着力形成平衡发展结构，不断增强发展整体性。

——坚持绿色发展。坚持节约资源和保护环境的基本国策，坚定走生产发展，生活富裕，生态良好的文明发展道路，推动形成绿色低碳发展方式和生活方式，积极应对气候变化，着力改善生态环境。

——坚持开放发展。奉行互利共赢的开放战略，努力提高对外开放水平，发展更高层次的开放型经济，协同推进战略互信，经贸合作，人文交流，着力实现合作共赢。

——坚持共享发展。按照人人参与，人人尽力，人人享有的要求，注重机会公平，保障基本民生，着力增进人民福祉，使全体人民在共建共享发展中有更多获得感。

中国政府提出的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五大发展理念，顺应了可持续发展的时代潮流，与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出的人类，地球，繁荣，和平，伙伴的五大理念相融相通。这是中国立足本国国情和发展经验，对经济社会发展普遍规律的进一步拓展和深化，将有力指导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的整体进程。

## 2.2. 根本原则

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将坚持以下原则:

——和平发展原则。秉持联合国宪章的宗旨和原则，坚持和平共处，共同构建以合作共赢为核心的新型国际关系，努力为全球的发展事业和可持续发展议程的落实营造和平，稳定，和谐的地区和国际环境。

——合作共赢原则。牢固树立利益共同体意识，建立全方位的伙伴关系，支持各国政府，私营部门，民间社会和国际组织广泛参与全球发展合作，实现协同增效。坚持各国平等参与全球发展，共商发展规则，共享发展成果。

——全面协调原则。坚持发展为民和以人为本，优先消除贫困，保障民生，维护社会公平正义。牢固树立和贯彻可持续发展理念，协调推进经济，社会，环境三大领域发展，实现人与社会，人与自然和谐相处。

——包容开放原则。致力于实现包容性经济增长，构建包容性社会，推动人人共享发展成果，不让任何一个人掉队。共同构建开放型世界经济，推动国际经济治理体系改革完善，提高发展中国家的代表性和话语权，促进国际经济秩序朝着平等，公平，合作共赢的方向发展。

——自主自愿原则。重申各国对本国发展和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享有充分主权。支持各国根据自身特点和本国国情制定发展战略，采取落实

2030年可持续发展议程的措施。尊重彼此的发展选择，相互借鉴发展经验。

——“共同但有区别的责任”原则。鼓励各国以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为共同目标，根据“共同但有区别的责任”原则，各自国情和各自能力开展落实工作，为全球落实进程做出各自贡献。

## 2.3. 重点工作

作为全球最大的发展中国家，中国在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的过程中，既面临难得的机遇，也面临艰巨的挑战。

中国国家治理能力不断提升。“十三五”规划中明确提出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和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为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推进可持续发展提供了理论指引。中国经济保持中高速增长，新型工业化，信息化，城镇化，农业现代化深入发展，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打下扎实基础。中国着力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逐步加大重点领域和关键环节市场化改革力度，深化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由此带来的改革红利以及自主创新红利将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强大动力。中国政府已将可持续发展议程与国家中长期发展规划有效对接，建立了国内落实工作的协调机制，将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有力的制度保障。与此同时，中国经济进入“新常态”，面临经济增速换挡，结构调整，新旧动能转换等多重挑战，保持经济持续，稳定，健康增长仍有不小压力，在脱贫攻坚，解决城乡和区域发展不平衡，补齐生态环境短板等方面有大量工作要做。如何消除贫困，改善民生，化解社会矛盾，实现共同富裕，完善国家治理体系，提高治理能力，以及实现各地区，各层次，各领域间的协同发展仍是中国实现可持续发展议程面临的最大挑战，也是今后的工作重点。

## 2.4. 制度保障

制度保障旨在为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供机制体制和方针政策等方面的支撑，重点包括以下四个方面:

一是推进相关改革，建立完善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的体制保障。中国政府将按照完善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总目标，健全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和更好发挥政府作用的制度体系，加快完善各方面体制机制，破除一切不利于科学发展的制度障碍，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持续的制度动力。推动建立落实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为落实工作积累经验。

二是完善法制建设，为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供有力法律保障。中国政府将加快推进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发展社会主义民主政治，建设社会主义先进文化，创新社会治理，保障公民权利和改善民生，维护国家安全，保护生态环境和加强政府自身建设等领域的政府立法，着力构建系统完备，科学规范，运行有效的依法行政制度体系。

三是科学制定政策，为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供政策保障。中国政府将根据可持续发展议程的具体目标，着力在消除贫困和饥饿，保持经济增长，推动工业化进程，完善社会保障和服务，维护公平正义，加强环境保护，积极应对气候变化，有效利用能源资源，改进国家治理，促进国际合作等十大方面，形成以国家总体政策为统领，专项政策和地方政策为支撑的政策保障体系。

四是明确政府职责，要求各级政府承担起主体责任。既要加强横向的跨领域，跨部门协调，又要确保政策纵向落地，形成“中央-地方-基层”的有效落实机制。中国政府根据2030年可持续发展议程的任务要求，已经建立了

落实可持续发展议程部际协调机制，43家政府部门将各司其职，保障各项工作顺利推进。地方政府也将建立相应工作机制，推进开展落实工作。

## 2.5. 财政和金融保障

财政和金融保障旨在充分利用国内外两个市场，两种资源并发挥体制，市场等方面的优势，为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供财政和金融保障。重点包括以下两个方面:

一是聚焦财税体制改革，金融体制改革等，合理安排和保障落实发展议程的财政投入。健全商业性金融，开发性金融，政策性金融，合作性金融，形成分工合理，相互补充的金融机构体系，引导金融行业服务向可持续发展领域倾斜，发展普惠金融。

二是创新合作模式，积极推动政府和社会资本合作，通过完善法律法规，实施政策优惠，优化政府服务，加强宣传指导等方式，动员和引导全社会资源投向可持续发展领域。

## 2.6. 技术保障

随着科教兴国战略的实施，中国科技投入强度持续提高，一批标志性的重大科技基础设施建设完成。2000至2010年，中国全社会研究与试验发展(R&D)年支出总额从896亿元增加到7062.6亿元；国家财政科技投入以年均超过20%的速度增长。截至2010年，已建成各类国家(重点)实验室333个，国家工程中心391个，国家工程实验室91家，国家认定企业技术中心729家，国家野外科学观测研究台站(网)105个。同时，一批多层次的资源整合共享网络体系和实物平台，野外观测研究与示范体系逐步完备，各类科学数据，

自然科技资源保存已初具规模，农作物种质资源保存量居世界第二。

2002年，中国开始实施“人才强国”战略，2010年颁布《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年)》，将加强科技人才培养和引进，特别是培养造就创新型科技人才作为一项重要任务。截至2010年，中国全社会R&D人员全时当量达到255.4万人年，博士后科研流动站2146家，科研工作站1743个，主要学科和技术领域已拥有一批高效精干的学术团队。十年来，先后启动实施了超级杂交水稻，水体污染控制与治理等26个重大专项，并将“973”，“863”，科技支撑等科技计划与重大专项需求相结合，突破了一批核心技术，原始创新能力得到大幅提升，重点科技领域跨越式发展，科技对可持续发展的支撑和引领作用显著增强。

2006年，中国做出了“增强自主创新能力，建设创新型国家”的决定，并先后修订实施了《科学技术进步法》，《专利法》，制定发布了《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及配套政策措施，健全完善了激励科技创新的政策体系。国家自主创新示范区建设顺利推进，国家技术创新工程深入实施，知识创新工程试点取得明显成效。

近年来，中国重点部署了一批医药卫生，防灾减灾，资源综合利用和生态环境保护等与民生相关的重大技术研发项目；相继开展了改善人居环境，推广节能省地宜居住宅，全民节能减排，全民健康，加快新农村建设等一系列与民生相关的重大科技行动，科技服务民生的能力明显加强。在抗击汶川，玉树地震和舟曲泥石流等重大自然灾害和灾后重建过程中，在三峡工程，青藏铁路等国家重大建设工程中，科技发挥了重要的支撑作用。

### 2.7. SDGs监测框架

构建中国SDG指标主要遵循以下思路: 首先, 系统分析SDG全球指标框架, 即全球指标框架的三个层次: (a)已经具有既定方法和广泛提供的数据; (b)已经设定方法但并不易获取数据; (c)尚未确定国际商定的方法, 遴选具有既定方法和可监测性的指标。然后, 在具有既定方法和可监测的指标基础上, 分析中国推进SDG实施情况和存在的问题, 选择适合中国的可监测的指标。最后, 根据《2030年议程》中的可持续发展目标, 结合中国开展可持续发展工作, 分析中国SDGs推进路线, 增选全面衡量中国经济社会发展的和中国中长期规划的指标, 建立中国本土化可持续发展指标体系。

## 3. 中国实施SDG评估

联合国非常重视SDGs落实, 要求建立国别, 区域和全球三个层面的落实框架, 并定期监督落实进程。可持续发展目标(SDGs)是2030议程的核心内容, 涵盖了经济, 社会和资源环境三大领域, 包括了17个可持续发展目标和169个子目标, 旨在根本性地改变片面追求经济增长的传统发展观, 指导全球各国在今后15年内的发展政策和资金使用, 在人类和地球至关重要的领域中采取行动, 消除贫困, 保护地球, 确保所有人共享繁荣。

### 3.1. 指标选择和评估方法

根据SDGs全球指标框架体系, 结合中国实际情况, 初步选取了163项指标, 建立中国本土化可持续发展指标体系。

由于评估指标的目标值难以确定, 我们采用时间序列趋势分析法来分析163

项指标的变化趋势。在163项指标中有40项指标难以获得连续性数据。因此，根据数据可获得性，进一步筛选了有连续性数据的123项指标进行总体性评估，如表3-1所示。各指标评估结果用颜色展示，红色表示基础较差，达标困难；绿色表示已经达标或者达标容易；黄色接近进展顺利，通过努力可以达标。

表3-1. 中国可持续发展总体性评估指标

| 可持续发展目标 | 评估指标 | | |
|---|---|---|---|
| | 序号 | 指标 | 单位 |
| SDG 1 | 1 | 低于国际贫穷线人口的比例 | % |
| | 2 | 贫困发生率 | % |
| | 3 |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人数占城镇人口比例 | % |
| | 4 | 农村居民最低生活保障人数占乡村人口比例 | % |
| | 5 | 城乡残疾人纳入最低生活保障人数占总人口比例 | % |
| | 6 | 自然灾害受灾人口占总人口比例 | % |
| SDG 2 | 7 | 营养不足发生率 | % |
| | 8 | 农村居民人均可支配收入 | 元 |
| | 9 | 人均粮食产量 | kg |
| | 10 | 人均耕地面积 | 亩/人 |
| | 11 | 农林水支出占财政支出比例 | % |
| | 12 | 政府支出的农业指导指数 | – |
| | 13 | 用于农业部门的官方资金(官方发展援助和其他官方资金流)总额 | 十亿美元 |
| | 14 | 粮油物资储备支出占财政支出比例 | % |
| | 15 | 食品类居民消费价格指数 | – |
| SDG 3 | 16 | 每100000名活产产妇死亡人数 | % |
| | 17 | 5岁以下儿童死亡率 | ‰ |
| | 18 | 新生儿死亡率 | ‰ |
| | 19 | 由熟练保健人员协助的分娩比例 | % |
| | 20 | 每 1 000 人结核病发生率 | 每十万人 |
| | 21 | 须采取干预措施治疗被忽视的热带疾病的人数 | 万人 |
| | 22 | 自杀死亡率 | 每10万人口 |
| | 23 | 因道路交通伤所致死亡率 | 每10万人口 |
| | 24 | 归因于无意中毒的死亡率 | 每10万人口 |

| 可持续发展目标 | 评估指标 | | |
|---|---|---|---|
| | 序号 | 指标 | 单位 |
| | 25 | 给予医学研究和基本保健部门的官方发展援助总数净额 | 十亿美元 |
| | 26 | 艾滋病发病率 | % |
| | 27 | 疟疾发病率 | % |
| | 28 | 肺结核发病率 | % |
| | 29 | 万人交通事故发生数 | 起 |
| | 30 | 每万人拥有卫生技术人员数 | 人 |
| | 31 | 每万人医疗机构床位数 | 张 |
| SDG 4 | 32 | 万人中等学校在校学生数 | 人 |
| | 33 | 中等教育水平以上农业劳动者比例 | % |
| | 34 | 学前三年毛入园率 | % |
| | 35 | 万人在校大学生数 | 人 |
| | 36 | 高等学校生师比 | |
| | 37 | 初中生师比 | |
| | 38 | 按部门和学习类型分列的奖学金官方发展援助数额 | 十亿美元 |
| | 39 | 15岁以上人口文盲率 | % |
| | 40 | 万人拥有中等学校教师数 | 人 |
| | 41 | 万人拥有大学教师数 | 人 |
| | 42 | 教育经费支出占GDP比例 | % |
| SDG 5 | 43 | 男女受教育公平度(男女文盲率之比) | % |
| | 44 | 妇女在国家议会中的席位比例 | % |
| SDG 6 | 45 | 使用得到安全管理的饮用水服务的人口比例 | % |
| | 46 | 使用得到安全管理的环境卫生设施服务(包括提供肥皂和水的洗手设施)的人口比例 | % |
| | 47 | 作为政府协调开支计划组成部分的与水和环境卫生有关的官方发展援助数额 | 十亿美元 |
| | 48 | 农村集中式供水人口比例 | % |
| | 49 | 城市用水普及率 | % |
| | 50 | 医疗卫生和计划生育支出占财政支出比例 | % |
| | 51 | 农村卫生厕所普及率 | % |
| | 52 | 地表水质量达到或好于Ⅲ类水体比例 | % |
| | 53 | 地表水质量劣Ⅴ类水体比例 | % |
| | 54 | 城镇污水处理率 | % |
| | 55 | 万元国内生产总值用水量 | m3 |
| | 56 | 万元工业增加值用水量 | m3 |
| | 57 | 农田灌溉水有效利用系数 | |
| | 58 | 人均水资源量 | 立方米/人 |

| 可持续发展目标 | 评估指标 | | |
|---|---|---|---|
| | 序号 | 指标 | 单位 |
| SDG 7 | 59 | 能获得电力的人口比例 | % |
| | 60 | 可再生能源在最终能源消费总量中的份额 | % |
| | 61 | 以一次能源和国内生产总值计量的能源密集度 | |
| | 62 | 单位国内生产总值能耗降低 | % |
| SDG 8 | 63 | 实际人均国内生产总值年增长率 | % |
| | 64 | 就业人员实际人均国内生产总值年增长率 | % |
| | 65 | 国内生产总值(GDP)年增长率 | % |
| | 66 | 全员劳动生产率 | 万元/人 |
| | 67 | 城镇调查失业率(城镇登记失业率) | % |
| | 68 | 社会保障和就业支出占财政支出比例 | % |
| | 69 | 《促贸援助倡议》承付款和支付款 | 亿元 |
| | 70 | 每 10 万成年人可使用的商业银行分支机构和自动取款机数量 | |
| SDG 9 | 71 | 制造业附加值占国内生产总值的比例和人均值 | % |
| | 72 | 旅客运输量 | 元 |
| | 73 | 货物运输量 | 万人 |
| | 74 | 移动电话普及率 | 万吨 |
| | 75 | 每万人口发明专利拥有量 | 部/百人 |
| | 76 | 科技进步贡献率 | 项 |
| | 77 | 交通运输仓储和邮政业投资占全社会资产投资比例 | % |
| | 78 | 单位GDP二氧化碳排放量 | % |
| | 79 | 研究和开发支出占国内生产总值的比例 | 千克CO2当量每美元换算为2005年GDP |
| | 80 | 每百万居民中的研究员(专职同等资历)人数 | % |
| | 81 | 中高科技产业附加值在总附加值中的比例 | 人/百万人 |
| | 82 | 用于基础设施的国际官方援助(官方发展援助和其他官方资金流)总额 | % |
| SDG 10 | 83 | 基尼系数 | 亿元 |
| | 84 | 按受援国和捐助国及资源流动类型(如官方发展援助，外国直接投资和其他流动)分列的促进发展资源流动总额 | |
| SDG 11 | 85 | 住房保障支出占财政支出比例 | 十亿美元 |
| | 86 | 人均铁路里程 | % |
| | 87 | 人均公路里程 | 公里/万人 |
| | 88 | 城乡社区支出占财政支出比例 | 公里/万人 |
| | 89 | 年均因灾直接经济损失占国内生产总值的比例 | % |
| | 90 | 年均每百万人口因灾死亡率 | % |

| 可持续发展目标 | 评估指标 | | |
|---|---|---|---|
| | 序号 | 指标 | 单位 |
| | 91 | 地级及以上城市空气质量优良天数比率 | % |
| | 92 | 城市PM2.5年平均水平 | % |
| | 93 | 全国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率 | 微克/立方米 |
| | 94 | 城市用地增长率与人口增长率的比率 | % |
| | 95 | 人均公园绿地面积 | |
| | 96 | 工业危险废物处置利用率 | 平方米 |
| | 97 | 生活垃圾无害化处理率 | % |
| SDG 12 | 98 | 发布CSR企业社会责任报告企业数量 | % |
| | 99 | 旅游业对GDP综合贡献 | 份 |
| SDG 13 | 100 | 自然灾害受灾害死亡人数 | % |
| | 101 | 自然灾害直接经济损失 | 人 |
| SDG 14 | 102 | 夏季呈富营养化状态海域面积 | 亿元 |
| | 103 | 近岸海域水质优良(一, 二类)比例 | km2 |
| SDG 15 | 104 | 草原综合植被盖度 | % |
| | 105 | 自然保护区占陆地面积的比例 | |
| | 106 | 保护区内陆地和淡水生物多样性的重要场地点按生态系统类型所占比例 | % |
| | 107 | 森林面积占陆地总面积的比例(森林覆盖率) | % |
| | 108 | 实施可持续森林管理的进展 | % |
| | 109 | 被保护区覆盖的对山区生物多样性具有重要意义的场所的面积 | 百万吨森林地上生物量 |
| | 110 | 红色名录指数 | % |
| | 111 | 生物多样性和生态系统方面官方发展援助和公共支出 | |
| | 112 | 在养护和可持续利用生物多样性和生态系统方面的官方发展援助和公共支出 | 十亿美元 |
| SDG 16 | 113 | 每 10 万人中故意杀人案的受害者人数 | 十亿美元 |
| SDG 17 | 114 | 一般公共预算支出中援助其他地区支出占比 | 人/每十万人 |
| | 115 | 汇款数额(美元)占国内生产总值总额的比例 | % |
| | 116 | 为发展中国家提供的财政和技术援助的美元价值, 包括通过南北合作, 南南合作和三角合作提供援助 | % |
| | 117 | 国家财政收入占国内生产总值比重 | 美元 |
| | 118 | 国家税收收入占国家财政收入比重 | % |
| | 119 | 节能环保支出占财政支出比例 | % |
| | 120 | 还本付息额占货物和服务出口额的比例 | % |
| | 121 | 使用因特网的人口比例 | % |
| | 122 | 每 100 名居民固定因特网宽带用户数, 按速度分列 | % |
| | 123 | 为加强发展中国家的统计能力而提供的各种资源的美元价值 | |

## 3.2. 评估结论

### 3.2.1. 123项指标评估结论

在123项评估指标中，已经达标或者容易达标指标(即绿色)有30项，占评估指标的24%；黄色指标，即基础较好，经过努力能够达标指标(即黄色)有84个，占评估指标的68%；基础较差，达标困难的指标(即红色)有9个，占评估指标的8%。

### 3.2.2. 17项目标评估结论

指标定量评估完成后，综合判断SDG目标状态。17项目标中，SDG目标10，SDG12两项为红色，SDG目标13，SDG16两项为绿色，其余13项指标为黄色。

SDG目标13，SDG16两项指标进展较好。在应对气候变化方面，中国坚持减缓与适应并重，主动控制碳排放，落实应对气候变化行动承诺，增强适应气候变化能力，深度参与全球气候治理，推动气候变化南南合作，为全球应对气候变化作出重要贡献；在创建和平，包容的社会方面，提出平安中国体系建设，持续依法打击各种违法犯罪，惩处腐败，推进法治政府建设，反腐败压倒性态势已经形成，法治政府建设取得明显成效。

SDG目标10，SDG12两项指标达标难度较大。在减少国家内部和国家之间的不平等方面，中国正在加快推进公共服务均等化进程，城乡居民收入稳定增长，城乡居民生活差距进一步缩小，但是中国的基尼系数仍然偏高，需要予以高度关注；在可持续消费和生产方面，虽然中国在积极推进绿色生产和绿色生活方式，中国的经济发展方式仍然粗放，万元GDP能耗，水耗，污

染物排放虽然下降较快，但是绝对数值仍然偏高，同时社会公众，企业的绿色消费，绿色生产意识也仍要需要进一步提升。

其他13项目标目前基础较好，经过努力预计可以达标。

(1) 在SDG目标1消除贫困方面，中国将落实可持续发展议程减贫目标与国家脱贫攻坚事业紧密结合，充分发挥制度优势，贯彻精准扶贫，精准脱贫基本方略，创新扶贫工作机制和模式，加大扶贫攻坚力度，预计2020年中国现行标准下农村贫困人口将全部实现脱贫。

(2) 在SDG目标2消除饥饿，实现粮食安全方面，中国多措并举积极发展农业生产，农村集体产权制度改革稳步推进，生态友好型农业进一步发展，目前温饱问题已基本解决，下一步需要继续提高粮食生产能力，消除营养不良现象，促进可持续农业发展。

(3) 在SDG目标3健康公平有持续发展方面，中国已提前实现部分健康领域可持续发展目标，中国孕产妇死亡率，5岁以下儿童死亡率，新生儿死亡率等指标已提前实现可持续发展目标中的相关目标，但随着人口老龄化与城镇化，卫生与健康形势依然严峻，需要深入推进卫生体制改革，推进艾滋病，结核病等传染病防治工作，提升基本公共卫生服务均等化水平，实现健康领域可持续发展目标。

(4) 在SDG目标4全民教育方面，中国已经形成层次完整，类别齐全的教育体系，2015年国家财政性教育经费支出占GDP 比例连续第四年保持在4%以上，教育普及率已达到中高收入国家平均水平，下一步需要推进城乡义务教育一体化改革，促进区域教育协调发展，进一步完善就业创业服务体系，推进特殊教育可持续发展。

(5) 在SDG目标5实现性别平等方面，虽然中国政府明确把男女平等作为一项基本国策，近些年不断促进性别平等和两性和谐发展，保障妇女和女童

合法权益，但是性别平等意识在中国尚未完全普及，重男轻女传统观念仍是影响妇女儿童地位和权利保护的重要因素，城乡，区域间妇女儿童发展水平不均衡，需要完善法律政策体系，提高女性参与决策与管理比例，推动全社会形成尊重妇女，保护儿童的良好氛围。

⑹ 在SDG目标6水和环境卫生方面，中国全面实行最严格水资源管理制度，积极落实水污染防治行动计划，农村地区居民饮水安全问题得到基本解决，但是随着工业化，城镇化深入发展，中国水污染，水资源短缺，水土流失等问题突出，需要深入推动水质改善和水资源保护工作，促进水资源可持续开发利用。

⑺ 在SDG目标7可持续能源方面，中国能源结构调整和清洁化步伐加快，节能减排成效显著，能获得电力的人口比例已达到100%，中国已实现认人享有电力目标，全部可再生能源年利用量达到5.2 亿吨标准煤，成为全球最大可再生能源生产国，下一步需要进一步优化能源供给结构，提高能源利用效率，建设清洁低碳，安全高效的现代能源体系，推进能源可持续发展目标。

⑻ 在SDG目标8经济增长和就业方面，中国经济保持着中高速增长，经济转型升级加快，就业创业工作成效显著，随着经济发展进入新常态，中国就业总量压力依然存在。

⑼ 在SDG目标9基础设施和工业化方面，基础设施进一步加强，交通基础设施网络总里程突破500 万公里，建成全球最大的4G 网络，同时工业资源综合利用水平大幅提升， 创新支撑供给侧结构性改革取得初步成效。 下一步需要加强困地区基础设施建设，推动传统产业改造升级。

⑽ 在SDG目标11可持续城市建设方面，中国积极推进新型城镇化，城乡绿化和气候适应型城市建设，中，低收入人群居住条件进一步改善，人均负面环境影响进一步下降，城镇可持续发展和抵御灾害的能力进一步增强。

下一步需要继续完善住房保障体系，满足城乡低收入人群的居住需求，继续加强绿色建材，装配式建筑等技术创新，标准以及人才队伍建设。

(11) 在SDG目标14保护和可持续利用海洋和海洋资源方面，海洋环境保护和海洋资源开发利用能力进一步提升，各类海洋污染预防和治理得到加强，但夏季呈富营养化状态海域面积波动增加趋势，还需大力推进富营养化海域治理工作。

(12) 在SDG目标15生态系统保护方面，各类自然生态系统稳定和生态服务功能进一步提升，生物多样性得到有效维护，但生态供给与社会需求仍存在较大差距，森林覆盖率亟待提高。

(13) 在SDG目标17可持续发展全球伙伴关系方面，大力推进“一带一路”国际合作，加大对其他发展中国家特别是最不发达国家的援助力度，为在区域和全球层面落实可持续发展议程作出积极贡献。

表3-2. 中国可持续发展目标现状评估结果

| 序号 | 总体目标 | 得分 | 指示板颜色 |
|---|---|---|---|
| 目标1 | 在全世界消除一切形式的贫困 | 1.7 | |
| 目标2 | 消除饥饿，实现粮食安全，改善营养状况和促进可持续农业 | 1.9 | |
| 目标3 | 确保健康的生活方式，促进各年龄段人群的福祉 | 1.5 | |
| 目标4 | 确保包容和公平的优质教育，让全民终身享有学习机会 | 1.9 | |
| 目标5 | 实现性别平等，增强所有妇女和女童的权能 | 2.0 | |
| 目标6 | 为所有人提供水和环境卫生并对其进行可持续管理 | 1.8 | |
| 目标7 | 确保人人获得负担得起的，可靠和可持续的现代能源 | 1.5 | |
| 目标8 | 促进持久，包容和可持续的经济增长，促进充分的生产性就业和人人获得体面工作 | 1.9 | |
| 目标9 | 建造具备抵御灾害能力的基础设施，促进具有包容性的可持续工业化，推动创新 | 1.8 | |
| 目标10 | 减少国家内部和国家之间的不平等 | 2.5 | |
| 目标11 | 建设包容，安全，有抵御灾害能力和可持续的城市和人类住区 | 1.8 | |
| 目标12 | 采用可持续的消费和生产模式(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 2.5 | |
| 目标13 | 采取紧急行动应对气候变化及其影响 | 1.0 | |

| 序号 | 总体目标 | 得分 | 指示板颜色 |
|---|---|---|---|
| 目标14 | 保护和可持续利用海洋和海洋资源以促进可持续发展 | 2.0 | |
| 目标15 | 保护, 恢复和促进可持续利用陆地生态系统, 可持续管理森林, 防治荒漠化, 制止和扭转土地退化, 遏制生物多样性的丧失 | 2.3 | |
| 目标16 | 创建和平, 包容的社会以促进可持续发展, 让所有人都能诉诸司法, 在各级建立有效, 负责和包容的机构 | 1 | |
| 目标17 | 加强执行手段, 重振可持续发展全球伙伴关系 | 2.1 | |

各指标评估结果用颜色展示，红色表示基础较差，达标困难；绿色表示已经达标或者达标容易；黄色接近进展顺利，通过努力可以达标(评估结果见附件)。为了引起国家对亟待解决的可持续发展问题的重视，我们在综合评估17项SDG目标时，采用赋予“红色”指标3分，“黄色”指标2分，“绿色”指标1分的方法，然后计算其算术平均值，靠近3分的定义为“红色”，靠近2分的定义为“黄色”，靠近2分定义为“绿色”。

## 3.3. 评估建议

### 3.3.1. 尽快研究建立中国本土化可持续发展指标体系

本研究表明，建立中国本土化的SDGs指标体系是可行的，但是需要进一步完善指标方法学，指标设定，指标目标值的设定等关键问题。在建立可量化，可监测的指标体系基础上，尽快启动国家SDGs实施进展指标监测与评估报告，可由管理部门来主导编制，也可采取第三方评估方式，不仅宣传中国落实SGDs的创新努力和工作成果， 也积极参与国际和区域层面的SDGs实施进展评估工作。此外，进一步加强监测与统计能力建设，整合数据资源，建立合理的数据交换与共享机制，加强监测人员培训，考核等能力建设，加强统计能力，加快大数据平台建设，以便能获得及时，可靠的优质分类数据。

### 3.3.2. 加快建立有效的SDGs推进实施机制

将17项可持续发展目标和169个具体目标纳入国家发展总体规划以及专项规划，特别是把一些重要指标与专项规划的指标进行统筹和衔接，作为约束性指标。建立完善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的体制保障，既要加强横向的跨领域，跨部门协调，又要确保政策纵向落地，形成“中央-地方-基层”的有效落实机制,推动建立落实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为落实工作积累经验。落实2030 年可持续发展议程将是一项长期，艰巨的任务，针对短板领域和短板指标，要不断完善风险应对机制，加强风险防控能力建设，确保每项目标和指标都能按时达标。

### 3.3.3. 加强SDGs落实的国际交流与合作

继续加强与欧盟，德国等联系，通过互访，研讨会议等不同形式，加强沟通交流，积极引进学习国际先进经验。结合SDGs深入推进“一带一路”，南南合作等重点工作。通过不同途径加强国际交流，展示中国在SDGs方面的实施进展。

## 4. SDG2030实施区域合作情况

中国重视并积极推动双边和多边国际合作，深化与各方的多渠道，多层次和多样化的交流，全面兑现可持续发展领域对国际社会的相关承诺，认真履行参加的各类国际条约，承担了与自身能力相符合的责任与义务，为推动全球可持续发展作出了积极贡献。

## 4.1. 加强与发展中国家的合作

### 4.1.1.通过减免关税，债务和提供经济技术援助支持发展中国家减贫

发展经济，消除贫困是绝大多数发展中国家面临的首要任务。中国坚持通过减免关税等多种途径，为发展中国家对华出口各类产品创造条件。近年来，为帮助发展中国家应对国际金融危机，已向非洲国家提供100亿美元的优惠贷款；承诺向包括老挝，柬埔寨，缅甸等最不发达国家在内的东盟国家提供150亿美元信贷支持，支持了该地区多个基础设施等项目建设；同墨西哥，阿根廷，委内瑞拉，哥伦比亚等拉美国家签署了《减贫合作谅解备忘录》，共同推动消除贫困工作。此外，通过向世界银行国际开发协会，亚洲开发银行，国际农发基金等机构落实或追加捐款，在联合国和有关国际机构中设立专项发展基金，推进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金砖国家新开发银行建设，成立中国—中东欧"16+1"金融控股公司等一系列举措， 为发展中国家发展提供项目融资支持。截止2016年底，中国减贫与区域合作基金支持了亚太地区85个基础设施，农业，能源等领域项目和培训交流活动。世界银行中国基金批准实施17个涵盖能源，农业，教育，水利，卫生等领域项目。亚投行为7个亚洲发展中国家的9个项目提供17亿美元贷款。向非洲国家提供总额600亿美元的资金支持，推进实施"十大合作计划"。

### 4.1.2. 扩大向发展中国家提供的国际合作和能力建设支持

2015年9月，习近平宣布，为帮助发展中国家发展经济，改善民生，未来5年中国将向发展中国家提供"6个100"项目支持，包括100个减贫项目，100个农业合作项目，100个促贸援助项目，100个生态保护和应对气候变化项目，

100所医院和诊所，100所学校和职业培训中心。中国将向发展中国家提供12万个来华培训和15万个奖学金名额，为发展中国家培养50万名职业技术人员。中国将设立南南合作与发展学院，并向世界卫生组织提供200万美元的现汇援助。在坎昆，德班以及多哈举办的联合国气候变化大会上，中国在分享国内节能减排经验的同时，承诺对最不发达国家，小岛屿国家及非洲国家加大环保领域的援助投入，帮助其发展清洁能源，提高应对气候变化的能力。中国在清洁能源，环境保护，防涝抗旱，水资源利用，森林可持续发展，水土保持，气象信息服务等领域，积极开展与其他发展中国家的合作。

### 4.1.3. 帮助发展中国家培训相关官员和技术人员

我国政府帮助发展中国家培训相关官员和技术人员。为应对气候变化，举办气候变化与绿色低碳发展研修班，继续为其他发展中国家应对气候变化提供力所能及的帮助与支持，包括适应气候变化基础设施，适应气候变化技术推广，节能和可再生能源产品技术推广应用以及能力建设，促进推进节能减排，增加森林蓄积量，发展低排放的能源，工业，建筑，交通体系等。在联合国，G20等框架下，帮助其他发展中国家加强税收，统计等能力建设，推动税收征管论坛为发展中国家实施技术援助。2016年，中国通过举办研修班，为34个发展中国家的近129名税务官员提高税务征管和纳税服务能力。中国还通过基础设施建设，技术援助，人员培训等方式，帮助其他发展中国家提高符合自身国情的环境友好型技术和信息通信技术的应用水平和普及率。

### 4.1.4. 落实重大务实举措，帮助其他发展中国家实现共同发展

2015年9月，习近平主席在出席联合国成立70 周年系列峰会期间宣布设

立中国—联合国和平与发展基金，南南合作援助基金，成立国际发展知识中心，南南合作与发展学院，免除最不发达国家，内陆发展中国家，小岛屿发展中国家截至2015 年底到期未还的政府间无息贷款债务等一系列重大举措，相关落实工作取得积极成效。2016年，中国—联合国和平与发展基金正式投入运行，首批13 个项目中的8个项目为其他发展中国家在减贫，基础设施，科技创新，社会等领域落实可持续发展目标提供支持。同年，南南合作援助基金启动运行，重点帮助其他发展中国家发展经济，改善民生，应对粮食安全，难民等挑战，推动落实可持续发展议程。2017年5月，习近平主席宣布为南南合作援助基金增资10亿美元，为广大发展中国家实现可

持续发展目标注入新动力。2016年4月，南南合作与发展学院在北京大学揭牌成立，通过提供学历学位教育名额，分享发展经验，增强有关国家落实可持续发展目标的能力。2017年8月，国际发展知识中心正式揭牌成立，积极开展适合各国国情的发展实践和理论研究，深化各国发展领域研究成果交流。此外，免除相关特殊处境国家政府间无息贷款债务等工作也在有序推进并取得积极进展。

## 4.2. 加强与发达国家的合作

### 4.2.1. 加强可再生能源和节能领域交流与合作

2005年，中国同欧盟签署《中国－欧盟能源交通战略对话谅解备忘录》；2006年，中英两国签署《关于成立中英能源工作组的谅解备忘录》；2009年，中美签署《关于建立中美可再生能源伙伴关系的合作备忘录》；2008年，中日两国签署《关于继续加强节能环保领域合作的备忘录》，在节能人才研修，节能环保商务示范项目等方面开展了卓有成效的合作。此外，与美国，加拿大，欧

盟，德国，英国，法国，新加坡等多个国家的有关部门签署了建筑节能，绿色建筑和低碳生态城市方面的合作谅解备忘录，并开展了多项合作项目。

#### 4.2.2. 加强环境保护领域合作

2001年，中欧领导人会晤同意建立中欧环境政策部长级对话机制，迄今已举办过四次对话会议。2005年，中国与英国签署《中英可持续发展高级别对话机制联合声明》。2006年，成立中俄总理定期会晤委员会环保分委会，迄今已召开六次会议。2007年，中日两国政府先后签署了《关于进一步加强环境保护的联合声明》和《关于推动环境能源领域合作的联合公报》，推进了双方在环境保护政策管理，技术交流，能力建设等方面的深入合作。2008年，中国与美国举行第四次战略经济对话，签订《关于能源和环境十年合作的框架文件》。多年来，中国还充分利用中国环境与发展国际合作委员会这一平台，研究中国环发领域的重大问题，交流，传播国际成功经验。

### 4.3. 充分发挥国际合作平台的作用

#### 4.3.1. 积极参与以联合国为主导的国际机构可持续发展活动

中国领导人多次出席相关重大国际会议，与世界各国一起共同探讨，制定关于可持续发展问题的国际战略与政策，推动可持续发展事业取得积极进展。中国积极参与联合国大会有关可持续发展问题各项议题的审议，与77国集团联合提出有关可持续发展问题的决议近50项。 中国一直积极参与联合国可持续发展委员会相关工作， 与其他成员国一道认真审议可持续发展问题各领域的进展情况，为执行可持续发展问题历次首脑会议的决定献计献策。

### 4.3.2. 建成了一批具有示范意义的合作项目

十年来，中国积极利用世界银行，亚洲开发银行，欧洲投资银行，国际农发基金等金融组织贷款，支持建成了涉及农业，林业，水土，能源，环境，城建，防灾减灾等领域的一大批示范项目，有力推动了可持续发展。2001至2010年，全球环境基金共批准了77个对华项目，承诺赠款5.65亿美元，提高了中国履行国际环境公约的能力。此外，中国政府还与联合国开发计划署，联合国粮农组织，自然保护基金会等相关机构开展合作，获得赠款资金2000多万美元。

### 4.3.3. 逐步深化科技合作

2006年以来，中国先后启动了中医药国际科技合作计划，可再生能源与新能源国际科技合作计划，人类基因组计划，“第三极环境”国际计划，国际空间天气子午圈计划等由中国主导的科技计划。中国科学界积极参与了地球科学系统联盟(ESSP)下国家全球环境变化

人文因素计划(IHDP)，世界气候研究计划(WCRP)等多个计划，以及政府间气候变化专门委员会的历次评估活动。此外，中国已经参加了350多个国际科技组织，目前有200多位中国科学家在其中任职，为国际科技事业发展发挥了重要作用。

### 4.3.4. 与国际组织合作帮助发展中国家提高可持续发展能力

中国政府和世行合作举办了上海全球扶贫大会和“中非共享发展经验高级别研讨会”，推动了国际社会对全球扶贫理念和实践的再认识，促进了中国与其他发展中国家，特别是非洲国家减贫与发展经验的交流。中国向联

合国粮农组织捐赠3 000万美元设立特别信托基金，重点支持在联合国粮农组织“粮食安全特别计划”框架下的“南南合作”项目，向发展中国家提供农业技术援助，帮助发展中国家提高粮食安全水平；中国政府出资与联合国环境规划署合作在刚果(布)建立联合国环境规划署中非环境中心，协助提高非洲国家的环境保护能力；与亚行合作成功举办了“中国－亚行知识共享平台”研讨会，开展南南知识合作，推动亚太地区发展经验共享；与国际农发基金联合举办了系列南南合作研讨班，介绍中国农村发展与扶贫开发的经验，与广大发展中国家分享农村扶贫和发展的理念及实践。在联合国工发组织和国际小水电中心共同倡导的“点亮非洲”项目中，中国政府先后派出多批专家赴非洲开展了咨询，培训，农村用电规划等工作。与联合国工发组织成功举办了“发展中国家工业节能减排研讨班”，介绍了中国在工业节能减排领域取得的成就，为推动南南合作和区域经济合作注入新的活力。

### 4.3.5. 积极举办相关国际会议推动可持续发展进程

近年来，中国先后承办全球扶贫大会，联合国气候大会，国际水土保持大会，国际灌排大会，世界水大会，世界湖泊大会，联合国保护海洋环境防止陆源污染政府间审查会，第四届世界城市论坛等，为实现联合国减贫，水与卫生的千年发展目标作出了积极贡献。中国政府作为国际竹藤组织东道国，积极支持召开了一系列相关国际会议并实施了一批项目，帮助发展中成员国开发利用竹藤资源，消除贫困。此外，中国与联合国国际减灾战略共同建立了国际减轻旱灾风险中心，成立了“亚太森林恢复与可持续管理网络”，并组织召开会议推进减灾工作。2010年，中国上海成功举办了世博会，上海世博会执行委员会与联合国，国际展览局合作编撰了《上海手册：21世纪可

持续城市指南》，为发展中国家城市的可持续发展提供了可供借鉴的案例和政策指导。2011年，中国与联合国人道主义事务协调办公室在上海成功举办联合国亚太地区人道主义伙伴关系会议，促进了中国与其他国家及国际组织在灾害管理方面的经验交流，有助于我国减灾管理能力的提升。

## 4.4. 认真履行环发领域国际公约

### 4.4.1. 推进防治荒漠化公约进程

中国制定并实施了国家履约行动方案，推动公约履约审查委员会(CRIC)的建立，积极参加公约“十年战略”制定和履约影响指标全球示范工作。中国还为亚非国家组织了20多期研讨和培训班，分享中国的治沙经验。中国实施了《全国防沙治沙规划》，建立了以中央政府为主，地方政府，企业和民间组织等多方筹资的综合投资机制，加大了荒漠化治理力度，提高了荒漠化防治科技支撑和监测预警能力。

### 4.4.2. 增强生物多样性公约履约能力

中国政府发布了一系列生物多样性保护相关法律和行政法规，编制和实施了一系列规划和计划。成立了中国履行《生物多样性公约》工作协调组和生物物种资源保护部际联席会议，建立了生物多样性和生物安全信息交换机制，初步形成了生物多样性保护和履约国家协调机制。一些相关部门和省级政府也成立了相关机构和协调机制。此外，中国与相关国际组织和非政府组织在生物多样性保护政策与技术交流方面开展了一系列合作项目。

### 4.4.3. 认真履行《气候变化公约》

中国高度重视气候变化问题，坚持公平和“共同但有区别的责任”原则，认真履行《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和《京都议定书》，努力控制温室气体排放，不断提高适应气候变化能力，积极建设性地参与国际社会应对气候变化进程，为推动建立公平合理的应对气候变化国际制度和谈判进程作出了重要贡献。中国积极拓展气候变化领域的国际合作，与联合国开发计划署，联合国环境规划署，世界银行等合作，组织实施了涉及气候变化的科学问题，减缓和适应，应对政策和措施等方面的一系列项目，与多个国家建立了气候变化对话与交流机制，签署了加强应对气候变化的合作协议。中国政府还不断加强与发展中国家之间的合作，通过技术援助，人员培训，能力建设等多种方式，支持其他发展中国家提高应对气候变化的能力。另外，根据《京都议定书》和公约缔约方会议有关决定，中国积极开展清洁发展机制(CDM)项目合作，颁布实施并修订了《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管理办法》。截至2010年年底，中国已批准了3 241个CDM项目，其中有1 718个项目在联合国清洁发展机制执行理事会成功注册，已注册项目预计经核证的减排量年签发量约3.51亿吨二氧化碳当量，占全球总量的63.78%，为全球温室气体减排作出了巨大贡献。

### 4.4.4. 积极推进《巴塞尔公约》履约工作

中国严格履行《关于控制危险废物越境转移及其处理的巴塞尔公约》各项规定，积极推进国内的固体废物管理工作并取得积极进展。出台《危险废物出口核准管理办法》，实现了公约关于预先知情同意程序相关要求的国内法律化和危险废物出口活动的全过程监控；不断加强履约国际合作与信息交换

共享，联合开展执法行动，有力打击了国际间废物非法越境转移活动；不断加强国内危险废物无害化处置能力建设，鼓励危险废物就近处置，控制危险废物越境转移。

### 4.5. 推进“一带一路”沿线国家可持续发展合作

“一带一路”倡议与可持续发展议程高度契合，都以合作为目标，以可持续发展为己任。中国积极推动“一带一路”国际合作，加强与有关国家和国际组织的政策协调和发展战略对接，深化基础设施互联互通，产业投资，生态环保，金融，人文交流等重点领域务实合作，取得一系列重要早期收获。截至2017年 7月，60 多个国家和国际组织与中方签署合作文件，经济走廊建设取得积极进展，互联互通网络逐步成型，产能合作加快推进，贸易投资大幅增长，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正式运营，丝路基金加快具体项目投资，一批双多边大项目合作稳步推进。借助“一带一路”建设，为发展中国家提供基础设施建设的合作平台，帮助与支持发展中国家基础设施建设的互动合作，提高基础设施建设水平。2017年5月，中国成功举办“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宣布一系列支持沿线国家可持续发展的务实举措，为可持续发展议程全球落实注入强劲动力。

### 4.6. 取得成就总结

在扎实推进本国落实工作的同时，中国积极倡导建立更加平等均衡的全球发展伙伴关系，形成以联合国为核心，南北合作为主渠道，南南合作为重要补充的国际发展合作格局，构建开放型世界经济，加强各国宏观经济协调，为发展中国家发展创造良好国际环境。中国大力推进“一带一路”国际合作，实

施一系列推动国际发展合作的重大务实举措，加大对其他发展中国家特别是最不发达国家的援助力度，为在区域和全球层面落实可持续发展议程作出积极贡献。

构建广泛的发展伙伴关系，推动形成可持续发展合力。在坚持“共同但有区别责任”，“南北合作是主渠道，南南合作是补充”等原则基础上，中国以积极开放的姿态开展国际发展合作。举办南南合作圆桌会，可持续发展目标座谈会，推动二十国集团杭州峰会通过《二十国集团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行动计划》，以金砖国家合作为重要平台，加强发展中国家和新兴市场国家发展合作，深化落实可持续发展议程的全球伙伴关系。与美国等发达国家举行发展合作磋商，凝聚发展合作共识。与联合国等国际机构和部分发达援助国开展三方合作，调动各类资源促进可持续发展议程全球落实。此外，中国积极构建国内落实可持续发展议程伙伴关系。建立由43 家政府部门组成的落实可持续发展议程部际协调机制，在各政府部门间形成落实合力。推动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以下简称“示范区”)创建工作，为国内其他地方和其他国家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可复制，可推广的创新发展经验。

## 5. 加强SDG2030实施的地区合作的建议

### 5.1. 机遇和挑战

#### 5.1.1. 发展机遇

可持续发展议程为国际发展合作带来难得机遇。同时，世界经济复苏势头脆弱，贸易和投资增长乏力，保护主义和反全球化思潮涌动，多边贸易体制受到冲击，发达国家参与国际发展合作的意愿和投入下降，重振可持续发展

全球伙伴关系面临重大挑战。 作为一个负责任的发展中大国， 中国将继续致力于在发展筹资，技术，能力建设，贸易等方面加强国际发展合作，推动建立更加平等均衡的可持续发展全球伙伴关系。

从国际层面看，和平与发展仍然是时代的主题，各国相互联系，相互依存日益加深， 休戚与共的人类命运共同体意识不断增强。 世界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孕育兴起，一大批引领性，颠覆性新技术，新工具，新材料的涌现， 有力推动着新经济成长和传统产业升级。 南北合作和南南合作进入新阶段，以中国等新兴市场国家为代表的发展中国家整体实力不断增强，对国际事务的影响力显著提升，全面参与全球治理和国际发展合作面临新机遇。

从国内层面看，中国政治稳定，国家治理能力不断提升。“十三五”规划中明确提出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和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为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推进可持续发展提供了理论指引。中国经济保持中高速增长，新型工业化，信息化，城镇化，农业现代化深入发展，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打下扎实基础。中国着力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逐步加大重点领域和关键环节市场化改革力度，深化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由此带来的改革红利以及自主创新红利将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强大动力。 中国政府已将可持续发展议程与国家中长期发展规划有效对接，建立了国内落实工作的协调机制，将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有力的制度保障。

### 5.1.2. 面临挑战

挑战一：全球可持续发展面临诸多长期性压力

20年来，世界人口增长15亿多，经济总量增长近两倍。与此同时，全球尚

有超过十亿人口没有摆脱贫困，近三分之二的国家没有完成工业化，现代化进程，生存与发展的刚性需求对资源环境的压力继续加大，因此而引发的粮食安全，能源资源安全，环境风险，气候变化，公共卫生安全，重大自然灾害等全球性问题日益突出。发展中国家尤其最不发达国家的能力缺乏，发达国家兑现自身承诺意愿的下降，可持续发展领域的全球性执行力不足等因素进一步加剧了这些长期性压力。

挑战二：公平性问题依然是全球可持续发展的巨大挑战

全球性经济快速发展所积累的巨大财富，并未有效解决人类的公平性问题。发达国家与最贫穷国家的差距继续扩大，广大发展中国家面临资金严重不足，技术手段缺乏，能力建设薄弱等挑战，实现可持续发展目标依然困难重重。与此同时，各国内部均不同程度地面临着贫富差距拉大所带来的社会问题。总体上看，过去20年，人均收入差距扩大的趋势没有改变，资源占用不均衡的状况没有改变，贸易规则不公平的格局没有改变。公平性问题已然是地区冲突，生态环境破坏，社会动荡等问题的根源，依然是实现人类共同发展目标的巨大挑战。

挑战三：中国仍然面临巨大的发展压力

除东部沿海地区外，中国大部分区域还处在工业化，城镇化中期乃至初期阶段。贫困人口规模大，按照2011年中国制定的新的农村贫困标准(农村居民年人均纯收入2 300元)，扶贫对象尚有1.22亿，且大多生活在自然条件恶劣的区域，消除贫困任务极为艰巨。庞大的人口基数和增长的惯性作用，使中国人口总量在相当长一段时间内仍将保持增长态势。同时，中国的劳动力供需结构性矛盾依然突出，转岗就业，青年就业，农村转移就业等压力

较大。老龄人口比重迅速上升，是世界上唯一老年人口超过1亿的国家。覆盖全社会的社会保障体系刚刚建立，与其他主要发展中大国相比，保障水平还较低。

挑战四：自然生态环境的脆弱性对中国可持续发展构成巨大压力

中国的地理地质环境复杂多样，不适合人类居住的国土比重偏高，自然生态条件相对恶劣。占52%的国土面积是干旱，半干旱地区，90%的可利用天然草原存在不同程度的退化，沙化，盐碱化等中度以上明显退化的草原面积约占半数。极度脆弱的自然环境给中国生态环境建设与保护带来巨大的挑战。与此同时，中国是世界上自然灾害最严重的国家之一，灾害种类多，分布地域广，发生频率高，对人民生命财产安全和经济社会发展构成重大威胁。

挑战五：资源刚性约束已然成为中国可持续发展的巨大挑战

中国人均淡水，耕地，森林资源占有量分别为世界平均水平的28%，40%和25%，石油，铁矿石，铜等重要矿产资源的人均可采储量，分别为世界人均水平的7.7%，17%，17%。而且，大部分自然资源，能源主要分布在地理，生态环境恶劣的西部地区，开采，利用与保护的成本高。中国经济依然处于重化工业比重偏高的发展阶段，经济发展短期内难以摆脱对资源环境的依赖。经济发展与社会进步持续面临节约资源，保护环境，节能减排，技术进步以及管理创新等严格要求的巨大挑战。

挑战六：中国的经济社会结构性问题突出

中国城镇化进程明显滞后于工业化进程，人口流动与转移带来的社会管理压力大。城乡发展不平衡，农村生产生活条件和公共服务水平远远落后于城

市。区域间基本公共服务水平发展差距较大，贫困地区发展落后问题突出。三次产业结构不甚合理，内需与外需，投资与消费结构失衡，经济增长过于依赖投资和出口拉动，国内消费需求明显不足，经济结构调整的任务十分艰巨。与此同时，中国经济进入“新常态”，面临经济增速换挡，结构调整，新旧动能转换等多重挑战，保持经济持续，稳定，健康增长仍有不小压力，在脱贫攻坚，解决城乡和区域发展不平衡，补齐生态环境短板等方面有大量工作要做。如何消除贫困，改善民生，化解社会矛盾，实现共同富裕，完善国家治理体系，提高治理能力，以及实现各地区，各层次，各领域间的协同发展仍是中国实现可持续发展议程面临的最大挑战。

## 5.2. 区域和次区域合作的潜在领域

### 5.2.1. 重点领域

2030年可持续发展议程最大程度兼顾了国际社会的共同利益，适用于所有国家。中国将与国际社会一道，不断深化国际发展合作，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保障。重点包括以下四个方面:

一是承认自然，文化，国情多样性，尊重各国走独立的发展道路的权利，推动各国政府，社会组织以及各利益攸关方在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中加强交流互鉴，取长补短，根据“共同但有区别的责任”原则推动可持续发展目标的落实。

二是推动建立更加平等均衡的全球发展伙伴关系。坚持南北合作主渠道，推动发达国家及时，足额履行官方发展援助承诺，加大对发展中国家的支持力度。充分发挥技术促进机制的作用，包括采取建立技术银行等方式，帮助发展中国家科技开发以及向其转让，传播和推广环境友好型的技术。

三是进一步积极参与南南合作。积极履行国际责任，为全球发展贡献更多公共产品，推动南南合作援助基金，中国—联合国和平与发展基金，应对气候变化南南合作基金，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金砖国家新开发银行等为帮助其他发展中国家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发挥更大作用。 继续推进“一带一路”建设和国际产能合作，实现优势互补。

四是稳妥开展三方合作。在尊重受援国意愿的前提下，与其他多双边援助方一道稳妥推进优势互补的三方合作，丰富援助方式，提升援助效果。鼓励私营部门，民间社会，慈善团体等利益攸关方发挥更大作用。

### 5.2.2. 合作机制

区域可持续发展合作机制的构建，应根据各国国际合作领域进程确定不同的阶段性目标。

第一，构建组织协调机制。构建高效，务实的组织协调机制，是区域和次区域可持续发展合作框架的核心机制，也是其他子机制建立的前提和基础。区域各国政府应共同倡导并建立具有权威性的区域和次区域可持续发展合作委员会。该委员会设立若干专业分委员会，如信息，能源，环境，人口，科技，经贸和资源等分委员会；分委员会下设若干项目推进组，对区域内可持续发展合作项目进行推动和监督。 在尊重现有双边或多边合作现状的前提下，加强对其积极引导，协调与整合，朝着有利于形成多边合作机制的方向发展。

第二，构建资金筹措机制。资金问题是制约区域合作向纵深发展的主要因素之一。在这方面，应本着“共同投资，共同受益”的原则，设立区域可持续发展合作基金。 该基金可考虑以下来源： 各中央财政拨款； 各成员国的认

缴；国际组织的商业贷款；专门机构负责项目融资；条件成熟时，建立股份制的区域地区开发银行。

第三，构建信息传播机制。加强信息沟通，是推进区域可持续发展合作机制建立的重要载体。在加强信息沟通过程中，要充分利用现代通讯手段，做到快捷，准确，全面。比如，尝试建立大型区域可持续合作专业网站，为区域资源，环境，人口，经济合作建立有效的对接渠道；建立区域基础数据库，数据翔实准确，为重大项目决策和研究咨询提供基本情况；构建可持续发展合作的报纸，广播，电视等多媒体立体宣传网络。

第四，构建人才交流机制。语言的差异，人才交流渠道不畅，复合型人才的短缺是区域可持续发展合作中的直接障碍因素。为此，应为专业技术人才流动提供便利。可建立区域合作国际大学，加强本地区双边或多边形式的合作办学，为本区域内各国人才流动创造宽松环境，加强培养适合区情的复合型人才。构建便捷，高效的人才合作交流机制，既有利于区域内各国加强沟通和了解，减少分歧，又有利于加快推进区域可持续发展合作的进程。

第五，构建咨询服务机制。权威，高效，务实的咨询服务机制，可以加快人才，资金，技术，信息等资源的区域集聚与扩散，推动区域可持续发展合作向纵深发展。在咨询服务机构建设的过程中，应重点考虑其研究功能。组建区域可持续发展合作研究中心，对区域性重大合作项目做出权威性的可行性研究成果。同时，通过合作做出高水平的可行性研究，既可为区域可持续发展合作委员会决策提供咨询服务或建议，又可为各国的自身发展提供咨询服务。

第六，构建法律约束机制。建立区域多边法律约束机制，是加强区域合作的迫切需要。在某些领域，多边法律约束机制可以起到加快推进合作的作用。特别是在科技，能源，环保，信息，通讯等领域，具有很强的外部性，加强多

边法律约束尤为重要。各领域多边协定的签订，对于化解矛盾，增加共识，深化合作将起到积极推动作用。为此，要在多边合作已具雏形的领域加快签署多边合作协定，推动具体领域的合作向纵深发展。

## 5.3. 相关政策建议

### 5.3.1. 大力推进“一带一路”国际合作，为落实可持续发展议程提供强大动力

发挥“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平台作用，本着共商，共建，共享原则，加强各国之间政策协调和发展战略对接，促进基础设施互联互通，增进贸易，投融资和人文等领域交流合作，共建和平之路，繁荣之路，开放之路，创新之路，文明之路，为可持续发展创造良好软硬件环境。发挥丝路基金等投融资机制作用，创新投融资模式，挖掘政策性，开放性金融潜力，与多边开发银行合作建立多边开发融资合作中心，研究多边开发融资政策，探索建立稳定，多元，可持续的融资机制，为“一带一路”各领域合作提供融资支持。加强同亚太经合组织，东盟，非盟，欧亚经济联盟，欧盟，拉共体区域发展规划对接，推动实现包容，联动发展，共同探索落实可持续发展议程的新方式，新途径。

### 5.3.2. 深度参与国际发展合作特别是深化南南合作，为其他发展中国家继续提供力所能及的支持

充分利用中国—联合国和平与发展基金“可持续发展议程子基金”，南南合作援助基金，气候变化南南合作基金等平台，在减贫，基础设施，农业，教育，卫生，气候变化等发展中国家最为关注的领域开展项目合作。充分利

用国际发展知识中心，南南合作与发展学院等，加强发展理念和实践等方面的经验交流。 推动中亚区域经济合作学院重点围绕基础设施互联互通和贸易便利化等领域为本地区发展中国家提供知识产品和能力建设。 建立国际税收政策研究中心，为向发展中国家提供技术援助和知识分享提供平台。积极推动G20 等框架下对发展中国家税收援助，提高发展中国家在国际税收规则中的话语权。

### 5.3.3. 加强贸易投资合作和宏观经济政策协调，促进国际发展环境优化

在二十国集团，世界贸易组织等多边机制下，推动各国加强宏观经济政策协调，完善全球经济治理，维护多边贸易体制，促进全球经济强劲，平衡，可持续，包容增长。继续扩大对最不发达国家的进口，使原产地优惠规则更简单，透明，有利于市场准入。让更多与中国建交的最不发达国家享受中国97%税目产品零关税待遇。 继续增加对最不发达国家投资， 力争2030 年达到120 亿美元。在共商共建共享原则基础上，同“一带一路”沿线国家发展互利共赢的经贸伙伴关系，促进同各相关国家贸易和投资便利化。

### 5.3.4. 深化发展伙伴关系，构建人类命运共同体

坚持南北合作主渠道地位，继续敦促发达国家履行官方发展援助承诺，同时适当提高对外援助规模和投入，稳妥推进三方合作，推动建立加强公共，公私和民间社会伙伴关系，为全球落实可持续发展目标提供助力。继续推进国家可持续发展议程创新示范区建设，在“十三五”期间打造10 个左右可复制，可推广的示范区，分享科技创新服务可持续发展经验，在精准扶贫，卫生，能源，生态环保等领域，贡献系统，成熟，有效的中国方案。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5095-3
978-89-322-5080-9(세트)